

2012 역사와교육학회·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동국대학교대외교류연구원  
추계 공동학술대회

# 동아시아 역사교과서 서술의 쟁점

## - 과거와 현재 -

**일 시** : 2012년 11월 10일(토) 13:00 ~ 18:10

**장 소** : 동국대학교 학림관(사범대학) 111호

**주 최** : 역사와교육학회·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후 원** : 동북아역사재단·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학술대회 일정

12:30~13:00 **등록**

13:00~13:05 **개회사 : 이상일 (역사와교육학회 회장, 국사편찬위원회)**

13:05~13:10 **축사 : 윤선태 (동국대 역사교육과 학과장)**

13:10~13:30 **기조발표 : 김정인 (춘천교대)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우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교육의 방향**

**1부 사회 : 조성운(경기대)**

**제1주제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서술의 변화**  
13:30~14:10 -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

**발표 : 임상선(동북아역사재단)                      토론 : 이춘복(중앙대)**

**제2주제 한국 '국사'교과서 전근대사에 나타난 일본 관련 서술의 변화**  
14:10~14:50 -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

**발표 : 서인원(동국대)                                      토론 : 남한호(경북대)**

**제3주제 한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중국 관련 서술의 변화**  
14:50~15:30 -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

**발표 : 송요후(동국대)                                      토론 : 최진열(경상대)**

15:30~15:40 **휴식**

**2부 사회 : 마석한(공주대)**

**제4주제 북한 역사교과서의 중국·일본 관련 서술의 변화**  
15:40~16:20 -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

**발표 : 권성아(공주교대)                                      토론 : 박재영(중앙대)**

**제5주제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서술의 변화**  
16:20~17:00 - 제일조선인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

**발표 : 김인덕(청암대)                                      토론 : 성주현(경기대)**

17:00~17:10 **휴식**

**사회 : 이찬희(한국교육개발원)**

17:10~18:10 **종합토론**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 목 차

기조발표 :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우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교육의 방향 .....	9
발표: 김정인(춘천교육대학교)	
제 1주제 :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서술의 변화 -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 .....	19
발표: 임상선(동북아역사재단)	
제 2주제 : 한국 '국사'교과서 전근대사에 나타난 일본 관련 서술의 변화 .....	41
-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 발표: 서인원(동국대학교)	
제 3주제 : 한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중국 관련 서술의 변화 -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 .....	53
발표: 송요후(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제 4주제 : 북한 역사교과서의 중국·일본 관련 서술의 변화 -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 .....	73
발표: 권성아(공주교육대학교)	
제 5주제 :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서술의 변화 - 재일조선인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 .....	103
발표: 김인덕(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아연구소)	



## **기조발표**

###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우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교육의 방향**

**발 표 자 : 김 정 인 (춘천교육대학교)**



#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 우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교육의 방향

김정인(춘천교육대학교)

## 1. 동아시아의 미래의 닷, 과거사 문제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서구인들은 ‘아시아의 화려한 귀환’이라 부르기도 한다. 1990년대 말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가 유럽의 산업혁명과 제국주의 시대 이전에 누렸던 세계 경제·금융 체계의 중심 지위를 회복했다는 평에서 나온 말이다. 그 귀환의 중심에 있는 한국·중국·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 간에는 최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반영하듯 1989년 APEC를 시작으로 1993년에 ASEAN지역안보포럼, 1997년에 ASEAN에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ASEAN+3, 2005년에 EAS(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이 결성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동아시아 경제·안보 등을 둘러싼 협력체 구상의 실현 과정은 매우 지난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상호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동아시아는 심각한 갈등 국면에 처해 있다. 한·중·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협력 및 관계 개선, 재난 대책 등의 강화’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3국 정상회담이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할 정도로 한층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또 하나의 동아시아 주체로 등장한 미국의 외교적·군사적 행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더욱 격화된 영토분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동아시아 3국간의 정치적 갈등에는 과거사 문제가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역사 갈등이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된 것에 비해 동아시아에서는 지금까지 미완의 과제로 남은 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는 무엇보다 가해 당사자인 일본의 책임이 크다. 사과와 배상·보상 문제까지 솔선하여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역사적 진실조차 부정하는 자세로 주변 아시아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 미래의 닷이 되어버린 역사 갈등의 해결 주체로 나선 이들은 이해타산에 밝은 정치인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염원하는 각국 시민들이다. 학자, 교사, 청소년, 법률가, 문화가, 여성 등이 나서 역사 인식을 공유하고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고 영토 분쟁에서 이성적 대응을 촉구하는 등 국제 연대부터 개인적 의사표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무분별한 충돌을 막고 동아시아의 과거가 닷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미래를 평화롭게 열어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 II. 동아시아 역사 갈등과 역사 화해의 현주소

고대 문명 형성기부터 오랜 역사 경험을 공유한 동아시아 3국간에는 상호 간 과거사를 둘러싼 역사 갈등이 존재한다. 한국과 일본은 고대사부터 제국주의-식민지의 지위에 놓였던 근대까지의 경험이 남긴 유산과 역사 인식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역사 갈등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에는 고·중세사인 고구려사·발해사를 둘러싼 역사 갈등이 존재한다. 중국과 일본 간의 역사 갈등을 상징하는 사건은 난징대학살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한일 간의 역사 갈등이 가장 포괄적이면서 치열하다. 갈등을 야기하는 사안을 꼽아보면, 우선 강제동원·일본군 위안부·원폭·B·C급 전범(야스쿠니신사)·사할린 억류·한인·재일조선인 등 식민과 전쟁의 유산으로 인한 피해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임나일본부·임진왜란·한일 강제병합 등 한일관계사와 이를 둘러싼 교과서 기술, 러일전쟁 과정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던 독도와 동해의 표기 등 역사 인식의 문제가 있다.<sup>1)</sup>

이 중 최근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는 일본군 위안부·강제동원·교과서 역사 왜곡·독도 문제 등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는 한일협정에 대한 인식 차이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일협정을 통해 청구권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보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제동원 문제도 모든 청구권이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1980년대부터 논란이 시작된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는 2001년 일본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만든 역사 왜곡 교과서가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과하면서 더욱 불거져 한국과 중국 등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독도 문제는 점점 영토 분쟁화 되어가는 동시에 일본이 예전과 달리 역사와 지리 관련 교과목을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어 더욱 첨예한 쟁점이 되어 가고 있다. 일본 문부성은 2008년과 2009년의 초·중·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가르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 고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39종을 살펴보면, 그 중 21종이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 갈등의 경우, 양국의 시민들이 직접 나서 해결을 위한 개인적인 혹은 조직적인 활동을 벌인 경험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적 공론화에 성공하며 20년 이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 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1992년 1월 처음 시작한 수요 시위는 2011년 12월에 1,000회를 맞았다.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응하는 단

1) , 국가 간 역사갈등 해결을 위한 역사정책 모색, 『역사비평』 100, 2012, 224쪽.

체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도 10년이 넘게 일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역사 왜곡 교과서 불채택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역사 갈등은 1980년대부터 고구려, 간도 문제 등이 표면화되면서 시작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동북공정 문제로 양국 간에 첨예한 역사 갈등이 발생했다. 2003년에 언론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 등을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보는 시각이 투영된 동북공정이 알려지자 한국인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고구려는 한군현 등의 중국 영토 안에서 건국되었고, 중국에 조공을 바친 고대 중국 소수 민족의 지방정권이며 발해는 말갈족이 건국한 국가로 당나라의 책봉을 받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중국학자들의 주장을 한국인들은 역사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sup>2)</sup> 그런데, 한·중 간의 역사 갈등은 정부 주도로 해결하고 대응하는 특징을 보였다. 한국 정부는 2004년 8월 중국 정부와 동북공정 문제를 정치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학술적으로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같은 해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고 2006년 9월에는 이를 동북아역사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동아시아 역사 갈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국내외에 표명했다.

중국과 일본 간의 역사 갈등은 난징대학살의 진실 여부를 둘러싼 공방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중국인이 난징대학살의 기억을 되살리며 주목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초에 있었던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논란 당시부터였다. 난징대학살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 우익의 주장에 분노한 중국인들은 난징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난징대학살을 연구하는 단체를 결성하기 시작했으며, 1985년에는 기념관을 건립했다. 이제 난징에서는 매년 12월 13일 10시 난징대학살 당시 죽은 자와 생존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사이렌이 울린다.<sup>3)</sup> 일본 우익은 지금도 일본 패전 후 도쿄에서 열린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은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한 초기 6주 동안 난징 및 난징 주변에서 살해된 주민과 포로가 20만 명이 넘었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날조라며 진실을 부정하고 있다. 2000년 1월 23일에는 일본 우익이 오사카에서 ‘난징대학살은 20세기 최대의 거짓말이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집회를 가져 중국인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에 맞서 지난 9월 18일 중국의 50여개 지역에 일어난 반일 시위 현장에서 ‘난징대학살을 기억하라’는 구호가 등장할 만큼 중국인들은 지금도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일본인들이 중국을 능멸한다며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 2006년 양국 정부 차원에서 발족했던 중일역사공동위원회도 난징대학살의 사망자 수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해산했다.

한·일, 중·일 간에 얽힌 역사 갈등의 유발자는 대개 일본이다.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키거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등의 기준안을 발표할 때, 혹은 일본 정치인들이 정쟁의 도구로 역사 갈등을 부추길 때 동아시아는 격랑에 휩싸이곤 한다. 이렇게 동아시아 미래에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내는 것, 즉 갈등을 넘어 화해로 가는 디딤돌을 놓은 것은 바로 동아시아의 시민이었다. 정부 차원에서 한·일,

2) , 한·중 역사갈등 줄이기-동북공정과 중국의 역사교과서, 『역사문제연구』 17, 2007, 30쪽.

3)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한중일의 역사인식과 일본교과서』, 역사비평사, 2002, 88쪽.

중일이 마련한 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역사인식의 평행성만을 확인한 채 막을 내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아시아 시민이 역사 화해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먼저 만들어낸 공동의 작품은 2000년에 각국의 전쟁피해자와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법률가, 학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여성국제전범법정이었다. 여성국제전범법정은 2001년 일본 정부와 쇼와 천황을 포함한 10명의 일본 군부 지도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누락했던 도쿄재판을 재구성했다. 역사 화해를 위한 국제 연대의 일환이었던 여성국제전범법정을 계기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7년의 미국 하원 의회와 유럽연합 의회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 의회가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sup>4)</sup>

동아시아의 역사 화해를 위한 국제 연대의 모색은 역사 인식의 공유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동 역사 교재의 발간으로 이어졌다. 한·일의 학자와 교사들이 함께 만든 『조선통신사』(2005.4),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근현대사』(2005.10), 『마주보는 한일사』(2006.8), 『한일교류의 역사』(2007)와 함께 한·중·일의 학자, 교사, 시민단체가 함께 만든 『미래를 여는 역사』(2005.6),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2012.5) 등이 그것이다. 이들 공동 역사 교재는 2001년 일본 후소사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의 역사왜곡이 계기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 역사 교재의 출간은 결코 쉽지 않은 역사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민간 차원에서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이처럼, 쌍방 혹은 다자간 합의에 의해 민간 차원에서 공동 역사 교재가 발간된 것은 국가의 협조와 지원 아래 장기간의 협의를 거쳐 「권고안」 혹은 공동교과서를 발간한 유럽 사례와는 다른, 동아시아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이라는 현실 앞에 적극적 대응의 일환으로 ‘협력이 강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에서의 공동 역사 교재의 발간은 역사 갈등 해결의 귀착점이 아니라 진정한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sup>5)</sup>

10여년을 훌쩍 넘기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공동 역사 교재 발간을 위한 역사 대화는 ‘나’라는 일국·일족 의식을 넘어 ‘우리’의 동아시아라는 역사 인식 공유를 모색하는 평화운동이기도 하다. 공동 역사 교재 발간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경험하고도, 그 필요성에 십분 공감하는 것은 상대와 대화하고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연대의식과 정체성이 형성되어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연대와 정체성은 동아시아 평화의 심리적 초석이다. 이렇듯, 역사 인식 공유는 동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역사 인식 공유는 지속적인 역사 대화에서 나온다. 고로, 더 많은 역사 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4) 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2, 2012, 359~360쪽.

5) 김정인, 동아시아 공동 역사교재 개발, 그 경험의 공유와 도약을 위한 모색, 『역사교육』 101, 2007, 36쪽.

### Ⅲ. 우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역사교육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맞아 역사교육은 이제 이웃나라와 함께 했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을 생각하고 나아가 선린의 동아시아 미래를 건설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2012년부터 고등학교에서 「동아시아사」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신생교과목으로서 현장 적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처음 등장한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 활동과 그것이 남긴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의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기 위해 개설”되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동아시아사」를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탐구하여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사」는 각국 역사에서 각 시기의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적이거나 연관성 있는 요소를 이해하고, 교류와 갈등 요소의 탐구를 통해 문제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즉 역사 인식의 공유를 추구하면서 역사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일조하는 평화교육을 지향한다.<sup>6)</sup>

이러한 「동아시아사」의 탄생은 한국사 교육이 갖고 있는 자민족중심주의·자국중심주의적 편향과 세계사 교육이 갖고 있는 서구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야흐로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짊어질 동아시아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 역사교육은 이제 자민족·자국가 중심주의와 서구 중심주의가 얽힌 부조리한 역사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사 교육은 민족사라는 견고한 장벽에 균열을 내며 보편 세계사와의 소통을 시도하고, 세계사 교육은 강자·우등·선진의 시선을 버리고 호혜평등의 차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동아시아사」가 한국사에 대한 고립적 이해에 기반한 한국사 교육과 각 지역사의 나열적 이해에 기반한 세계사 교육이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주체적이고 개방적이며 평화지향적인 동아시아 역사상을 가르치는 과목으로 자리매김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사라는 지역세계사 차원의 역사교육과 함께 ‘한국사의 동아시아사화’를 추구하는 역사 교육도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보편적인’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동아시아의 역사 흐름 속에서 한국의 역사상을 재구성하고, 나아가 한국의 역사상과 한국사와 이웃나라의 역사를 동아시아적 정체성이라는 시각에서 상호 비교·검토하는 역사학계의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 축적과 함께 한국사의 동아시아사화를 위한 역사교육계의 노력으로는 첫째, ‘한국인 홀로서기’ 차원에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이웃나라를 경계하고 또한 비하하도록 만드는 역사교육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가령, 지금까지 전근대사 교육은 중국 중심의 세계 인식, 즉 화이의식에 근거하여 중화의 한족과 오랑캐의

6) , 고등학교 국사 및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동아시아사 서술 분석], 『역사교육』 110, 2009, 1~2 쪽.

북방 민족을 가르고 일본 역시 오랑캐로 치부하면서 우리 자신을 소중화로 가르쳐왔다. 근현대사 교육에서는 화의의식을 오리엔탈리즘이 대체한다. 서구화=근대화가 전가의 보도가 되고 그 정도 차이가 문명과 미개를 가르다. 덕분에 동아시아 세계 인식은 실종되고 피압박 민족으로서의 경험은 지배와 저항의 이분법적 구도로 근현대사를 분별하면서 이웃을 늘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한국사의 ‘사건’을 동아시아적 ‘사건’으로 확대하여 바라볼 수 있는 역사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역사에는 선례 혹은 전철이 있다. 이러한 선례와 전철을 한국사 내에서만 찾지 않고 동아시아의 역사 궤적 속에서 찾아내는 역사교육이 요구된다. 가령, 한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의 현재와 미래는 미국, 영국과 같은 서구보다는 일본 경제의 성공과 실패의 선례 혹은 전철을 살필 때,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역사에는 또한 맥락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한국사 내에서만 연결 짓지 말고 동아시아사적 차원의 맥락을 찾아 구성하는 역사교육이 요구된다. 가령, 임진전쟁과 병자전쟁을 왜란과 호란이라는 한국사적 시각보다는 동아시아의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17세기 초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과 연결지어 이해해야 역사적 진실에 좀 더 가까운 역사상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역사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보편적 역사교육에서 더 나아가 민주주의·평화·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역사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 유럽의 역사 대화의 경험과 일본 역사교육자협의회의 활동 경험이 이러한 역사교육의 방향 전환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일찍부터 국가 간 역사 대화를 주도하면서 인류 평화의 가치를 추구해왔던 유네스코는 1949년 유럽의 역사 대화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 대화의 주요 기준을 제시했다. 유네스코가 제시한 원칙은 정확성(Accuracy), 공정성(Fairness), 현대문명에의 적합성(Worth), 포괄성과 균형성(Comprehensiveness and Balance), 보편가치 지향성(World-mindedness),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등 6개였다. 그런데, 유네스코가 제시한 기준들은 유럽 경험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를 동아시아 역사 대화 나아가 우리의 역사교육의 원칙으로 원용하면 다음과 같다.

### 동아시아 역사 대화와 역사 교육의 원칙7)

원칙	구체적 기준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li> <li>◆ 정확한 어휘나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li> <li>◆ 해석에 있어 사실적 근거가 없거나 희박한 경우는 피한다.</li> </ul>
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견, 오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개념이나 표현은 피해야 한다.</li> <li>◆ 자국 내 소수 민족·타국민·타민족·타인종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li> <li>◆ 상호 합의가 어려운 논쟁적인 문제는 각국의 의견과 입장을 모두 서술해야 한다.</li> </ul>
포괄성과 균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의 선택과 해석은 포괄적이며 균형적이어야 한다.</li> <li>◆ 양국, 혹은 다국적 갈등과 전쟁은 국제 관계라는 총체적 시각에서 다루어야 한다.</li> </ul>

	◆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사회·사상·문화·과학기술 등을 균형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보편가치 지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그리고 우애라는 이상을 강조해야 한다.</li> <li>◆ 인류 보편의 도덕적 기준과 인류에 대한 공통의 책임감을 강조해야 한다.</li> <li>◆ 자국에 유리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상호 이해에 유용하다면 적절히 서술해야 한다.</li> </ul>

동아시아 역사 갈등에서 역사 화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은 우선 사실 자체를 왜곡하지 않는 정확성을 유지해야 한다. 나아가 편견과 선입견에 근거한 개념을 배제하는 공정한 자세가 필요하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웃나라의 견해가 다를 경우는 타자의 입장을 함께 가르치는 안목이 요구된다. 국제 관계사의 경우는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 자국사적 시각을 반복할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평화 공존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국의 유불리 문제를 떠나서 보편 시민이 추구하는 보편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역사교육이 절실하다.

일본의 역사교육자협의회(이하, 역교협)는 일관되게 이러한 보편가치 지향에 충실한 역사교육을 지향해 온 점에서 주목되는 단체이다. 역교협은 일본에서 패전 후 군국주의 교육을 청산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교육 개혁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 탄생했다. 역교협은 ‘안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밖으로는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역교협의 활동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군국주의 역사 교육을 청산하고 민주 시민을 기르기 위해 ‘역사과 독립’이 아니라 사회과의 일원으로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는 사실이다.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 교육의 부활을 위해 꾸준히 사회과 해체를 시도할 때마다 역교협은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이는 한국의 역사교육계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강력히 역사과 독립을 요구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양상으로 우리 역사교육의 강고한 민족주의적 성향이 흑여 배태하고 있을지 모르는 위험 요소를 돌아보게 한다.

이렇듯 역교협은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보편가치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중시하며 오늘날까지 국가 주도로 점차 도덕교육화하고 있는, 즉 일본 국민의 정체성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내닫고 있는 역사교육에 반대하고 있다. 역교협의 이러한 인식에는 일본이 제국주의의 일원으로 동아시아를 전쟁터로 만들었던 그 시기에 역사교육이 침략의 정신적 도구로 악용되었던 점에 대한 경계심이 깔려 있다. 역사교육이 국민이 아니라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또다시 민주주의와 평화를 훼손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역교협은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을 내세우며 역사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자국사 중심의 편협한 역사인식을 교육현장에 강제하는 것에 저항하며 교육 내용을 자주적으로 편성하고 교과서를 자주적으로 채택하기 위한 교육운동을 전개했다. 그들에게 역사 교육은 과거 역사에 대한 사실과 해석을 가르치는 과거지향적 교육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미래지향적 교육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무엇을 가르치

7) , 앞의 논문, 2007, 48~49쪽.

느냐는 수업 내용도 중요했지만,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민주적인 수업 방식의 실천도 그들에겐 유의미한 성찰 대상이었다.

역교협은 1989년을 기점으로 사회과 해체가 이루어지고 애국주의가 강화되면서 국제 사회에 상호 공존하는 시민으로서의 일본인이 아니라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국민이자 공민으로서의 '일본인 정체성 획득'에 역사교육의 목표가 두어지게 되자 현실적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현실에 역교협은 헌법을 중심으로 한 평화교육을 핵심 교육 내용으로 내세웠다. 또한 평화교육의 연장선상에서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공존의 역사인식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국제적인 역사교육 교류를 추진했다. 가령, 후소샤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역교협은 자국사 중심의 편협한 역사인식을 극복하고 평화와 공존의 보편적 역사인식을 형성한다는 목표 아래 한국 역사교사단체와의 상호 교류에 나섰다. 이는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 인식 형성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역사교육 운동의 탄생을 의미했다.<sup>8)</sup>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우호협력과 상호번영을 가로막고 있는 역사 갈등의 주체는 권력자였고 역사 화해의 주체는 시민이었다. 그러므로 역사 갈등을 넘어 역사 화해로 가는 역사교육은 민족과 국가의 장벽 너머에서 세계시민이 추구하는 미래 보편가치, 즉 민주주의·평화·인권이 꽃필 수 있는 영토를 개척해야 한다. 이러한 모색 속에서 역교협이 일본 정부의 국민교육화·도덕교육화 시도를 우려하며 전개한 역사과 독립 반대 운동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

8) , 「전후 일본의 역사교육 정책과 역사교육자협의회회의 비판 활동」,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62~167쪽.

## **제 1 주제**

###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서술의 변화**

**-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

**발 표 자 : 임 상 선 (동북아역사재단)**

**토 론 자 : 이 춘 복 (중앙대학교)**



#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서술의 변화

-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

임상선(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II. 역사교과서의 남북 관계	
1. 남북 분단	2. 남북 관계
III. 역사교과서의 한국전쟁	
1. 전쟁 발발 배경	2. 전쟁 발발(주체), 경과
3. 참전 이유	4. 전쟁 영향
IV. 역사교과서의 한국 경제	
V. 맺음말	

## I. 머리말

한국과 중국은 국경을 맞닿아 있어 교섭과 교류는 유사 이래 지속되었으나, 그 내용은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현재 양국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교과서는 자라나는 세대가 익혀야 할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매체이다. 교과서의 내용에 따라 학생, 결국은 국민의 인식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고 당시 시대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에서는 중국의 교과서에 한국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재 중국의 역사교과서는 인민교육출판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출판사에서 간행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인민교육출판사의 점유율이 가장 높다. 이에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한국관련 내용에 대하여 수집이 가능한 범위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sup>1)</sup> 부족한 부분은 향후 내용의 보완을 다짐하는 바이다.

1) 관련된 주요 성과로는 유용태, 「중국 역사교과서의 현대사인식과 국가주의」, 『역사교육』 84, 2002 ; 오병수, 「중국의 위험한 민족수난사 교육-근현대교과서의 전쟁사관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34, 2004 ; 박장배, 「근현대 중국의 역사교육과 정체성2 -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의 민족통합문제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20, 2003 ; 김지훈, 「중국의 역사과정표준 고등학교 실험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기술」, 『한국근현대사연구』 36, 2006 ; 이재령, 「중국 역사교과서로 본 현대한국」, 『중국학보』 64 ; 오일환, 「동아시아에서 분단과 전쟁」, 『동아시아의 역사』Ⅲ, 동북아역사재단, 2011 등이 있다.

## II. 역사교과서의 남북 관계

### 1. 남북 분단

#### ① 항미원조 국가보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을 때 미군과 소련은 한반도에서 북위 38도선으로 경계를 삼고, 각각(91쪽) 일본군의 투항을 받아들였다. 이는 남북조선의 분열을 조성하였다.<sup>2)</sup>

#### ② “38선”

“38선”은 조선반도상 북위 38도 부근의 군사분계선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동맹국이 조선 국토상의 북위 38도선을 일본에 대한 소련·미국 양국의 군사행동과 투항범위로 협의한 임시분계선이며, 북부는 소련군투항구이며, 남부는 미군투항구이다. 후일 38선 북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남부에는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38선의 길이는 248킬로미터이며, 폭은 대략 4킬로이다. 쌍방 모두 한동안 지키는 대군이 있었고, 상호 방송을 내보냈다. 근 몇 년간 국세가 완화되어 기본적으로 충돌은 없으며 쌍방의 방송 대치도 이미 중단되었다.<sup>3)</sup>

#### ③ 아시아의 인민민주주의국가

일본이 항복한 후 소련군과 미군은 북위 38도선을 계선으로 하여 각기 조선반도의 북부와 남부에 진주하였다. 1948년 8월에 조선반도 남부에서는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한성을 수도로 하였다. 그해 9월에 조선반도 북부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평양을 수도로 하였으며 김일성이 수상으로 되었다. 조선반도는 이때로부터 분단상태에 처하게 되었다.<sup>4)</sup>

#### ④ 조선전쟁의 폭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미국·소련 양국 군대가 과거 일본식민지였던 조선으로 진입하여 일본군의 투항을 받았다. 쌍방이 북위 38도선을 투항분계선으로 삼아 남북에 두 개의 점령구를 형성하였다. 미국의 육성하에서 1948년 5월 조선남부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성립되었고; 9월 소련의 지지하에서 조선 북부에 김일성을 국가 원수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조선반도에 두 개의 대립정권이 출현하였다.<sup>5)</sup>

1995년 『중국근대현대사』 교과서(①)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군과 소련군이 일본군의 투항을 받게 된 것이 남북조선의 분열을 초래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2) 『하책(필수), 인민교육출판사, 1995년 6월 제2판, 1999년1월 제4차 인쇄, 92쪽.

3)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8년급 하책, 인민교육출판사, 2006년 10월 제2판 ; 2006년 12월 제5차 인쇄, 11쪽.

4) 全日制普通高級中學教科書(選修) 『世界近代現代史』 下冊, 人民教育出版社, 2006년 6월 제2판, 2009년 12월 제14차 인쇄, 112쪽

5)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選修 ③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인민교육출판사, 2007년 2월 제2판 ; 2007년 7월 제7차 인쇄, 106쪽.

1998년 『중국역사』(②)에서는 북위 38°선 이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고, 38°선 이남은 대한민국이 되었다 하고, “38선”이 한반도상 군사분계선인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에 대한 소련·미국 양국의 군사행동과 투항범위로 협의한 임시분계선이면서, 서로 다른 이념의 대치선이 되었다고 보았다.(『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8년급 하책, 인민교육출판사, 2006년 10월 제2판; 2006년 12월 제5차 인쇄, 11쪽). 특히 최근에는 긴장이 완화되어 쌍방의 대치상황이 중단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2006년판 『세계근대현대사』(③)는 일본 항복 후 소련군과 미군이 진주하고, 남북한의 건국으로 이때부터 분단상태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남북분단이 한반도의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종전 처리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역사교과서에서 가장 상세하게 한국전쟁을 다루고 있는 것이 『歷史』 選修3(④)이다. 이 교과서는 그 부제가 “20세기의 전쟁과 평화”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전쟁에 대하여 그 발발, 전개, 그리고 영향 등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미국·소련에 의해 과거 일본식민지였던 조선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투항을 받는 두 개의 점령구를 형성되었는데, 결국 양강의 대립에 따라 남부에 대한민국, 북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 2. 남북 관계

### ① 亞洲인민민주국가의 승리 발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일본제국주의 말발굽 아래에서 해방되었다. 1945년 8월, 소련 홍군이 일본 관동군과 일본의 조선 주둔군을 물리친 후, 동맹국의 협의에 따라, 북위 38도 이북의 조선지구에 진주하고, 이로부터 조선 북부의 인민은 제국주의 압박에서 벗어나, 人民民主의 길로 나아갔다. 日寇가 투항한 3주 후, 미국군대가 조선에 상륙하였다. 미제국주의는 협조하는 조선민주정당조직 임시 민주정부의 협의를 파괴하고, 1948년 5월 남조선 단독 선거를 하고, 괴뢰정부를 조직하였다. 조국을 熱愛하는 조선인민은 조선인민을 미국에 예측시키려는 거짓 계획에 강렬한 항의를 제출하였다. 8월, 남북조선은 民主普選(주1:조선 북부의 99.97%의 인민이 선거에 직접 참가하였고, 조선남부에서 77.52%의 인민이 남조선 괴뢰정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비밀 투표에 참가하였다), 조선 최고인민회의를 선출하였다. 9월, 조선최고인민회의는 평양에서 회의를 거행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통과시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신정부를 조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은 노동당과 김일성 수상의 영도하에 토지개혁을 실행하고, 중요 공업의 국유화를 실현하였다. 아울러 두 번의 국민경제를 회복하려는 1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후, 1949년 또 국민경제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려는 2년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인민의 용맹한 노동으로부터 소련과 각 인민민주국가의 협조에 의해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는 신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단 조선 인민의 평화로운 경제건설 작업은 1950년 6월 미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sup>6)</sup>

6) 『世界歷史』 하책, 인민교육출판사, 1955년 11월 제1판 ; 1956년 1월 제1차 인쇄, 148~149 쪽.

## ② 국제 군축의 진전과 지역 완화

일부 지역에서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모순이 완화되고 있다. 20세기 80년대부터 조선반도의 남북 쌍방은 점차적으로 대화를 시작하였으며 경제 왕래가 늘어나고 있다. 2000년 6월에 韓國과 朝鮮의 양국 지도자들은 평양에서 수뇌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朝, 韓 양국 지도자들은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韓朝 수뇌회담이 가지는 중대한 의의를 강조하였으며 조선반도의 통일을 실현하며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전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승낙하였다. 이번 수뇌회담은 조선반도의 완화진척을 진일보로 촉진하였다.

선언은 조선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의 기본원칙과 통일을 도모하는 방향을 확인하였으며 장차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사회, 문화, 체육, 보건위생, 환경 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주2:2000년의 시드니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에서 조, 한 운동선수들이 서로 동일한 기,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주경기대회장에 입장함으로써 개막식에서 가장 인상 깊은 한 장면을 이루었다.)을 강화하며 하루속히 쌍방정부간의 대화 체제를 만들 것을 명확히 제기하였다.<sup>7)</sup>

한국전쟁이 막 끝난 시기인 1955년에 발간된 고급중학용 『세계역사』 교과서(①)에는 북한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에서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3개의 새로운 인민민주국가가 생산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북한이었다고 하면서 그 건국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1948년 5월에 세워진 남한은 괴뢰정부이지만, 북한은 남북의 정통성을 계승한 정권으로 편향되게 기술하고 있다. 즉 1948년 8월에 조선북부의 99.97%의 인민과 조선남부 77.52%의 인민이 참여한 남북조선 民主普選에서 선출된 조선 최고인민회의가 9월에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통과시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신정부를 조직하였다고 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의 영도하에 토지개혁, 중요 공업의 국유화를 실현하고, 국민경제를 회복하고 있었는데, 1950년 6월 미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하였다.

2006년판 『世界近代現代史』(2003년에 1판 발간)(②)에는 남북분단 이후 남북 양측의 대화와 긴장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2000년 6월에 이루어진 남북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를 통하여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의 기본원칙과 통일을 도모하는 방향이 정해졌다고 보았다. 그 사례로서 2000년의 시드니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에서 남북한의 선수들이 한반도기를 함께 들고 입장한 것을 들고 있다. 본문에서는 남북한의 표기에서도 균형을 이루려는 듯, ‘한국과 조선’, ‘조, 한 양국 지도자’, ‘한, 조 수뇌회담’, ‘조, 한 운동원’ 등으로 의도적으로 순서를 조정하고 있다.

7) (選修) 『世界近代現代史』 下冊, 人民教育出版社, 2006년 6월 제2판, 2009년 12월 제14차 인쇄, 96쪽.

### III. 역사교과서의 한국전쟁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전쟁은 현재 한국관련 내용 중 가장 내용과 비중이 높은 주제이다. 교과서의 한국전쟁 내용은 한국전쟁이 어떻게 발발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sup>8)</sup>

#### 1. 전쟁 발발 배경

##### ① 신중국 국제지위의 제고

신중국 성립초기,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국가는 중국에 대하여 군사상 위협을 실행하고, 정치상으로 고립을 진행하고, 경제상 봉쇄를 하고, 신중국을 요람 속에서 목 졸라 죽이려고 기도하였다.<sup>9)</sup>

##### ② 신생정권의 공고화

중국인민이 막 전쟁의 폐허 상에서 가정을 다시 꾸리기 시작했을 때 1950년 6월 조선전쟁이 폭발했다. 미군을 주로 한 소위 “유엔군”이 제멋대로 출병 간섭하였고, 전화가 계속해서 중국과 조선의 변경 압록강까지 미쳤다. --- (11쪽)

조선내전이 폭발한 후 미군은 1950년 9월 15일 조선 중부의 인천에 상륙하였다. 10월 1일 소위 “유엔군” 사령 맥아더가 최후통첩을 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무기를 버리고, 전쟁을 중지하고 무조건투항” 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이 전장을 우리나라 변경에까지 확대하여 중국 동북 변경 도시를 폭격 소사하였고, 미국 해군 제7함대를 파견하여 우리나라 대만해협으로 침입하고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해방하는 것을 저지하였다.

1950년 9월 30일 주은래가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하여 “중국인민이 평화를 열렬히 원하지만 평화를 보위하기 위한 침략전쟁에 대한 반항을 지금, 그리고 영원히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국인민은 결코 외국의 침략을 용인할 수 없으며, 또한 제국주의가 자신의 이웃에 대해 제멋대로 침략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장엄하게 선언하였다.

1950년 10월 15일 미국 대통령 트루먼과 맥아더가 웨이크섬에서 회견하였다. 트루먼이 중국이 간섭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을 때 맥아더가 “매우 적다. . . 그들은 공군이 없고, 우리는 조선에서 공군사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지가 있다. . . . .”라 말했다.

이처럼 엄중한 형세에서 신중국이 대담하게 미국과 대결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당시 국내외에서는 각양각색의 의논들이 있었다.<sup>10)</sup>

##### ③ 1950년대 초 미국은 소련을 우두머리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을 자신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데 최대 장애라 여겼다. 미국의 입장에서 조선반도 상의 충돌은 조선반도에서의 이익에 미국에 위협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소련이 전지구적 전쟁을 발동한 첫 번째 단계”였다. 조선에 대해 무장간섭을 진행하여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유지, 확대할 수

8) 『 歷史』選修 ③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인민교육출판사, 2007년 2월 제2판 ; 2007년 7월 제7차 인쇄, 106쪽.

9)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中國 역사』 제4책, 인민교육출판사, 1995년 4월 제2판 ; 1998년 10월 제4차 인쇄, 189쪽.

10)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與社會-我們面對的機遇與挑戰』 9년급 전1책, 인민교육출판사, 2005년 6월 제2판 ; 2006년 6월 제5차 인쇄, 12쪽.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를 기회로 전지구에 대해 자신의 패권정책을 한층 추진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포위와 봉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sup>11)</sup>

1995년 『중국역사』(①)에서는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한 배경으로서 미국을 위주한 제국주의국가가 중국에 대한 군사상 위협과 정치상 고립, 경제상 봉쇄를 통하여 신중국을 요람 속에서 목졸라 죽이려고 기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에 간행된 역사와 사회과 통합교과인 『역사여사회』(②)는 한국전쟁을 ‘조선전쟁’이라 표기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중국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미군이 1950년 9월 15일 조선 중부의 인천에 상륙하고, 전장을 우리나라 변경에까지 확대하고 제7함대를 파견하여 대만을 해방하는 것을 저지하는 상황에서 1950년 9월 30일 주은래가 외국의 침략을 용인할 수 없으며, 또한 제국주의가 이웃 나라에 대해 제멋대로 침략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중국의 참전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신중국이 세계상 가장 강대한 미국과 대결한 무모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피치못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항미원조 보가위국이다.

2007년판 『歷史』 選修3(③)은 한국전쟁의 발발이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일환으로 서술하고 있다.<sup>12)</sup> 미국의 입장에서 조선에 대해 무장간섭을 진행하여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유지, 확대하고, 나아가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포위와 봉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북한에 의해 발발되었고, 그 이면에 소련과 중국의 지원이 있었다는 현재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와는 중국 역사교과서의 내용은 일정한 차이가 있다.

## 2. 전쟁 발발(주체), 경과

### ① 朝中인민의 침략 반대, 保衛와 평화를 위한 용맹한 투쟁

1950년 6월 25일 미제국주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향해 침략전쟁을 發動하였다. 용맹한 조선인민은 미국침략자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미국침략의 불꽃이 중국 변경에 가까워졌을 때, 중국인민은 지원군을 조직하고, 1950년 10월 25일 압록강을 건너, 조선인민과 함께 미국침략군에게 용맹한 抗擊을 전개하였다. 용맹한 조중부대는 연속적으로 적의 몇 차례 공세를 물리치고, 적의 細菌戰을 분쇄하고, 빛나는 승리를 얻었다.

조중인민부대의 치명적인 타격과 전세계 인민이 평화를 요구하는 압력하에 미제국주의는 겨우 소련의 연합국 대표가 제출한 조선문제 평화해결 건의를 할 수 없이 접수하였다. 1951년 7월 교전 쌍방은 조선 개성에서 담판을 시작하였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

조선정전협정의 체결은 평화의 전쟁에 대한 승리이고, 용맹한 조중인민의 미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한 승리이다. 전세계 인민은 평화 민주 역량이 강대하고, 어떠한 새로운 전쟁을 발

11) 『歷史』 選修 ③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인민교육출판사, 2007년 2월 제2판 ; 2007년 7월 제7차 인쇄, 106쪽.

12) 2003년판 교과서에서도 한국전쟁이 종전후 미국과 소련의 양극구조속에서의 대립의 와중에 발생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全日制普通高級中學教科書(選修) 『世界近代現代史』 下冊, 人民教育出版社, 2006년 6월 제2판, 2009년 12월 제14차 인쇄, 58쪽)

동하려는 음모를 제지하고 분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이것은 보위 화평의 세계 인민에게 하나의 매우 고무스러운 일이었다.<sup>13)</sup>

- ② 미 제국주의는 중국인민혁명의 승리를 적대시하였다. 1950년 6월 미국은 조선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제7함대를 타이완해협으로 보내어 중국이 타이완성을 해방하는 것을 저지하였다. 9월 미국이 조직한 “연합국군”은 “38선”을 넘어, 중국 동북 변경까지 공격해 들어와 중국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쳤다.

항미원조와 국가 보위를 위하여, 중국정부는 중국인민지원군을 조직하여, 조선인민과 공동으로 미국침략자들에게 저항하였다. 1950년 10월 중국인민지원군은 평터화이 사령원의 지휘아래 압록강을 건너 조선인민군과 함께 미국침략자들에게 저항하였다. 1951년 6월, 중국인민지원군은 북한인민군과 함께 5차에 걸친 대규모 전투를 진행하여 5전5승을 거두고, 23만이상의 적을 섬멸하였다.

미국 침략군은 “38선”부근으로 물러나고, 조선 북방의 영토를 수복하였다.<sup>14)</sup>

- ③ 제19과 인민정권을 공고화하는 투쟁

항미원조

1950년 조선내전이 폭발했다. 미제국주의가 소위 “유엔군”(주:1950년 미제국주의가 15개 국가의 군대를 모집하여 “유엔군”의 기치를 내걸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하였다.)을 단호히 지휘하여 조선을 침략하였다. 그들은 “38선”을 넘어 곧장 중국 변경을 공격하였고, 우리나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동시에 미제국주의가 해군 제7함대를 중국 대만해협으로 파견하여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해방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을 기도하여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였다.<sup>15)</sup>

국내 인민들은 열렬히 지원군 참가를 신청하였고, 증산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비행기 대포를 헌납하며 조선 전선을 지원하였다.

1953년 7월 조·중 인민군대의 맹렬한 반격 하에서 미국침략자는 「조선정전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조·중 인민이 반침략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얻었다.<sup>16)</sup>

- ④ 항미원조 국가보위

1950년 여름, 조선 내 전쟁이 발발하였다. 미 제국주의는 출병하여 거침없이 조선으로 쳐들어왔으며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고 전쟁의 불꽃을 중조변경까지 불태웠다. 미국의 제7함대역시 타이완해협까지 도달해 중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

항미원조, 국가보위를 위하여 1950년 10월, 평터화이를 사령원으로 하는 중국인민지원군은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향하여 조선군민과 함께 미국 침략자에게 반격하였다.

오만하고 난폭한 미 제국주의는 중국이 출병하여 참전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였을 것이다. “연합국군”사령 맥아더는 2주 안으로 조선전쟁을 끝내겠다고 큰소리치며 미국으로

13) 『世界歴史』 하책, 인민교육출판사, 1955년 11월 제1판; 1956년 1월 제1차 인쇄, 167쪽  
14) 『초급중학과본 중국역사』 제3책, 인민교육출판사, 1987년 12월 제2판, 1988년 6월 제7차 인쇄, 127~128쪽.  
15)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중국역사』 제4책, 인민교육출판사, 1995년 4월 제2판 ; 1998년 10월 제4차 인쇄, 140쪽.  
16)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중국역사』 제4책, 인민교육출판사, 1995년 4월 제2판 ; 1998년 10월 제4차 인쇄, 144쪽.

돌아가 성탄절을 보낼 꿈을 꾸고 있었다. 하지만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에 들어온 후 신속하게 전기를 잡아, 적군에게 허를 찌르는 타격을 가하였다. 전투 초기 승리를 알렸는데 1951년 여름까지 중국인민지원군은 조선인민군과 함께 5전5승을 거두고 미국침략군이 압록강변에서 “38선”부근으로 물러나도록 하였으며 조선국세는 호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미 제국주의는 실패를 달갑지 않게 여기며, 선후 그들의 모든 육군의 1/3, 공군의 1/5과 해군의 절반 가까이를 조선전장에 투입하였으며, 원자탄을 제외한 당시의 모든 현대화무기를 사용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은 강한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며 용감하게 작전에 임하며 결국 항미원조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다. 항미원조 전쟁 중 무수한 영웅인물들이 용솟음쳐 나왔는데 양근은, 황계광, 구소운 등의 열사와 같은 인물들은 오늘날까지 중국인민의 마음속에 살아있다.<sup>17)</sup>

- ⑤ 1950년 6월 조선내전이 폭발했다. 미국이 단호하게 파병하여 조선을 침략하였다. 미군을 주로 한 소위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곧바로 중국 변경 압록강변까지 공격하였다; 미군 비행기가 중국 영공을 침략해 들어와 중국 동북변경의 도시를 폭격, 소사하였다; 미국 제7함대가 중국 대만해협으로 침략해 들어와 인민해방군의 대만 해방을 저지하였다. 미국의 침략활동은 중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sup>18)</sup>

⑥ 조선전쟁의 폭발

1950년 6월 25일 조선내전이 폭발하였다. 조선인민군이 빠르게 한성을 공격 점거하고, 남쪽으로 밀고 나아갔고, 한국군대가 점차 패퇴하였다. 이는 미국의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소련대표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출석하여 조선문제를 토론할 것을 거절한 기회를 이용하여 안전보장이사회를 조정하여 “침략자”인 조선을 질책하는 결의를 통과시키고 아울러 한국에 무장 원조할 것을 선포하였으며, 또한 제멋대로 제7함대를 출동시켜 대만해협으로 진주하고 중국내정에 간섭하였다. 7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또한 “유엔군”을 조성하여 조선전쟁에 간섭할 것을 결정하였고, 미국의 맥아더를 “유엔군”의 총사령에 임명하였다. 조선전쟁은 내전에서 국제적인 국지전으로 확대되었다.

같은 해 8월 조선인민군이 이미 남부 90%이상의 지역과 인구를 점령하였고, “유엔군”과 한국군대를 동남 해안 일대에서 압박하였다. 실패의 국면을 만회하기 위해 맥아더의 획책하여 미국은 동아시아의 전체 기동병력인 5만 명을 이동 집결시키고, 비행기 500대와 군함 300여척을 연합하여 9월 15일 갑자기 조선 중부의 인천에 상륙하였고, 조선인민군 南進 부대의 퇴각로를 끊어버렸다. 조선 전장상의 역량대비 변화가 발생했다. 9월 28일 미군이 한성을 점령하였고; 10월 다시 “38선”을 넘어 평양을 점령하였다. 미군이 재빨리 전화를 중국·조선 변경의 압록강부근까지 확대하였고 중국동북지역을 폭격하여 중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sup>19)</sup>

1955년 『세계역사』 교과서(①)는 1950년 6월 25일 미제국주의가 조선민주주의인민

17) 『하책(필수)』 인민교육출판사, 1995년 6월 제2판, 1999년1월 제4차 인쇄, 92쪽.  
 18)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8년급 하책, 인민교육출판사, 2006년 10월 제2판 ; 2006년 12월 제5차 인쇄, 7쪽.  
 19)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選修 ③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인민교육출판사, 2007년 2월 제2판 ; 2007년 7월 제7차 인쇄, 106~107쪽.

공화국을 향해 침략전쟁을 發動하였다고 하며, 미국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기술하였다. 미국침략의 불꽃이 중국 변경에 가까워졌을 때, 중국인민은 지원군을 조직하고, 1950년 10월 25일 압록강을 건너 참전하였는데, 조중부대는 특히 적의 細菌戰을 분쇄하고, 빛나는 승리를 얻었다고 하며 세균전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조중인민부대의 치명적인 타격과 전세계 인민의 평화 요구에 따라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은 용맹한 조중인민의 미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한 승리의 결과라고 보았다.

1987년 『중국역사』(②)에서는 미국이 ‘조선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켰다며, 한국전쟁을 발발한 것이 북한이 아닌 미국으로 서술하고 있다. 항미원조와 보가위국을 위하여 중국 정부는 1950년 10월 팽덕회 지휘아래 중국인민지원군을 조직하여 조선인민과 미국 침략에 저항하였고, 23만 이상의 적을 섬멸하고 미국 침략군을 38선 부근으로 물리치고 조선 북방의 영토를 수복하였다고 하였다. 한국전쟁의 남측 주체인 한국군과 유엔군의 존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전쟁의 당사자를 중국, 북한대 미국으로 서술하고 있다.

1995년 『중국역사』(③)에서는 1987년에 비하여 서술분량이 상당부분 늘어났고, 내용상에서도 일부 변화되었다. 첫째, ‘조선내전이 폭발했다’고 하며, 한국전쟁이 내전이라 설명하고 있고, 둘째, 미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하였다고 하면서도 ‘유엔군’의 일원임을 밝히고 있고, 셋째, 전쟁 중 중국내에서는 지원군 참가 신청이 적극적이고, 증산절약 운동을 통하여 비행기 대포를 헌납하며 조선 전선을 지원하였다고 하였다. 미국이 중국을 침략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비행기가 안동시를 폭격하는 사진<sup>20)</sup>을 게재하고, 아울러 1950년 연합국안전이사회에서 중국대표 오수권이 미국 대표에게 한 말을 통하여 재차 설명하고 있다. 즉 “미국이 조선을 침략하는 전쟁을 발동한 이후, 8월 27일에서 11월 25일 조선을 침략한 미국 비행기가 중국 영공을 침범한 것이 이미 200여회이고, 출동한 비행기 1000대 이상이 중국 재산을 훼손하고 중국 인민을 살상하였다. 이것이 침략이 아니냐? 미국 제7함대가 중국 대만 영해를 침범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니, 이것이 침략이 아니냐?”고 하며 안보리회에 미국의 침략행위를 제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중국역사』 제4책, 인민교육출판사, 1995년 4월 제2판; 1998년 10월 제4차 인쇄, 189쪽). 전쟁의 경과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중국인민지원군의 3차에 걸친 승전 관련 지도(<중국인민지원군 제1~3차전역 설명도><sup>21)</sup>)에는 중국 지원군과 연합국군만 표시되어 있고, 한국군이나 북한군, 그리고 미군에 대한 설명이 없다. 유엔군을 “미제국주의가 15개 국가의 군대를 모집”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953년 7월 조·중 인민군대의 맹렬한 반격 하에서 미국침략자는 「조선정전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는 조·중 인민이 반침략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얻었다고 단

20) 『중국역사』 제4책, 인민교육출판사, 1995년 4월 제2판 ; 1998년 10월 제4차 인쇄, 140쪽.

21)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중국역사』 제4책, 인민교육출판사, 1995년 4월 제2판 ; 1998년 10월 제4차 인쇄, 141쪽.

정하였다. 그 근거는 연합국군총사령관 미국 육군 상장 크라크가 회의록에서 “역사상에 승리 없이 정전협정에 조인을 한 첫 미국사령관이다.”<sup>22)</sup>라고 한 말을 인용하고 있다. 전쟁 승리에는 수많은 영웅이 있었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상감령을 건실히 지켜낸 강칠련(鋼七連), 몸으로 적의 기관총의 충구를 막아낸 황계광(黃繼光), 잠복기율을 엄수하여 맹렬한 불길에 기꺼이 삼켜지길 원했고, 또한 목표를 폭로하지 않았던 구소운(邱少云)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이 중국인민지원군이 가장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였다.<sup>23)</sup>

1995년 『중국근대현대사』(④)는 1950년 여름, 조선 내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이 거침없이 조선으로 쳐들어왔으며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고 전쟁의 불꽃을 중조변경까지 불태웠다. 미국은 그들 육군의 1/3, 공군의 1/5과 해군의 절반 가까이를 조선전장에 투입하였으며, 원자탄을 제외한 당시의 모든 현대화무기를 사용하였지만, 결국 항미원조전쟁에서 패배를 보았다고 하였다. 미국이 사용한 무기가 원자탄을 제외한 모든 현대화무기라는 것은 1950년대 교과서에서 언급한 세균전을 염두에 둔 듯하며, 이것은 과정표준 교과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sup>24)</sup>

2006년 『중국역사』(⑤)도 “조선내전이 폭발했다”고 하였으나, 미국이 파병하여 조선을 침략하였다고 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 제1~3차전역 설명도><sup>25)</sup>에서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인 지원군, 미군·한군·연합국군, 그리고 조군·지원군을 표시하고 있다.<sup>26)</sup>

2007년판 『역사』 選修3(⑥)은 ‘조선내전이 폭발하였다’고 하며, 여전히 선제 공격의 주체를 밝히지 않고, 내전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유엔군”이 참전함에 따라 “조선전쟁은 내전에서 국제적인 국지전으로 확대되었다”고 성격을 규정하고, 전쟁 경과를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 3. 참전 이유

#### ① 朝中인민의 침략 반대, 保衛와 평화를 위한 용맹한 투쟁

1950년 6월 25일 미제국주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향해 침략전쟁을 發動하였다. 용맹한 조선인민은 미국침략자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미국침략의 불꽃이 중국 변경에 가까워졌을 때, 중국인민은 지원군을 조직하고, 1950년 10월 25일 압록강을 건너, 조선인

22) 『중국역사』 제4책, 인민교육출판사, 1995년 4월 제2판 ; 1998년 10월 제4차 인쇄, 144쪽.

23)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중국역사』 제4책, 인민교육출판사, 1995년 4월 제2판 ; 1998년 10월 제4차 인쇄, 142~143쪽.

24) “미국침략자가 실패를 체념하지 않고 차례로 육군의 1/3, 공군의 1/5, 그리고 해군의 1/2을 조선전장에 투입하였고 원자폭탄을 제외한 당시 소유한 모든 현대화무기를 사용하였다.”(『全日制普通高級中學教科書(必修) 中國近代現代史』 하책(인민교육출판사, 2006년 6월 제2판; 2006년 11월 제6차 인쇄, 84쪽).

25)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8년급 하책, 인민교육출판사, 2006년 10월 제2판 ; 2006년 12월 제5차 인쇄, 8쪽.

26) 1995년판에는 중국지원군과 연합국군만 표시되어 있었고, 2002년판에는 1995년판에 있던 미군이 없고 한군, 연합국군과 조군, 지원군을 나누어 표시하고 있다.(『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중국역사』 제4책, 인민교육출판사, 2002년 12월 제1판; 2005년 11월 하남 제1차 인쇄, 106쪽)

민과 함께 미국침략군에게 용맹한 抗擊을 전개하였다. ---

조선정전협정의 체결은 평화의 전쟁에 대한 승리이고, 용맹한 조중인민의 미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한 승리이다. 전세계 인민은 평화 민주 역량이 강대하고, 어떠한 새로운 전쟁을 발동하려는 음모를 제지하고 분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이것은 보위 화평의 세계인민에게 하나의 매우 고무스러운 일이었다.<sup>27)</sup>

#### ② 신중국정권의 건설과 공고

미 제국주의는 중국인민혁명의 승리를 적대시하였다. 1950년 6월 미국은 조선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제7함대를 타이완해협으로 보내어 중국이 타이완성을 해방하는 것을 저지하였다. 9월 미국이 조직한 “연합국군”은, “38선”을 넘어, 중국 동북 변경까지 공격해 들어와 중국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쳤다.

항미원조와 국가 보위를 위하여, 중국정부는 중국인민지원군을 조직하여, 조선인민과 공동으로 미국침략자들에게 저항하였다. 1950년 10월 중국인민지원군은 평덕화이 사령원의 지휘아래 압록강을 건너 조선인민군과 함께 미국침략자들에게 저항하였다. 1951년 6월, 중국인민지원군은 북한인민군과 함께 5차에 걸친 대규모 전투를 진행하여 5전5승을 거두고, 23만 이상의 적을 섬멸하였다.<sup>28)</sup>

#### ③ 항미원조

1950년 조선내전이 폭발했다. 미제국주의가 소위 “유엔군”을 단호히 지휘하여 조선을 침략하였다. 그들은 “38선”을 넘어 곧장 중국 변경을 공격하였고, 우리나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동시에 미제국주의가 해군 제7함대를 중국 대만해협으로 파견하여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해방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을 기도하여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중국정부에게 파병하여 원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항미원조, 국가방위를 위해 1950년 10월 팽덕회를 사령관으로 한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으로 부대를 이동하기 시작했고 조선 군민과 함께 미국침략자에 대해 공격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 전투가

용맹하고 기세 당당하게 압록강을 건너자!

평화를 지키고 조국을 보위하는 것이 고향을 지키는 것!

중국의 훌륭한 아들 딸들은 마음을 합쳐 단결하여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도와 탐욕스러운 미국을 물리치자!<sup>29)</sup>

#### ④ 미국의 조선과 베트남 침략 전쟁

1950년 6월, 조선에 내전이 폭발했다. 미국은 아시아지역의 패권을 쟁탈하기 위해 우선 해군·공군을 파병하여 남조선 군대를 지원했다. 계속해서 “유엔” 명의로 미군이 주가 되는 “유엔군”을 조직하여 조선으로 침입하여 곧장 중국·조선 변경까지 공격하였다. 이 기간에 미국 해군 함대가 대만해협으로 진입하여 중국인민의 대만해방을 저지하였다. 조국의 안전

27) 『世界歷史』 하책, 인민교육출판사, 1955년 11월 제1판 ; 1956년 1월 제1차 인쇄, 167쪽.

28) 『초급중학과본 중국역사』 제3책, 인민교육출판사, 1987년 12월 제2판, 1988년 6월 제7차 인쇄, 127쪽.

29)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중국역사』 제4책, 인민교육출판사, 1995년 4월 제2판 ; 1998년 10월 제4차 인쇄, 140쪽.

을 보위하기 위해 조선정부의 요청에 응했고 1950년 10월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에 진입하여 조선인민군과 함께 미국군대의 공격을 싸워서 물리쳤다.<sup>30)</sup>

⑤ 항미원조, 보가위국

1950년 6월 조선내전이 폭발했다. 미국이 단호하게 파병하여 조선을 침략하였다. 미군을 주로 한 소위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곧바로 중국 변경 압록강변까지 공격하였다; 미군 비행기가 중국 영공을 침략해 들어와 중국 동북변경의 도시를 폭격, 소사하였다; 미국 제7함대가 중국 대만해협으로 침략해 들어와 인민해방군의 대만 해방을 저지하였다. 미국의 침략활동은 중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중국정부에 파병 원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항미원조, 보가위국을 위해 1950년 10월 팽덕회를 사령관으로 하는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 전선으로 출동하였고, 조선인민군과 함께 미국침략자에 반격하였다. ---

우리들이 출병하지 않아 적이 압록강변까지 압도하고 국내 국제 반동 기세가 높아진다면 각방이 모두 불리하며, 우선 동북에 더욱 불리하여 전체 東北邊防軍을 장차 운동 끌어당겨서 남만주의 電力이 지배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당연히 참전해야 하며, 참전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참전 이익은 매우 크고 참전하지 않으면 손실이 더욱 크다고 인식했다.- 모택동 -

머리를 쓰자.

중국인민지원군이 당시 출병하지 않는 것이 가능했을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은가? 왜 그러한가?

(여자) 불가능해. 조선은 중국의 가까운 이웃이고, 미국이 조선을 침략하여 중국의 안전 또한 위협을 받았고, 미국 제7함대가 대만해협을 침략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을 해방하는 것을 저지했어. 중국인민은 반드시 미국의 침략에 대해 제지를 가했어야 해.

(남자) 조선정부가 중국에 출병 원조를 요청하였는데 중국이 출병하여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 조선을 원조하는 것 또한 보가위국이니까.<sup>31)</sup>

⑥ 항미원조, 보가위국

1950년 10월 김일성이 모택동주석에게 긴급구원전보를 내고, 중국이 출병하여 원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가안전의 유지 보호와 사회주의국가 조선이 외래 침략과 간섭에 저항하는 것을 원조하기 위해 중공중앙정치국과 중앙의 주요지도자들은 신중히 고려하였고, 중국인민지원군 조직을 결정하였다. 10월 19일 사령관 팽덕회의 지휘하에 지원군은 3路로 길을 나누어 압록강을 건너 항미원조 작전을 시작하였다. ---

조선전쟁 중에 미군은 본국 전체 육군의 1/3, 공군의 1/5와 절반 이상의 해군을 투입하였고,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현대화무기를 사용하여 전비 지출이 830억 달러 이상에 달하였으며, 미군이 중심으로 하는 “유엔군”의 사상자와 포로는 109만 명에 달한다.<sup>32)</sup>

30) 『世界歷史』 제2책, 인민교육출판사, 2001년 12월 제1판 ; 2006년 1월 제5차 인쇄, 73~74쪽.

31)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8년급 하책, 인민교육출판사, 2006년 10월 제2판 ; 2006년 12월 제5차 인쇄, 8쪽.

32)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選修 ③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인민교육출판사, 2007년 2월 제2판; 2007년 7월 제7차 인쇄, 107~108쪽.

1955년 『세계역사』 교과서(①)는 한국전쟁에 중국이 참전한 것이 단지 미국 침략이 중국 변경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조선인민지원군을 조직하고 참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미국에 대한 저항, 조선 지원 등과 같은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그 단원명인 “朝中인민의 침략 반대, 保衛와 평화를 위한 용맹한 투쟁”이라는 것에서도 한국전쟁 참전이 침략에 반대하면서 그 대상을 밝히 않은 채 보위와 평화를 위한 투쟁이라고 하였다.

1987년 『중국역사』(②)에서는 조선내전에 참전하는 이유를 ‘항미원조와 보가위국’을 위해서라고 하였다. 1950년 6월 미국이 조선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제7함대를 타이완해협으로 보내어 중국이 타이완성을 해방하는 것을 저지하였다고 보았다. 미국이 조직한 “연합국군”이 “38선”을 넘어, 중국 동북 변경까지 공격해 들어와 중국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쳤다고 하면서, 중국측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참전한 듯이 기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전쟁은 신중국 정권이 공고화되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995년 『중국역사』(③)에서는 조선내전에 참전하는 이유를 ‘항미원조’라고 단원명에서 표시하고 있다. 이전의 교과서에서 “항미원조, 보가위국”이 참전이유였으나 1995년 교과서에서는 이중 항미원조를 단원명으로 제시한 것이다. 중국측 입장을 나타내는 “보가위국”보다도 북한을 지원하고 미국에 적대한다는 대외적 요인을 강조하는 것으로 관점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sup>33)</sup> 구체적으로는 미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하여 38선을 넘어 곧장 중국 변경을 공격하고 제7함대도 대만해협으로 파견하여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해방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을 기도하며 중국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고, 내정에 간섭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또 북한이 원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중국측의 설명은 그들의 인민지원군 전투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평화를 지키고 조국을 보위하는 것이 고향을 지키는 것”이며,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도와 탐욕스러운 미국을 물리치자”고 노래하고 있다.

2001년 발간된 『세계역사』 교과서(④)에서 미국이 참전한 이유가 아시아지역의 패권을 쟁탈하기 위해 우선 해군·공군을 파병하여 남조선 군대를 지원했다고 하였다. 이에 중국은 조국의 안전을 보위하기 위해 조선정부의 요청에 응하여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에 진입하여 조선인민군과 함께 미국군대에 대항하였다고 보았다.

2006년 『중국역사』 교과서(⑤)는 2002년 교과서와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2006년 과정표준 교과서는 이전의 교학대강본과 달리 학습내용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또한 내용을 단순히 서술하기 보다는 자료, 사진, 지도 등을 늘이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형태로 교과서가 개편되었다. 한국전쟁 관련 부분에서도 변화가 보인다. 서술내용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측의 참전이유에 대해서는 오히려 추가된 부분이 있다. 먼저, 모택동은 특히 동북에 더욱 불리하고 남만주의 電力이 지배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전해야 하며, 참전 이익은 매우 크고 참전하지 않으면 손실이 더욱 크

33) 2002 교과서에서도 단원명이 “항미원조”이다.(『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중국역사』 제4책, 인민교육출판사, 2002년 12월 제1판 ; 2005년 11월 하남 제1차 인쇄, 105쪽)

다고 인식했다고 한다.<sup>34)</sup> 또한, 남녀 학생의 대화를 통하여 조선정부가 중국에 출병 원조를 요청하였는데 중국이 출병하여 돕는 것은 당연하고, 조선을 원조하는 것 또한 보가위국이니 때문이라는 것을 머리에 기억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단원명도 이전 교과서가 ‘항미원조’였으나 이번에는 “항미원조, 보가위국”으로 보가위국을 추가하였다. 사실 중국측의 한국전 참전이유가 항미원조만이 아니라 오히려 보가위국이 보다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인민지원군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며, 이들의 애국심을 학생들은 본받아야 하는 것이 된다.

2007년판 『역사』 選修3(⑥)은 중국의 참전이 김일성이 모택동 주석에게 보낸 긴급구원전보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중국이 국가안전 유지와 사회주의 국가 조선을 원조하기 위한 것이며, 팽덕회와 김일성이 작전 상의하는 사진도 게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전비가 830억 달러 이상이고,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사상자와 포로가 109만 명에 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의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규모는 4개 군 12개 보병사단, 3개 포병사단 약 26만 명을 비롯해 예비대로 2개 군의 8만 명이었고 제2, 제3단계로 20여개 사단을 준비했다고 한다.<sup>35)</sup>

#### 4. 전쟁 영향

##### ① 신중국 정권의 건설과 鞏固

조중인민군대의 타격으로 1953년 7월, 미 제국주의는 판문점에서 마침내 조선정전협정에 강압적으로 서명함으로써 조선전쟁은 끝이 났다.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은 함께 3년 이상 지속된 고난의 분투 속에서 100만이상의 적군을 섬멸하고, 그중 미군이 30만 명, 격추한 적기가 1.2만 여기로, 반침략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얻었다. 항미원조의 승리로 미 제국주의의 침략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안전을 보위하였으며 세계평화를 수호하였다.<sup>36)</sup>

② 1953년 조선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중국 침략의 야심을 포기하지 않았고, 중국에 대해 계속 전쟁위협을 진행하였고, 남조선·대만·인도차이나반도 3곳을 기초로 배치하고 기회를 엿보아 중국에 대한 새로운 침략전쟁을 발동할 준비를 하였다.<sup>37)</sup>

##### ③ 일본

조선전쟁기간에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36억 달러 이상이나 되는 군수물자와 후방물자를 주

34) 『(必修) 中國近代現代史』 하책(인민교육출판사, 2006년 6월 제2판 ; 2006년 11월 제6차 인쇄)에서는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여 중공중앙은 여러 차례 개최하여 연구하였고, 중국이 조선에 출병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했다”(83쪽)며 같은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35) 柴成文· 勇田, 『板门店谈判』, 解放军出版社, 1989, 97쪽 ; 중국 군사과학원(오규열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 군사편찬연구소, 2002, 298~300쪽 ; 조성훈, 「중국 중·고 역사교과서 분석: 미군 및 중국 참전 등」, 『자료집』, 2010에서 인용.

36) 『초급중학과본 중국역사』 제3책, 인민교육출판사, 1987년 12월 제2판, 1988년 6월 제7차 인쇄, 128쪽.

37)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중국역사』 제4책, 인민교육출판사, 2002년 12월 제1판 ; 2005년 11월 하남 제1차 인쇄, 144쪽.

문하였다. 이밖에 일본을 사회주의와 대항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만들기 위하여 미국은 일본 경제를 힘써 부축하였다.<sup>38)</sup>

④ 항미원조 보가위국

항미원조 전쟁의 승리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과 전쟁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조선의 독립과 중국의 안전을 보위했으며; 중국의 국제 위망은 전에 없이 제고되었다. 동시에 이번 승리는 중국의 경제건설과 사회개혁을 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평화 환경을 이룩하였다.<sup>39)</sup>

⑤ 조선전쟁의 영향

조선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방 양대 진영 대립을 배경으로 하는 첫 번째 대규모 국지전이었다. 이 전쟁은 주요 참전국 및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정세에 모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조선반도의 분열 국면을 격화시켰다.

조선전쟁 중에서 신중국이 세계상 가장 강대한 국가인 미국과 3년간 전쟁을 진행하면서 미군은 이겨낼 수 없다는 신화를 깨버렸다. 미국이 전쟁을 통해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를 압살하려는 기도는 철저히 실패하였다. 신중국은 제국주의 세력이 전장을 집 앞까지 확대시키는 상황 하에서 “국가방위”의 항미원조전쟁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중국의 국가안전을 보위하는 것이며,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사업을 지원하여 중국의 국제지위를 크게 제고시켰다. 동시에 이번 전쟁 과정 그리고 전쟁 종결 후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 장기 봉쇄를 진행함으로써 양국관계는 장기간 적대적 상태에 있게 되었다.<sup>40)</sup>

1987년 『중국역사』 교과서(①)는 항미원조는 인민민주전정의 공고와 국민경제의 회복이라는 단원에서 ‘신중국 정권의 건설과 공고’라는 절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조선전쟁의 참여와 경과가 신중국 정권의 건설과 그 공고화에 이바지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중국 정권 건국 초기의 공고화의 내용으로서는 항미원조 전쟁과 동시에 대륙에 남아있던 국민당 구정권의 잔여세력 숙청, 서장의 복속, 각지 각급 인민정부 건립, 토지와 농기구, 가축과 가옥 분배 등이 있었다고 한다.<sup>41)</sup>

2002년 『중국역사』(②)는 조선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중국 침략의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남조선·대만·인도차이나반도 3곳을 근거지로 중국에 대한 새로운 침략전쟁을 발동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하였다.

2003년 『세계근대현대사』(③)는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36억 달러 이상의 물자<sup>42)</sup>를

38) (選修) 『世界近代現代史』 下冊, 人民教育出版社, 2006년 6월 제2판, 2009년 12월 제14차 인쇄, 64쪽.

39) 全日制普通高級中學教科書(必修) 『中國近代現代史』 하책, 인민교육출판사, 2006년 6월 제2판; 2006년 11월 제6차 인쇄, 84쪽.

40)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選修 ③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인민교육출판사, 2007년 2월 제2판; 2007년 7월 제7차 인쇄, 108쪽.

41)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與社會-我們面對的機遇與挑戰』 9년급 전1책, 인민교육출판사, 2005년 6월 제2판; 2006년 6월 제5차 인쇄, 11쪽.

42) 2001년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조선전쟁으로 인해 24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군수 물자 주문을 받았고, 베트남전쟁으로 40억 달러의 군수 주문을 받았다고 하였다.(『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世界歷史』 제2책, 인민교육출판사, 2001년 12월 제1판; 2006년 1월 제5차 인쇄, 70쪽)

주문하며 한국전쟁 특수로 일본 경제가 재기하였고,<sup>43)</sup> 한편으로 미국이 일본을 사회주의의 대항 거점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2006년 『중국근대현대사』(④)는 한국전쟁이 관련 국가에 끼친 영향을 기술하고 있다. 미국은 침략정책과 전쟁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북한은 독립을 유지하고, 중국은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중국은 나라를 지키고, 국제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건설과 사회개혁을 위한 안정된 환경을 주었다고 보았다.<sup>44)</sup> 이것은 중국의 참전이 긍정적이고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수의 사상자와 물적 피해, 세계 속에서의 고립 초래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에는 의도적으로 주의를 돌리지 않은 측면이 있다.

2007년판 『歷史』 選修3(⑤)은 조선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 양 진영의 대립을 배경으로 한 첫 번째 대규모 국지전이었다고 규정하고, 이 전쟁이 참전국과 동아시아 지역 정세에 큰 영향을 주고, 한반도의 분열이 격화되었다고 하였다.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신중국이 세계 최강 미국에 승리하는 성과를 거두고,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사업<sup>45)</sup>을 지원하여 중국의 국제지위를 크게 제고시켰지만, 동시에 종전 이후 미국의 봉쇄정책으로 양국관계가 적대적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보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국전쟁 단원의 말미에 <탐구학습 총괄>에서 소련은 전체 조선전쟁기간에 중국·조선을 위해 무슨 원조를 제공하였나?, 그리고 조선전쟁은 소련·일본에 각각 어떤 영향을 주었나?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관련자료를 찾도록 하고 있다<sup>46)</sup>는 점이다. 교과서 본문에서 한국전쟁이 참전국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지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과서 집필자는 현재의 학생들이 이 단원에서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바로 한국전쟁이 주변국, 참전국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IV. 역사교과서의 한국 경제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해방 이후 한국관련 내용 중 한국전쟁 이외에 한국의 경제발전이 있다. 한국의 경제에 관한 내용은 『중국역사』보다는 『세계역사』 교과서에 주로 실려

43) 서방의 군비확장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켰고, 물자 구입 붐이 일어나게 하였고, 이것도 일본상품이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必修 ①, 인민교육출판사, 2007년 1월 제3판 ; 2007년 6월 제7차 인쇄, 123쪽)

44) 조선전쟁 당시 중국 국내 상황은 백만 이상의 국민당 군대가 서남, 화남과 연해도서에서 저항하고 있고, 새로운 해방구에 있는 잔여세력이 당지의 惡霸 세력과 서로 결탁하고, 경제상으로는 물가가 폭등하고 생산은 위축되었다고 한다.(『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與社會-我們面對的機遇與挑戰』 9년급 전1책, 인민교육출판사, 2005년 6월 제2판 ; 2006년 6월 제5차 인쇄, 13쪽)

45)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전쟁은 반드시 그것의 정의성과 비정의성을 분별해야만 한다고 하고, 레닌은 일찍이 전쟁을 침략전쟁은 곧 非正義 전쟁이고, 해방전쟁은 곧 正義의 전쟁이라고 두 종류로 나누었다.(1956년 초급중학세계역사교과학대강(초안), 『20世紀 中国 中小學 課程標準·教學大綱匯編, 歷史卷』(과정교재연구소 편, 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2월 출판)

46)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選修 ③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인민교육출판사, 2007년 2월 제2판 ; 2007년 7월 제7차 인쇄, 109쪽.

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교과서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제협력관계, 정치적 민주화와 남북평화 등에 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① 아시아 경제의 급속한 발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60-70년대 싱가포르, 한국, 중국 대만과 홍콩 지역의 경제가 고속 발전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과거 그들은 농업경제를 주로 하거나 혹은 중개 무역에 종사하는 항구일 뿐이었고 경제는 비교적 낙후되었다. 그러나 60년대부터 그들은 서방 발전국가가 개발도상국가에 노동집약형 산업을 이동시키는 기회를 이용하여, 외국자본과 기술을 흡수하고 적시에 경제발전 전략을 조정하여 공업화의 길로 급속하게 나아갔다. --- 6-70년대 싱가포르, 한국의 국민생산총액의 연평균 성장률이 모두 10%를 초과하였고, 경제발전속도는 세계 최고였다. 80년대 경제는 여전히 성장을 지속하였다.<sup>47)</sup>

②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경제의 발전

60년대부터 한국정부는 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경제발전목표를 확정하고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었으며 또 서로 다른 시기의 경제발전상황에 근거하여 발전전략을 끊임없이 조절하고 수출을 독려하면서 경제의 안정된 고속 발전을 추진하였다.

1962년에 한국은 제1차 5개년계획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는데 수입품을 대체하는 공업을 발전시켜 수입을 감소하였다. 2년 후에 노력자원이 풍부한 자국의 실정에 근거하여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가공제품을 수출하였다. 동시에 발전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불균형성장' 전략을 실시함으로써 발전과정에 균형을 잡기로 결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공업현대화를 실현하고 후에 농업현대화를 실현하며 수출공업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고 대규모기업소를 중점적으로 지지하며 선진적인 공업단지를 선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이 발전전략은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는바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올라갔다. 1960-1980년 사이에 한국의 일인당 국민총생산액은 17배 남짓이 늘어났고 1990년에는 또 1980년보다 거의 3배나 늘어났다. 90년대에 한국은 이미 선진국의 행렬에 들어섰는바 조선업, 자동차제조업과 전자공업 등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발전에는 여전히 많은 뚜렷한 약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국제시장과 외국자본에 지나치게 의뢰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이 더디고 정권을 틀어쥔 군인과 경제를 통제하는 대자본가의 결합이 가져다주는 탐오부패 등 허다한 폐단들이다.

----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은 경제발전과정에 해외의 자본과 선진 기술을 대량으로 끌어들이고 국제시장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커다란 역할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국제자본과 국외시장에 과도하게 의뢰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위험성도 커지게 되었다.<sup>48)</sup>

2001년에 발간된 교학대강본 『세계역사』(①)에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60-70

47) 『世界歴史』 제2책, 인민교육출판사, 2001년 12월 제1판 ; 2006년 1월 제5차 인쇄, 84~85쪽.

48) 全日制普通高級中學教科書(選修) 『世界近代現代史』 下冊, 人民教育出版社, 2006년 6월 제2판, 2009년 12월 제14차 인쇄, 86~87쪽.

년대 경제가 고속 발전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 싱가포르, 대만, 홍콩 지역과 함께 한국이라고 하였다. 발전의 계기는 60년대부터 외국자본과 기술을 흡수하고 적시에 경제발전 전략을 조정하여 공업화의 길로 급속하게 나아간 것에서 찾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현대화 공업기업>(『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世界歷史』 제2책, 인민교육출판사, 2001년 12월 제1판; 2006년 1월 제5차 인쇄, 85쪽) 사진을 게재하고, 특히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인이 주동적으로 수종의 미 달러를 한국돈으로 환전하고 정부를 도와 경제위기를 넘긴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世界歷史』 제2책, 인민교육출판사, 2001년 12월 제1판; 2006년 1월 제5차 인쇄, 93쪽) 그러나 새롭게 개편되어 2003년에 발간된 『세계역사』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고, 다만 한국을 이미 현대화된 국가로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sup>49)</sup>

2003년 1판이 나온 과정표준의 『세계근대현대사』(②)에는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리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라 고속 발전을 추진한 과정에 대해서는 공업현대화에 이은 농업현대화, 수출우선, 재벌 중시, 공업단지 조성 등의 측면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90년대에 한국은 조선, 자동차, 전자공업 등은 세계적인 수준에 달하며 이미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다만, 한국의 경제발전상에서의 약점도 지적하고 있다. 가령 국제시장과 외국자본에 지나치게 의뢰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이 더디고 정권을 틀어쥔 군인과 경제를 통제하는 대자본가의 결합에서 유래한 부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군인 정권 등은 과거의 사실이고, 한국 경제의 부정적인 면은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밖에 1991년 서울에서의 “서울선언”을 기초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조직되었다는 것을 서술한 교과서도 있다.<sup>50)</sup>

## V. 맺음말

지금까지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해방 이후 한국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한국관련 내용은 시기적으로 1992년 한국과 수교를 하기 전과 수교 후에 변화를 보인다. 수교하기 전에는 한국 관련 내용이 한국전쟁과 북한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한국전쟁은 중국 역사교과서의 해방 이후 주제에서 내용이나 비중 상으로 가장 중시되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한국전쟁에서의 공통 참전국인 것이 원인이지만, 그 내용은 건국과정, 그리고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경제, 정치적 움직임이 약술되고 있는 정도이다. 그리고 분단이라는 대립구조 속에서 남북한의 대화와 교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희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49) 『世界歷史』 9년급 하책, 인민교육출판사, 2003년 12월 제1판 ; 2006년 12월 제4차 인쇄, 71쪽.

50)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必修 ② 인민교육출판사, 2007년 1월 제3판 ; 2007년 6월 제5차 인쇄, 109쪽.

수 있다. 1992년 한국과 수교를 한 이후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한국의 경제발전  
전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빠르게 경  
제발전을 이룬 나라로서 아시아의 5마리 용의 하나로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  
다. 중국과 한국은 수교 20여년 만에 무역 규모는 2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한해 약  
650만 명이 상호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 관계를 반영하여 수교 이후 한국 관련 내  
용이 경제적인 측면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중국 역사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한국관련 내용을 주제별로 살펴보아도 몇 가지 변  
화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한국전쟁에 관한 서술이 해방 이후 점차 그 내용의 깊이나  
분량상으로도 늘어나고 있다. 1950년대 중반에 간행된 역사교과서에서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중국이 참전하여 싸웠으며 간단한 기술이 있을 뿐이었다. 1980년대에 사용된  
교과서에서는 한국전쟁의 발발 배경, 중국의 참전이유, 전쟁의 전개,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하였다. 1992년 수교 이후에는 한국과의 교류가 늘어나고 한국측  
연구성과를 참조함에 따라 한국전 발발 주체를 중립적으로 서술하고 유엔군과 한국군의  
역할도 서술하는 등 보다 객관화된 서술로 바뀌고 있다. 학생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내용 중에서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이유가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도  
주목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참전이유인 ‘항미원조, 보가위국’에서 항미원조는 대외  
적 요소, 그리고 보가위국은 대내적인 배경인데, 초기에는 보가위국이 강조되다가 점차  
항미원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변화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전쟁 기술에서 변화가 없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도 여전히 남아 있다. 가령 한국전쟁의 발발이 미국의 세계제패와 중국 압박의 일환 정  
책의 일환이라고만 설명하는 점, 한국전쟁의 피해상황을 단지 미국측 숫자만을 제시하  
고, 중국이나 북한의 것은 보이지 않는 점, 한국전쟁의 직접적 피해자인 남북한의 주민  
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현재의 한중관계에서 한국전쟁에 대하여 해결해야할 과제 등  
이다.

한국의 경제발전 에 대해서는 외국자본 이식이나 군사정권의 규제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비판도 있지만, 자동차, 전자, 철강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눈부신 성장에 대해서  
는 부러워하는 측면도 문맥에서 엿볼 수 있다.

<토론문>

임상선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서술의 변화」에 대한 토론문

이춘복(중앙대학교)

별지 참조

## **제 2 주제**

### **한국 ‘국사’교과서 전근대사에 나타난 일본 관련 서술의 변화**

**-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

**발 표 자 : 서 인 원 (동국대학교)**

**토 론 자 : 남 한 호 (경북대학교)**



# 한국 '국사'교과서 전근대사에 나타난 일본 관련 서술의 변화

-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

서인원(동국대학교)

- I. 머리말
- II. 고대사 서술
- III. 중세사 서술
- IV. 근세(조선 전기)
- V. 근대 태동기(조선 후기)
- VI. 맺음말

## I. 머리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본을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서로가 협력하고 잘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매우기 힘든 깊은 골짜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역사 교과서 서술에 있어서는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역사의 간극을 매우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정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게 해결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남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전격 방문<sup>1)</sup> 이후 일본의 노다 총리는 종래의 입장을 바꾸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우리 정부를 협박하는 등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일본의 독도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1990년대 경제가 급속히 약화되면서 보수 세력의 목소리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일본의 보수 세력은 침략 전쟁의 상징인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만드는 법을 제정<sup>2)</sup>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강제로 경배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평화 헌법을 개정하여 일본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일본의 침략 전쟁을 반성하는 역사관을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반영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제작하였다.<sup>3)</sup>

이와 같은 일본의 물지각한 태도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은 국제 연대를 통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또한 2001년의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한 후소야 교과서

1) < >, 2012년 8월 10일.

2) <한겨레신문>, 1999년 8월 10일.

3) 안병우 외,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2011, 258쪽.

검정 통과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시민 단체 간의 연합 투쟁이 전개되었으며, 잠시나마 정부 차원에서도 한·일 간의 공동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일 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독도를 둘러싼 갈등을 비롯하여 많은 문제점은 양국이 과거사에 대한 공통된 역사 인식을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 인식은 한·일 양국의 교과서에 반영되어 올바른 역사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교과서의 한국사 왜곡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오히려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의 일본에 대한 서술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반성만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일본에 대한 역사 인식이 어떠한 지도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의 역사학자들과 역사 교육자들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1988년부터 일본의 上越教育大學을 중심으로 일본과 한국 역사 교과서에 대한 기초적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90년부터 1992년에 걸쳐서 번갈아 양국을 오가며 역사 교과서에 대한 심포지움이 열리기도 하였다.<sup>4)</sup>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국사(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는 한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일본 관련 역사 서술의 내용을 시대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sup>5)</sup> 연구 범위에 있어서 근대 이후의 일본 침략과 관계되는 부분은 일단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하겠다. 일제의 침략사는 7차 교육 과정에 한국 근·현대사 과목이 개설된 이후, 기존의 국사 교과서보다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이 기술되었으므로 또 다른 집중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II. 고대사 서술

한국 국사 교과서에서의 일본 관련 서술은 주로 관계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하다보니 외국과의 관계는 대부분 관계사 위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고대사에서의 일본 관련 서술은 가야,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 및 통일신라의 문화 전파 부분, 통일신라, 발해의 일곱 부분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고대사 부분에서 각 국가 별로 일본과 관계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 교류 부분은 1차 교과서부터 따로 우리 문화의 일본 전파 형식으로 따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에 관계없이 같은 단원으로 분류하였다.

### 1. 가야

4) 『속의 한국과 일본』, 해안, 2000, 서문.

5) 본고에서 검토한 교과서는 교육과정 별로 선택하기는 했으나, 제1차 교육 과정에서는 검정제였으므로 일단 이병도, 『국사』, 1956, 일조각을 중심으로 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모두 국정으로 운영되었으므로 국정 『국사』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단, 교과서는 매년 수정 사항이 생길 경우 내용 일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2차는 1970년판, 제3차는 1978년판, 제4차는 1982년판, 제5차는 1991년판, 제6차는 2001년판, 7차는 2002년 초판본을 사용하였다. 특히 7차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근현대사 부분이 분류사 뒤로 오는 바람에 내용 상 많은 부분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초판본을 사용하기로 한다.

먼저 고대사 내용 중 국가 별 일본과의 관련 서술 중에서 가야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화해 왔다. 1차 교육과정상의 교과서에서는 가야에 대한 내용 자체가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 단지 신라의 나물왕 내용에 있어서 백제, 왜와 연결되었다는 점만 거론되었을 뿐이다. 3차 교과서부터 가야와 일본의 교류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가야 토기, 스에키 토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은 5차 교과서부터 등장하고 있다.

## 2. 신라

신라와의 관계에서도 백제와 비교하면 소략한 내용으로 교류라기보다는 내물왕 시기에 금관 가야와의 전쟁 과정에서 금관 가야가 왜의 도움을 받은 내용과 고구려가 신라를 도운 내용으로 언급되었을 뿐이다.

## 3. 고구려

고구려의 경우에는 단 하나의 기사도 서술되지 않았다. 단지 신라 편에서 내물왕 때 신라를 돕다가 금관 가야·왜 연합군과 조우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 4. 백제

고대사의 일본 관련 기사가 제일 많은 국가는 단연 백제였다. 백제와 일본과의 교류가 많았던 만큼 우리나라 교과서 고대 부분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도 문화 전파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편이다. 그래도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근초고왕을 전후한 시기부터 삼국 중 가장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에 비해서는 풍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단 백제 부흥 운동에 대해서는 의외로 5차와 7차 교과서에만 언급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5. 삼국 및 통일 신라 문화 전파

고대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1차 교과서부터 식민 사관 극복이라는 전제 아래 역사 교육을 준비하다 보니 아무래도 삼국 및 통일 신라의 문화가 전파된 것을 별도의 단원으로 설정하여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차 교과서가 작성될 당시부터 내용상에 있어서 우리나라 연구 성과가 다른 정치, 사회, 경제 부분보다 괄목할 만큼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현재까지도 1차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개관적 서술이라기보다는 1)-②, 2)-③처럼 감정에 치우친 서술 형태를 취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삼국은 ..... 또, 대륙과 떨어져 있었으므로 유치한 단계에 있던 일본 문화를 계발하는 데에 삼국의 문화는 큰 역할을 하였다.'와 같이 서술하는 것은 민족주의적 서술이라고 백 번 양보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리한 서술이었다. 또한 3)-③처럼 삼국 음악(특히 백제 음악)의 어떤 면이 일본 음악에 영향을 끼쳤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서술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할지라도 역사 교육 현장에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6차 교과서까지도 우리나라의 이두가 일본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서술하였는데, 이는 일본 문자 가나를 염두에 두고 서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떻게 형성 과정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경향은 7차 교과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7차 교과서에서는 나름대로 객관적 서술을 위한 노력이 보여지기도 한다.

#### 1) 1차 교과서

② 또 일반 문화와 더불어 **그 미술, 공예도 일본에 이식되어 개화하였으므로**, 당시에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의 작품과 그 영향을 받은 미술을 통해 보면 웅진, 사비 시대에는 상당한 발달을 보았던 것으로 알 수 있다.

#### 2) 2차 교과서

③ 삼국은 ..... 또, 대륙과 떨어져 있었으므로 **유치한 단계에 있던 일본 문화**를 계발하는 데에 삼국의 문화는 큰 역할을 하였다.

#### 3) 3차 교과서

③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찍부터 **일본에 건너가 각처에서 식민지를 개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고구려계, 백제계, 신라계 사람들이 가지고 간 새로운 문화가 그 곳 토착 사회를 자극하여 **일본의 고대 국가를 성립**시키게 되었다.

### 6. 통일 신라

통일 신라의 경우에는 4차까지 서술 내용이 없거나(4차) 또는 큰 서술 내용이 없다가 5차, 6차 교과서의 내용이 훨씬 풍부하였다. 오히려 하쿠호 문화 전파 부분을 문화 부분에서 다루었을 경우 7차보다도 더 풍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7차에서는 장보고 부분에서 일본과의 교역 내용이 동아시아 교역 내용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되면서 내용이 적어졌다.

### 7. 발해

1차 교육 과정의 교과서에서는 발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일본과의 교류 관계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2차 교육 과정에 와서야 발해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면서 주로 교역에 대한 내용만 거론되었다. 그러나 5차 교과서에서는 발해의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하여 일본에 보낸 문서 내용이 더해지면서 서술 내용이 풍부해졌다.

### 8. 특징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의 고대사를 중심으로 각 국가와 일본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sup>6)</sup>

첫째, 내용 선정 면에 있어서는 고대 국가 중 가야, 고구려, 신라에 비해 백제 관련 기사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많다. 또한 어느 교육 과정의 교과서를 막론하고 한반도의 문화 전파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외에 따로 항목을 정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반면에 일본과의 쟁점이 되는 내용이나 우리나라 역사 전개에 있어서 불리한 내용은 제외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임나일본부 같은 내용에서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언급을 피하고 있다. 또한 신라의 경우에는 박제상 설화에 나오는 내용이 양국 간의 밀접한 교류를 보여주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굴욕적인 외교 내용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생각해서인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신라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와 관계에 치우친 나머지 기술 내용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상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기술 태도상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 전파 부분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단원명에서도 ‘삼국 문화의 일본 전파’ 내지 ‘통일 신라 문화의 일본 전파’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내용 면에서도 상호 교류의 상황보다는 일방적으로 삼국 또는 통일 신라의 문화가 전파되어 일본 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특히 기술 방법에 있어서도 3차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찍부터 일본에 건너가 각처에서 식민지를 개척하였을 뿐 만 아니라’ 라고 서술되었으며, 4차, 5차, 6차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착 사회의 일본인을 교화시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성과가 지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개연성을 가지고 서술하는 태도는 교과서의 객관성에 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신라 부분에서는 일본과의 교류 관계가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 내물왕 때의 침입 내용만 서술하여 신라와 왜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백제 멸망 시까지 무조건 배척하는 사이로만 서술된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대사 한·일 교류 관계사를 한국 국사 교과서에 서술한 태도를 보면 일본에 대한 문화적 우월성을 과시하고, 시혜적인 문화 전파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특히 해방 이후 식민사관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국사 교육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고대사의 서술보다는 우리나라 역사의 우월성을 너무 강조한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든다면 내용 면에서는 일본 측과 쟁점으로 부각되는 임나일본부와 같은 내용이나 박제상 설화 같은 경우에는 본문 처리보다는 탐구 활동 등에서 양측의 입장이나 사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역사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방안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기술 태도적인 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어 일본 역사 발전에 토대

6) , 한국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고대 한일 관계사 서술,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해안, 2000, 101~110쪽. 고대 특징은 이 부분을 참조하였다.

를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문화가 전파되는 역사 구조의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 전파의 배경에서 고대한·일 간의 정치적, 대외적 배경을 서술하여 문화 교류가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 관계임을 인식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III. 중세사 서술

중세사에서의 일본 관련 서술은 큰 교류가 없었던 관계로 여·몽 연합군의 일본 정벌과 왜구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는 대외 무역 측면에서 송과 요에 비해서도 경제 교류가 적었다는 내용과 대각국사 의천이 교장을 발간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도 불경을 구했다는 일부 내용이 기술되었을 뿐이다. 사실 고려 시대에는 다른 시대에 비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교류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교과서 서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 1. 특징

중세사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당시 일본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종래의 고식적인 서술이 많다는 점이다.<sup>7)</sup> 이는 당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교류 내용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되지만, 내용 서술의 근본적인 연구 없이 우리나라 기록에 나타난 상황만 가지고 서술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 서술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sup>8)</sup>

첫째, 여·몽 연합군의 일본 원정의 경우에도 일본 원정의 무리한 시도, 일본 원정의 실패에 대한 이유 등이 제대로 서술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이를 통해 양국이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조선 시대의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그 영향이 자세히 소개된 것과 비교할 때,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진 듯하다.

둘째,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는 기간의 왜구 내용에 대해서는 왜구의 구성, 왜구의 한반도 침략, 당시 왜구로 인한 피해 상황 등의 상세한 내용 없이 무조건 침략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왜구를 통한 당시의 한일 관계사보다는 최영과 이성계의 대두라는 측면에서만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관계사라기보다는 한국사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일본의 연구 성과에서는 왜구에 대한 우리나라 교과서 서술이 일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왜구에 대한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경제 교류와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 없이 간단한 서술로 되어 있다

7) , 한국 고교생의 중세한일관계사 이해,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혜안, 2000, 149쪽 참조.

8) 이익주, 「한국의 고려·일본관계사 연구 동향」,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혜안, 2000, 141~142쪽 참조.

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내용을 늘려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의 경제 교류가 적은 이유와 해허의 양류관음도가 왜 일본에 있는 지 정도는 기술했으면 아쉬움이 남는다.

#### IV. 근세(조선 전기)

조선 전기에는 대체적으로 왜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세력을 형성한 바탕으로 제시되고 있다. 조선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진왜란이다. 이 임진왜란은 1차 교과서부터 7차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대체적으로 교과서 상으로 3~5쪽에 이르고 있으며, 내용도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대외 관계 부분에서는 5차 교과서부터 쓰시마 섬 정벌 등이 자세하게 서술되기 시작하였다. 경제 교류와 문화 부분의 교류 역시 간략하게 서술되고 있다. 문화 부분에서는 조선 전기의 회화가 일본 무로마치 막부 시기의 미술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강조되고 있다.

##### 1. 특징

대부분 임진왜란의 내용으로 서술된 조선 전기의 대일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sup>9)</sup>

첫째,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 서술은 많으면서도 임진왜란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핵심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임진왜란이 필연적인 역사상의 사건이 아니라 명분이 없는 일본만의 내부 사정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일본 권력층에 의한 약탈적 사건이라는 점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서술처럼 단순하게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과 영향에만 치우쳐 있는 데서 벗어나, 임진왜란의 성격 규명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6차 교과서 이후에는 많이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임진왜란의 극복 과정에서 이순신이나 의병장들의 역할이 너무 강조된 듯한 서술 방식은 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발적인 의병 항쟁의 내용에 대한 서술이 너무 추상적으로 구성되어 애국심을 양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초기에는 양반들에 대한 반발로 의병 항쟁이 오히려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점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역사 교육에 있어서 학습목표의 태도 부분에서 거론되듯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왜란의 영향을 서술하는데 있어서도 고대 문화 전파와 같은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일본의 문화 발전은 임진왜란의 한 영향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문화적 발달을 위해 란을 일으킨 것처럼 오해할 소지의 서술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부

9) , 한국 역사교과서의 근세 한일관계사 서술, 『역사교과서의 한국과 일본』, 해안, 2000, 201~208쪽 참조.

분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서술 방식으로 임진왜란이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 각각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상호 영향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V. 근대 태동기(조선 후기)

이 부분에서는 왜란의 영향으로 비변사와 군사 제도의 변화 과정이 기술되고 있으며, 대외 관계의 변화 과정이 강조되었다. 특히 4차 교과서부터는 통신사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5차 교과서부터는 독도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독도에 대한 내용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부의 강력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부분에서는 왜관 개시와 후시가 활성화되면서 일본과의 교역이 확대되는 내용도 기술되었다.

### 1. 특징

근대 태동기라고 불리어지는 조선 시대 후기에는 임진왜란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대일 교류는 지속되었다. 이 시기 대일 관계의 특징이라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 과정에서 조선과 일본의 국교 재개는 일본의 경제 사정 악화와 조선의 선진 문물 도입이라는 점에서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일본이 왜 조선과 교류하는 것이 시급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생각할 여지를 주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조선의 시혜적 입장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막부와 쓰시마 도주와 관계, 조선 정부와 쓰시마 도주와의 관계 등 무역적으로 국제·국내적 다양한 조건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둘째, 통신사 파견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 측 입장만이 강조되고 있다. 일본에서 통신사 파견이 가지는 의의와 내용 등에 대해서도 기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신사 교류의 허락 이유와 임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분류와는 벗어나는 입장이 기술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통신사 파견을 자신들의 지위 유지에 이용한 막부의 쇼군 입장에서의 파악이라든가, 통신사의 군사 정보 획득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선 정부 입장에서도 일본 막부의 통신사 요청을 절대적으로 환영하였다는 점도 밝힐 필요는 있다. 통신사 파견은 조선과 일본 양국의 이해와 목적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임진왜란을 전후한 조선의 일본과의 교류에서는 임진왜란 발발의 原罪, 통신사를 통한 조선의 우월성 강조 등의 기술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임진왜란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이나, 동아시아 삼국에서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소략하게 다루어져 왔다.

셋째, 5차 교과서부터 강조되고 있는 독도에 대한 내용의 문제점이다. 안용복의 업적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독도 문제는 물론 근현대사 부분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간략히 소개해도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안용복의 문제는 앞 뒤 없이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으므로, 안용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탐구 학습이나 인물 학습의 내용으로 제시하여 안용복 서술의 의미를 살려야 할 것이다.

## VI. 맺음말

7차 교육 과정까지 국사 교과서의 전근대사에 있어서 일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임지왜란에 대한 내용이 가장 풍부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내용에 있어서 역사적 중요성보다는 식민 사관 극복을 위한 목적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느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고대사에 있어서는 시혜적인 입장의 기술 내용이 많으며, 중세사 및 근세사에서는 일본이 우리에게 끼친 피해가 강조되고 있다. 7차 교육 과정과 국사 교과서까지 오면서 점차 객관적이고 사실적 입장에서의 기술이 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긍정적인 관계가 부족하다고 해도 건전한 미래 관계를 설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객관적 입장에서의 대일 관계 설정에 노력하여야겠다. 특히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동아시아 과목이 개설됨에 따라 일본에 관련된 대외 관계사가 강조됨에 따라 한국사 과목에서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역사 내용보다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입장에서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982년의 일본 역사 교과서 기술 내용을 둘러싼 한국·중국 등 아시아 각국의 비판을 계기로 한·일, 한·중 양국의 교과서 서술에 대한 정부·비정부 단체들의 많은 노력이 전개되었다. 특히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교과서 개선 운동을 바탕으로 일본과 한국의 역사 교과서 개선 노력도 20여년을 넘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간의 역사적 관점의 차이는 멀기만 하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국정 혹은 검정 교과서 체제 아래에서 민족주의를 넘어선 국수주의적 역사 인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을 지배하는 해석과 구조는 상호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과 구조는 우리들이 모두 이해해야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인근 여러 나라가 함께 지향하는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역사는 상호 주관적이기 때문에 입장이 틀리고, 다른 입장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대화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sup>10)</sup>

위의 글처럼 일본의 역사 왜곡을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의 일본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용적으로 어색한 것과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수정하여야 한다.

10) , 한일 합동 역사 교과서 연구회의 제1회 연구회 격려문, 1991년 3월.

<토론문>

서인원 「한국 ‘국사’교과서 전근대사에 나타난 일본 관련 서술의 변화」에  
대한 토론문

남한호(경북대학교)

역사 교과서는 역사교육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는 연구 대상입니다.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를 집약한 역사서인 동시에 학생들이 역사수업의 과정에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역사교과서는 자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한 타자인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단순한 교재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발표자의 발표문은 시기적으로 필요하며 중요한 연구로 여겨집니다. 양국 간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높아지면서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도 역사 교과서의 서술 내용의 변화 추이와 특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론문에서는 발표문에서 다루고 있는 일본 관련 서술의 분석 이외에도 발표문의 논제를 넘어선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문제까지 다루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부터 확인하고자 합니다. 발표문에서 다루고 있는 교과서에 대한 학교급별 범위를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발표문의 제목부터 머리말까지의 논지로 보아서는 교수요목시기부터 2009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발행된 ‘국사’ 교과서, 시기적으로는 전근대시기를 분석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발표문의 내용에서는 고등학교 ‘국사’(혹은 ‘한국사’) 교과서로 한정되어 있으며, 7차 교육과정기의 10학년 국사 교과서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아울러 교수요목기부터 현재까지의 일본 관련 서술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명확하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 분석 과정에서 특징으로 이어지는 정합성을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의도하신 분석의 기준과 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3. 교과서 발행 체제와 관련하여 발표자께서는 제2차 교육과정에서 제7차 교육과정까지를 국정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각주 5 참고) 그러나 정책과목—사회, 국사, 도덕—교과서가 국정화 또는 단일화된 것은 제3차 교육과정기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979년 교과서 제도의 개정에 따라 교과서 발행 체제가 국정·검정제에서 1종·2종으로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과 1종 도서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국정과 1종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디다만 검정과 국정(1종 도서 포함) 발행 시기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역사교과서를 통해 학생들과 역사수업을 같이 해나가는 입장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내용 요소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입니다. 제3차 교육과정기부터 국사 교과서의 분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내용 요소의 감축이 중요한 교과서 집필 기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발표자께서 제안하신 일본 관련 서술을 적극 반영한다면 학습 내용 요소가 늘어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교과서의 내용 구성의 원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5. 국사 교과서에는 정식화된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특히고대사의 경우 개별 연구자의 연구 방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으며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가야와 왜의 관계, 왜의 실체 문제는 여전히 밝혀진 부분보다 후속 연구에서 가려내야 할 부분이 많은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관련 서술이 두루뭉수리하게 처리되거나 한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6. 마지막으로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부터 넓게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험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국가 교육과정은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요구되는 교육내용, 그 내용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연한, 학습시간의 배당 등을 포함하는 교육의 전체 계획으로 법적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내용이 선정되며, 구성됩니다. 국사 교과서의 내용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시기별 교육과정의 제·개정 배경과 목표, 내용요소, 지도상의 유의점과 연계하는 것이 서술상의 변화 분석의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될 것입니다.



## **제 3 주제**

### **한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중국 관련 서술의 변화 -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

**발 표 자 : 송 요 후 (동국대학교)**

**토 론 자 : 최 진 열 (경상대학교)**



# 한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중국 관련 서술의 변화

-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

송요후(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I. 머리말	
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교과서	2. 분석 방법
III. 교과서 서술 내용 분석	
1. 선사시대-고대	2. 중세(고려시대)
3. 근세(조선시대; 개항전까지)	4. 근대(개항 이후부터 8·15 광복까지)
5. 현대(8·15 광복부터 현재까지)	
IV. 맺음말	

## I. 머리말

교과서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보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일반교양을 다루고 있는 교육용 교재이다. 특히,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중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적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나 정치적 가치 판단이 배제될 수 없다. 역사 교과서, 특히 국정역사 교과서에서는 그 교재가 나온 목적과도 관련하여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교과서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가치 판단이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용어들에 주의하면서, 교과서 서술 상의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고학이나 역사적 연구 업적들의 축적에 따라 서술 내용이 확대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또 하나는 위의 가치 판단과도 관련되는 것인데, 역사적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그에 대한 해석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겠고,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이 변화되는가에도 신경을 써서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시기마다의 교육과정의 방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나, 역으로 서술 내용의 변천을 통시적으로 봄으로써 각 교육과정의 방침이 어떻게 변화되었을 것인지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다루는 주제가 시기마다 다양하여, 어떠한 일관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적 연구 수준이나 정치, 경제, 사회적 지평에서 과거의 정리된 역사적 기록들을 반추해 보고 문

제점을 지적해 본다는 점에서는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II. 연구 방법

### 1. 분석 대상 교과서

이 연구는 한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중국 관련 서술이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정 교과서인 『고등학교 국사』를 분석 대상으로 하겠다. 필자가 열람했던 교과서의 목록은 아래 <표1>와 같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차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온 국사(한국사) 교과서는 검인정임을 알 수 있다. 여러 종류들의 교과서들이 있지만, 다 참고하지 못하였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교재들이 나오는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안에 실려 있는 집필 방침을 따랐을 것임에 틀림없으므로, 교재들 간에 서술된 역사적 사실들의 내용들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바탕을 이루는 이념이나 아주 중요한 용어들의 사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서술의 흐름을 파악함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머지 교재들은 전부 국정 교과서이다. 다만 제5차 교육과정의 국사 교과서를 참고하지 못했다.

【표 1】 분석 대상 교과서 목록

교육과정 차수 <sup>1)</sup>	도서명	편찬자	초판 발행연도	인쇄 연도	발행연도	저작권자 (출판사)	비고(검정일)
II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이원순		1972	1972	교학사	1968.01.11 문교부
III	위와 같음	문교부	1974		1974	문교부	
IV	고등학교 국사 (상·하)	국사편찬위원회, 1종 도서 연구 개발위원회 편찬	1982	1983	1983	문교부	
VI	고등학교 국사(상)	위와 같음	1990	1996	1996	교육부	
VI	고등학교 국사(하)	위와 같음	1996	1998	1998	교육부	
VII	고등학교 국사	국사편찬위원회 · 국정도서편찬 위원회	2002		2008 3쇄 발행	교육인적 자원부	
2007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한철호 외5명	2011			(주)미래엔 컬처그룹	2010 교육과학 기술부

## 2.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시대적 범위는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에 걸친 것이다. 우선 이 전체시기를 고대, 중세, 근세, 근대, 그리고 현대로 나누었다. 고대는 우리나라 선사 시대부터 신라의 멸망까지, 중세는 고려시대, 근세는 조선 건국부터 문호 개방 이전까지, 근대는 문호 개방 이후에서 8·15 해방 이전까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는 8·15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정하였다. 우선, 고대에서 현대까지를 관통하는 주제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서 각 시기마다 역사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정하고 각 교육과정 시기에 나온 교과서들에서는 어떻게 서술이 되어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같은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라 할지라도, 매년 마다 수정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도를 달리하는 교과서도 다 수집하여 일일이 비교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바뀐 내용도 이웃하는 교육 과정에 걸쳐서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교육과정 시기마다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내용의 변화 없이, 문장 순서나, 토씨 정도 바뀌거나, 또는 복잡한 내용들이 단순화된 것들—물론, 중요한 내용이 삭제된 것에는 필자나 교육과정 입안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III. 교과서 서술 내용 분석

편의상 크게, 위와 같이 다섯 시기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 1. 선사시대-고대

【표 2】

교육과정	민족의 기원	청동기 문화	고조선의 영역	위만과 한의 대립	발해
II	우리 민족의 한반도로의 이동경로만 제시	금석병용기	우리나라 최초의 부족 국가인 고조선은 대동강 유역에서 자라났다. 기원전 4세기경에는 그 세력이 남으로 진번, 동으로 임둔, 북으로 예맥, 락오허강까지 미쳤다.	한은 동방 진출의 야심을 품고 조선을 공격.	고구려의 유장 대조영. 고구려가 망한 후 북부 지방의 고구려 유민들은 북으로 나가 옛날 부여가 자리 잡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북만주 땅에 발해를 건국. 신라와는 별로 통교가 없었다.

1) 교육과정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제1차 교육과정: 1954-63년, 제2차: 1963-73년, 제3차: 1973-1981, 제4차: 1981-1987, 제5차: 1987-1992, 제6차: 1992-2002, 제7차: 2003-2010, 2007개정: 2011-

III	서술 내용 없음. 동방 문화권이 구체적으로 지도에 제시됨	만주와 북한 지역, 서기 전 10세기	중국 춘추시대에는 남만주와 한반도에 걸친 영역 차지	위만이 중계 무역 이득 독점. 한의 동방침략 기지인 요동군 위협	고구려인 대조영. 일족을 이끌고 동모산에 와서 고구려인과 말갈족을 합하여 연합국가를 세움. 당은 신라로 하여금 발해를 견제하는 정책을 썼다. 발해와 신라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립하여 항상 당나라에 이용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IV	우리 조상들은 요서, 만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기원전 10세기경 북쪽 지방에서 시작	전국시대에 세력을 요서지방까지 뻗쳐 만주 남서부 일대까지 세력권	중계무역 방해. 요동 지역 위협	고구려인 대조영. 일족을 이끌고 길림성 돈화현 동모산에 와서 고구려인과 말갈족을 합하여 건국. 당은 신라가 차지한 대동강 이남 지역의 소유를 정식으로 인정하면서 신라로 하여금 발해와 대립하는 정책을 취함.
VI	신석기인들. 요서, 만주, 한반도	요령, 길림성 지방을 포함하는 중국 동북 지역으로부터 한반도. 비파형동검	왕검성을 중심으로 성장, 한반도까지 발전. 요하를 경계선으로 연과 대립	중계무역 이득 독점. 위만의 경제, 군사적 발전	고구려의 장군 출신 대조영. 요동 지방의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옮겨, 길림성 돈화현 동모산을 중심으로 건국.
VII	요령(랴오닝)성, 길림(지린)성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유적은 중국의 요령성, 길림성 지방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에 걸쳐 널리 분포.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요령 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 문화 이룩	중계무역 이득 독점. 위만의 군사 경제적 발전	고구려 장군 출신 대조영. 7세기 말 당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고구려 유민과 말갈집단들은 전쟁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던 만주 동부지역으로 이동하여 길림성의 돈화시 동모산 기슭에 발해 건국.
개정					

## 2. 중세(고려시대)

【표 3】

교육 과정	거관족	여진족/묘청의난	원의 내정 간섭/공민왕의 개혁정치	요동정벌
II	변함없는 고려의 친송 정책에 위	금의 고려에 대한 압력. 고려는 국론이 분	특이한 내용이 없음. 공민왕은 대륙에서의 원·	명이 나하치를 항복시키고 만주로

	<p>협을 느끼게 된 거란은, ... 그 후 거란은 강동 6주 문제로 누차 침입을 거듭하였으며, ... 귀주 대첩 이후 양국 사이에는 화평이 성립되었다.</p>	<p>분. <u>대외적 평화를 바라던 실권자</u> 이자겸은 군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의 요구를 승인. 이자겸의 난으로 사회적 혼란. 이를 틈타 묘청 일파는 서경 천도, 금국정벌, 칭제 건원을 주장. ... 묘청의 난은 서경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개경 세력에 반대하여 독립 의식과 도참설을 이용하여 일으켰던 난.</p>	<p>명 교체기에 이르러 과감한 배원 정책과 개혁 정책을 내세움. ... 명과의 국교를 폄했다. 그러나 공민왕이 말년에 덕망을 거듭 잃어 갔고, 신돈의 행패가 격심해지자, 세론이 악화되어 배원과 개혁의 노력도 헛되어 되고 말았다.</p>	<p>진출하여 <u>철령위</u> 설치를 통고해 오자 <u>최영 등 친원파</u>는 명의 토벌을 적극 주장. 이성계는 ... 북벌을 반대하였으나, 결국 <u>랴오똥</u> 정벌에 출군. ... 위화도에서 갑자기 회군하여 개경으로 들어감으로써 친원파를 소탕하고 ...</p>
<p>III</p>	<p>요는 수도만 함락시키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 기동력이 강한 기병으로 깊숙이 쳐들어 왔으나 대패,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함. .... 거란의 침입으로 고려의 북진 정책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음. 그러나 이 전쟁으로 오랑캐를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북방민족에 비하여 우리 문화가 우수함을 자각. ... 고려의 북진 정책은 친송 정책과 문화에 치중하는 정책으로 변하여 가는 경향을 띠게 되고, 이는 국내 보수 세력을 성장시키는 작용을 함.</p>	<p>금이 요를 멸한 뒤, 고려에게 사대의 예를 요구함. 일반 여론이 금에 대한 사대를 불쾌히 여기던 때라 서경파는 북벌을 주장. 서경파는 금과의 충돌이 송에게 이용당할 위험이 있다고 이에 반대함.</p>	<p>원의 내정 간섭으로, 왕이 하루 아침에 퇴위하여 원으로 불려가기도 하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도 다시 전왕이 와서 왕위에 오르는 등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짐. 고려 신하들은 왕과 왕전왕파로 나뉘고, 원의 공주가 왕비로 되면서, 이에 아첨하는 왕비파까지 생겨 다툼이 계속됨. 원은 14세기 후반에 각처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쇠약하여져 감. 공민왕은 이 때를 이용, 원에 붙어서 왕권을 누르고 있던 기철, 권겸 등의 반역배 숙청. 정동행성을 폐지. ... 인당, 최영으로 하여금 <u>랴오똥</u> 지방을 공략하게 하였으며, 원의 간섭으로 변경되었던 관제를 다시 복구하였다. ... 원은 공민왕을 물리치려고 원에 있던 <u>충선왕</u>의 서자 <u>덕흥군</u>을 고려 왕으로 앉히고 고려인 <u>최유</u>를 앞세워 침입해 옴. 최영이 이를 격퇴함. 또, 이 무렵 원의 장수 <u>나하추</u>가 침입하여 왔으나, 이성계가 격퇴함. 이와 같이 계속되는 외적의 침입</p>	<p>공민왕이 암살되고, 또 명의 사신이 귀국하다가 봉황성 부근에서 살해되자, 명은 이를 고려 친원파의 행동이라고 생각, 고려에 압력을 가함. <u>우왕</u> 때에는 원이 소유하고 있던 <u>철령</u> 이복의 땅에 대해 명에 반환을 요구. 최영은 원·명 교체기의 혼란을 타서 <u>랴오똥</u> 지방의 공략을 주장, 이성계, 조민수에게 <u>랴오똥</u> 지방을 공략하게 함. 군사적 견지에서 <u>랴오똥</u> 지방 공략이 불가함을 주장하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정권을 잡음.</p>

			은 공민왕의 부흥 운동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IV	3차에 걸친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고 고려, 송, 요 삼국 간에 평화가 유지된 것은, 고려의 힘으로 인하여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요는 수도만 함락시키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동력이 강한 기병으로 고려 깊숙이 쳐들어왔으나, 각처에서 성곽을 근거로 한 고려군의 반격을 받고 대패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없었다.	고구려 때부터 우리의 문화를 보급받아 성장해 온 여진인 금에게 사대의 예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반대가 많았으나, 평화 유지라는 현실 문제 때문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원은 14세기 후반에, 각처에서 한족(漢族)의 반란으로 쇠약해짐. 공민왕은 이때를 이용, 친원 세력인 기철 등을 숙청하고 ... 인당, 최영에게 요동 지방을 공략하게 함. ... 원은 공민왕을 물러나게 하기 위하여 북서에서 침입하여 왔으나, 최영이 이를 격퇴. 또, 원의 장수 나하추가 북동에서 침입. 이성계가 이를 물리침. 공민왕은 요동 땅 수복을 위해 지용수와 이성계에게 북서, 북동 양면에서 북진하게 함. 이성계는 황초령을 넘어 압록강을 건너 요양을 점령,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임을 선포. 뒤에 명의 군대의 점령으로 그들의 지배하에 들어감.	우왕 말 고려와 명 간에 영토 분쟁 발생. 명은 원의 쌍성총관부 관할하의 고려 땅을 그들의 직속령으로 삼겠다고 고려에 통보. 고려는 크게 분개, 명이 차지한 요동 지방을 회복, 옛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를 되찾고자 요동 정벌을 계획. 이를 둘러싸고 조정의 의논이 나뉨. ... 최영의 주장대로 정벌군 파견. 이성계 등은 위화도 회군. ... 이를 계기로 이성계 등은 정치적 실권 장악. ...명과의 관계를 호전시켜 나감.
VI	거란은 그 뒤에도 자주 침입을 시도하여 국경 방면에서 충돌이 계속되었으나, 그 때마다 이를 격퇴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송, 요 삼국 간의 국제 관계가 세력 균형을 유지하게 되었다.	금이 고려에 압력을 가함. 고려 조정에서는 금에 대한 외교 문제로 분쟁이 일어남. 이 자겸의 난으로 궁궐이 불타고 민심 불안. 개경의 지덕이 쇠해 서경으로 서울을 옮겨야 한다는 여론. 묘청 등의 서경 천도 적극 추진. 칭제건원과 금국정벌 주장.	교육과정 IV 시기의 내용과 동일함.	교육과정 IV 시기의 내용과 동일. 다만, 이 부분은 단원 IV. 근세 사회의 발전, 1. 근세 사회로의 전환, (1) 신진 사대부의 대두라는 절에서 나옴.
VII	고려가 거란의 침략을 계속 막아내자 거란은 더 이상 고려를 침략할 수 없었고, 송을 침략할 수도 없었다. 그리하여 고려와 송, 거란	여진족은 그 후에 더욱 세력을 키워 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금을 건국하였으며, 거란을 멸망시킨 뒤 고려에 군신 관계를 요구해 왔다	원의 내정 간섭으로 고려는 자주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원의 압력과 친원파의 책동으로 인해 정치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공민왕은 원·명 교체기를 이용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또 고구려의 옛 땅을	명이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하자, 최영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정벌을 단행.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 최영 제거 뒤, 군사적 실권을 장악,

	사이에는 세력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었다.		되찾기 위하여 요동 지방을 공략하였다.	본격적인 개혁의 계기 마련.
개정				

### 3. 근세(조선시대; 개항전까지)

【표 4】

교육과정	대명 관계	임진왜란	대청 관계
II	원·명 교체를 배경으로 성립된 조선은 명에 대하여 사대의 예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책봉을 받고 그 연호를 썼으며, 조공을 보내고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형식의 국제 관계를 사대라 하나, 실지로는 내정·외교에 아무런 제약을 받음이 없었다. 조공을 바쳤다 하나 이는 조공과 이에 대응하는 사여라는 형식을 취한 물물 교환의 관무역 활동이었으며, 사대 사신이라 하나 사행을 통한 문화의 섭취와 사행에 수반되는 사무역에 더 큰 의의가 있었다. 수도 한성에서 연경으로 뺀 연행로는 변형적 대상의 왕래였고, 대륙 문화와 서양 문물 전래의 문화적 도관이기도 하였다.(142쪽)	왜군의 승세를 꺾고 전세를 돌이키는 데는 명 원병의 힘도 컸으나, 주로 우리 수군과 의병의 활동에 힘입은 바 컸다. ... 명군의 출병으로 평양에서 후퇴하게 된 왜군은, 민족의 항쟁 앞에서 날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전세에 당황하여, 심유경의 화평 공작에 말려들게 되었다. 4년을 두고 끌어오던 화의 교섭은 결국 명·일의 불신 가운데 절렬되고 ... . 명은 이때의 출병으로 나라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39~142쪽)	광해군은 왜란의 상처를 정비하기 위하여 내치에 힘쓰는 한편, 신흥 후금에 대비코자 도성 주변의 산성을 수축하고 국방을 강화하였다. 명이 후금을 치기 위하여 군을 요청하였을 때에도 군을 출동시키기는 하였으나 적극적 개입은 피했다. 그러나, 서인에 의한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서 폐출되었다. 만주에서의 지배권을 확립한 후금은, 조선이 인조반정 후에 소란함을 이용하여 중원 침입에 앞서 후고의 염려를 덜고자 침략을 감행했다. ... 지도 계급의 당쟁으로 혼란하였던 우리 나라는 ... 후금과 강화를 맺고 평화를 회복하였다. 정묘호란 후 내몽고 지배에 성공한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개칭하고 우리 나라에 대하여 군신의 예를 강요했다. ... 청 태종이 재차 대군으로 침입해, ... 전쟁은 남한산성 농성전 끝에 강화가 성립되었고 ... .
III	고조선과 고구려의 옛 영토이던 만주 룡오똥 지방은 우리 민족이 많이 거주할 뿐 아니라, 중국과 북방민족의 중간에 위치한 요충지이므로 고려 초기 이래로 기회만 있으면 수복하려 하였다. 공민왕 때에는 고려	한편, 조선의 요청으로 명나라 원병이 아군과 합세하니, 일본군은 더욱 곤경에 몰려 남방으로 퇴각하다가, ... . 명과 화의를 진행시킴	누루하치가 나타나 여진족을 통일하고, 1616년에 황제를 자칭하여 국호를 금(후금)이라 하였다. 후금은 오랫동안 상국으로 받들어 오던 명과 조선을 경략할 야욕을 품고 먼저 조선을 쳐서 조·명 관계를 끊은 다음에 명을 칠 계획을 세웠다. ... 왜란 후에 즉위한 광해군은 신중한 중립적 외교 정책으로 후금과의 마찰을 피하

	<p>의 원정군이 랴오퉁의 동녕부(성징 지방)와 랴오양 지방을 정벌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고, 우왕 때에도 최영의 주도하에 랴오퉁 정벌이 단행되었으나, <u>이성계 일파</u>는 시기가 적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중도에서 회군하고 말았다. 조선 건국 후에는 위화도 회군을 단행한 그들 자신에 의하여 랴오퉁 지방 수복 계획이 추진되었으나, 주동 세력인 정도전 일파의 실각으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p> <p>조선은 ... 대외적으로는 명나라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사대 외교를 추구하여 17세기 초까지 두 나라는 대체로 평화 관계를 유지하였다.</p>	<p>으로써 전투는 한 때 소강 상태를 이루었다. 그러나 1597년에 화의가 결렬되면서 일본군은 재차 침입하여 왔다. 이번에는 조선과 명의 원병이 즉각 대응하였다. .... 한편, 명은 대군을 조선에 파견하였기 때문에 재정적인 손실을 많이 입고 국력이 쇠약해져서, 그 후 반세기 만에 만주족이 세운 청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다</p>	<p>고 강병책에 힘썼으나, 그를 몰아내고 집권한 인조와 서인 정권은 강경한 친명 반금 정책을 취해 후금의 신경을 자극하였다. ... 이괄의 잔당이 만주로 들어가서 후금의 군사를 향도하고 쳐들어왔다. ... 조선은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1개월여 만에 굴복하여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었다(정묘호란). 후금은 그 후 ... 국호를 청이라고치고, 조선에게 형제 관계를 군신 관계로 바꿀 것을 요구해 왔다. 이 무례한 요구에, 조정에서는 청을 즉시 무력으로 치자는 주전파와 무력 충돌을 피하고 내실에 치중하자는 주화파로 갈려 격론을 벌이는 동안 청의 침입을 받아, 조선은 ... 항복하여 굴욕적인 강화를 맺었다. 조선은 청과 군신관계를 맺고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하였다(병자호란). ... 청에 볼모로 잡혀갔던 봉림 대군이 임금에 되자, ... 청에 복수하고자 북벌 계획을 꾀하였으나, 나약한 국력과 민생을 외면한 대외 전쟁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p>
IV	<p>조선 왕조는 명과 친선관계를 유지하여 왕권과 국가 안전을 도모하는 등 전통적으로 우호 친선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건국 초기에는 만주, 특히 요동 지방과 여진 문제 등으로 이해가 엇갈려 양국 사이의 관계가 거북한 때도 있었다. 요동 지방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옛 땅으로, 동아시아 세력 판도를 가름하고 우리 민족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요충지였으므로, 고려 초기 이래 꾸준히 국토 수복 정책이 수행되어 왔다. 조선 초기에도 조직적인 요동 수복 운동을 전개하였다. <u>정도전은 스스로 진법을 만들어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량미를 비축하여</u></p>	<p><u>명의 이여송이 거느린 5만 명의 지원군이 도착하여 조선군과 합세하였다. 일본은 전쟁 초기부터 정명가도를 내세워 명을 침략할 것을 공언했기 때문에, 명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쟁을 주시하다가 원병을 파견한 것이었다.</u> 조·명 연합군은 왜적에게 점령당했던 평양성을 탈환하고, 남쪽으로 패주하는 왜군을 추격하였다. ... 또, <u>명도 평화적으로 왜군을 철수</u></p>	<p>후금은 중국 대륙을 차지할 야심을 품고 명에 대하여 선전 포고를 하였다. 명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공동 출병을 제의해 왔으나,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 준 명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려웠지만, 신흥하는 후금과 적대 관계를 가지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u>강홍립으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출병하게 한 다음에 후금과 휴전하게 하였다.</u> 이리하여, 조선은 명과 후금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내치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인조를 옹립한 서인 정권은 광해군 때의 <u>중립적 외교 정책을</u> 지양하고 친명배금 정책을 뚜렷이 하였다. 즉, ... 명에 대하여 대의 명분을 앞세워 친선을 도모하고 후금과는 관계를 끊어 버렸다. 이러한 외교 정책의 변화 속에 <u>후금을 자극하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모문룡의 가도 주둔 사건],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 후금과 내통한 사건].</u> 이에 후금은 군대를 동원하여 압록강을 넘어 쳐들어 왔다</p>

	<p>북방으로 운반하였으며, 여진족을 회유하여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다. 조선측의 이와 같은 의도를 일찍부터 알고 있던 명에서는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해 왔다. 조선측은 적극적인 외교로 명의 의심을 무마시키면서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갔으나, 태조 때에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에, 태종 때부터는 요동 수복 운동을 보류한 채, ... 대명 관계가 호전되었다. 그 후, 조선과 명은 선린 우호 관계를 도모하면서 문화교류를 증진. 대명 외교는 실리 추구하고 국토 확장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긴장이 계속되었으나, 후에는 점차 지나친 친명 정책으로 흐르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p>	<p>시킴을 위해서 휴전 제의를 받아들여 담판을 시작하였으나, 서로의 이익을 크게 내세웠으므로 3년간에 걸친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조선군이 명의 원군과 협동하여 직산에서 적의 북상을 막고 남쪽으로 내몰았다. 조선과 명이 전쟁에 지친 틈을 이용하여 북방의 여진족이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p>	<p>(1627).  청 태종은 스스로 대군을 이끌고 쳐내려와 서울을 점령하였다(1636). ... 남한산성에 피신하여 45일간 대항하였으나, 사태가 기울어진 것을 깨닫고 주화파인 최명길 등이 중심이 되어 청과 강화를 맺었다. <u>이리하여, 조선은 청과 군신 관계를 맺고, 명과의 관계를 끊었으며</u> .....</p>
<p>VI</p>	<p>조선은 명과 친선관계를 유지하여 왕권과 국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비록 국초에 요동 지방과 여진 문제 등으로 이해가 엇갈려 양국 사이의 관계가 불편한 때도 있었지만, 태종 때부터 관계가 호전되면서 문화교류가 활발하였다. <u>조선에서는 명에 대하여 1년에 수차례의 정기적인 사절을 파견하였고, 그 밖에도 수시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사절의 파견은 그 목적이 주로 정치적인 것이었으나, 문화의 수입과 물품의 교역도 이를 통하여 행해졌다.</u><sup>2)</sup> 그러나 <u>조·명 간의 무역은 조선 사회에 폐단을 자아내기도 하였다.</u> 즉, 명의 과다</p>	<p>명의 지원군이 도착하여 조선군과 합세하였다. ... 이에 왜군은, 조선군의 공격을 늦추고, 자신들의 전열을 다시 가다듬기 위하여 휴전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양쪽이 서로의 주장을 고집하였으므로 3년간에 걸친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 조선군은 명군과 협동하여 직산에서 적의 북상을 막고 남쪽으로 내몰았다.</p>	<p>누루하치가 나타나 세력을 키워 후금을 세우고, 명의 변경을 위협하였다. 명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조선에 공동 출병을 제의해 오자, 광해군은 ... 강홍립으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출병하게 한 다음, 정세를 보아 항배를 결정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결과, 광해군 시대에는 이와 같은 중립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국내에 전화가 미치지 않았다. 인조를 옹립한 서인 정권은 광해군 때의 중립적 외교 정책을 지양하고 친명배금 정책을 뚜렷이 하였다. 즉, 명에 대해서는 대의 명분을 앞세워 친선을 도모하고 후금과는 관계를 끊어 버렸다. 이러한 외교 정책의 변화 속에 후금을 자극하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모문룡가도 주둔 사건],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 후금과 내통한 사건]. 이를 구실로 하여, 후금은 군대를 동원하여 압록강을 넘어 쳐들어오니, 이를 정묘호란이라 한다 (1627). 후금은 세력이 더욱 커져서 국호</p>

	<p><u>한 금·은의 요구를 피하기 위해 국내의 금·은광을 거의 폐쇄하기도 하였고, 사치스러운 견직물의 수입으로 국내 수공업이 위축되기도 하였다.</u> 대명 외교는 실리 추구하고 국토 확장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긴장이 계속되었으나, 후에는 점차 지나친 친명 정책으로 흐르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함.</p>		<p>를 청이라 고치고, 황제라 칭하면서 조선에 대해 군신 관계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한 대책을 둘러싸고 조정의 논의는 주전, 주화의 양론으로 갈라졌다. 결국, 대세는 척화 주전론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병자호란이 일어났다(1636). 청 태종은 스스로 대군을 이끌고 쳐내려와 서울을 점령하였다. ... 사태가 기울어진 것을 깨닫고 <u>주화파인 최명길 등이 중심이 되어 청과 화의를 맺었다.</u></p>
<p>VII</p>	<p>조선은 사대 교린의 외교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명과는 태조 때 정도전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요동 정벌의 준비와 여진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불편한 관계가 유지된 적도 있었지만, 태종 이후 양국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교류가 활발하였다. 조선은 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대 정책을 유지하였으나, 명의 구체적인 내정 간섭은 없었다. 명에 대한 이와 같은 사대 외교는 왕권의 안정과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자주적인 실리 외교였고 선진문물을 흡수하려는 문화 외교인 동시에 일종의 공무역이었다.</p>	<p>선조는 의주로 피난하여 명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명의 원군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 이후 명도 경상도 해안으로 밀려난 왜군 사이에 휴전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조선도 전열을 정비하여 왜군의 완전 축출을 준비하였다. .... 3년여에 걸친 명과 일본 사이의 휴전 회담이 결렬되자, 왜군이 다시 침입해 왔다(1597).</p>	<p>후금은 명에 대하여 전쟁을 포고하였다. 이에 명은 후금을 공격하는 한편,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광해군은 ...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1만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명을 지원하게 하되,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명령하였다. 결국 조·명 연합군은 후금군에게 패하였고, 강홍립 등은 후금에 항복하였다. 이후에도 명의 원군 요청은 계속되었지만, 광해군은 이를 적절히 거절하면서 후금과 친선을 꾀하는 중립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여 후금을 자극하였다. 후금은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쳐들어왔다(1627). ... 후금의 군대는 보급로가 끊어지자 강화를 제의하여 화의가 이루어졌다. 그 후, 후금은 세력을 더욱 확장하여 국호를 청이라 고치고, 군신 관계를 맺자며 다시 대군을 이끌고 침입해 왔다(1636). ... 그 동안 조선에 조공을 바쳐 왔고, 조선에서도 오랑캐로 여겨 왔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에 거꾸로 군신관계를 맺게 되고, ...</p>
<p>개정</p>			

제3차 교육과정 시기에 나온 국사 교과서에서는, ‘사대’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고 있다.

2) 왕래를 통하여 수출된 것은 마필, 인삼, 화문석 등이었고, 수입되는 것은 견직물, 서적, 약재, 문방구, 도자기 등이었다.

사대라는 말은 본래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국제 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선진 강대국인 중국과 주변 여러 나라가 명분상 상하·군신관계를 맺어, 주변 여러 나라가 중국의 연호를 쓰고, 중국 황제의 책봉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중국과 조공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급자족적인 농업 국가끼리 평화를 추구하고 문화를 교류하기 위하여 형식상 상하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주권을 침해하는 식민지 종속 관계와는 다른 것이다.

조선 초기에 사대 외교를 능동적으로 추구한 까닭은 표면적으로는 명의 환심을 사면서 조공 무역을 활발히 전개하여 건국 사업에 필요한 문물을 급속히 수입하고, 중국과의 큰 마찰 없이 라오똥 지방을 수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명은 조선의 적극적인 라오똥 지방 경략과 사대 외교에 당황하여 때로는 조공 무역에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기도 하고, 조선측의 외교 문서가 너무 오만 무례하다고 트집잡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조선 초기의 자주적이며 신축성 있는 대명 외교는 부국 강병의 달성과 민족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뒤에는 차차 맹목적인 존화주의로 흐르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임진 왜란에 대해서도 “일본과의 7년 전쟁”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왜란의 영향은 민족 의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명의 원조는 일부 지배층의 존화 정신을 더욱 깊게 해 주었고, ...

#### 4. 근대(개항 이후부터 8·15 광복까지)

【표 5】

교육 과정	미국과의 수교	임오군란/갑신정변	간도 귀속 문제	국내의 항일 민족운동
II	슈펠트는 ... 일본의 주선을 희망했으나 타국의 등장을 꺼려한 일본의 불응으로 또 다시 실패했다. ...조선책략... 슈펠트의 즐기찬 청원으로 청국이 미국과의 통상을 권고해 오자, ... 통상 조약이 성립되었다.	민비의 재빠를 요청으로 출동한 청국군의 간섭으로 대원군은 청국으로 납치되었고, 보수정권은 다시금 타도되었다. 청국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일본 세력 억제와 자기 세력 부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내정에 간섭하게 되었다. ... 청국은 필렌도르프와 마젠창을 외교 고문으로 추천하였다. ... 군대 훈련을 청국군이 담당하게 되었다. 개국 후 일본의 경제적 침투가 강화됨에 비추어 청국은 청국 상민 무역 장정을 강요하여 상권을 확대하고, 일본의 경제적 진출을 억제하고자 천슈탕을 파견하여 우리 나라 상무·광상을 감독하게 하는 등 노골적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진 후, 철종 말에서 고종 초에 걸쳐 간도로의 월경 유민이 늘어났으며, 고종 18년 청국과 간도 거주민들과의 마찰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어윤중을 서북경략사로 임명하고, 이에 대처토록 하였다. 1885년, 우리 측의 이중하와 청국 관리가 현지를 답사하고 답판할 때, 비문의 토문강이 송화강 상류임을 거듭 강력히 내세워 청국의 주장을 물리쳤다. 그 후에도, 우리 이주민이 계속 늘어나매, 1900년에는 이범윤을 북변간도 관리사로 임명하여 우리 동포를 보호케 하였으니, 간도는 사실상 우리 나라의 일부나 다를 바 없	만주사변 후 괴뢰 만주국이 생겨나자 우리 무장 독립 단체는 만주를 반대하는 중국군과 합심하여 1932년 왕청보... 등에 있던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p>인 내정 간섭에 나섰다. ... (갑신정변 후) 텐진조약에 의하여 일본은 조선문제에 있어 청국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위안스카이를 앞장 세운 청의 내정 간섭은 여전하였다.</p>	<p>었다. 통감부 설치 후 일인이 간도 파출소를 두고 간도를 관할케 하였다. 그 후 남만주 철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청국의 청원을 들어 1909년 간도 협약으로 간도를 청에 넘겨 주었다. (186~188쪽)</p>	<p>1940년 임시정부는 중국 정부와 더불어 충칭으로 이동함으로써, ...</p>
<p>III</p>	<p>미국은 일본에게 알선을 청하였으나, 타국의 등장을 꺼리는 일본이 이를 거절하자 청에 청원을 하게 되었다. 청은 한국에 일본 세력의 독점적 침투를 견제하려고 미국과의 교섭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여 조약 체결에까지 이르렀다. 이 무렵은 극동 정세와 조선의 당면 외교 정책 등을 논술한 황준헌의 조선책략 등이 들어와 지식층에서 읽혀져, 차차 미국과의 교섭의 필요를 느끼고 있었던 때였다.</p>	<p>임오군란은 조선에 내정 간섭의 기회를 노리는 청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어, 우창청이 거느리는 청군이 출동하여 대원군을 청으로 잡아가고 말았다. 그 결과 민씨 일파가 다시 집권하고,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친청 경향을 띠게 되었다. 청은 ... 뮐렌도르프와 마젠창을 외교 고문으로 추천하여 외교, 세정을 감독하게 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주둔한 위안스카이를 하여금 우리 나라 군대를 청국식으로 훈련하게 하였다. 청과 상민수륙 무역 장정을 맺어 청의 상권이 확대되었고, 또한 일본의 경제적 진출을 억제하고자 천슈탕을 보내어 상무와 광산을 감독하게 하였다. 갑신정변은 청의 지나친 내정간섭과 민씨 정권의 사대 경향에 반대하는 급진적인 개화당에 의해 주도되었다. ... 개화당은 일본 세력을 이용하여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급진적으로 근대적인 개혁을 시도하려 하였다. ... 그러나, 위안스카이의 간섭으로 정변은 실패하고, ... 이로 말미암아 청의 입장만 보다 강화되었다. ... 갑신정변 후 일본은 ... 청과 텐진조약을 체결하여 다시 청과의 세력 각축을 피하였다. ... 이 조약으로 양군은 철수하였으나, 청은 위안스카이를 통상</p>	<p>1860년대로 접어들면서 함경도와 평안도의 농민들이 북간도에 이주하기 시작하여 곧 10만을 헤아리게 되었으며, 1910년경에는 거의 북간도 전역을 차지하여 그 곳 농토의 80% 이상을 개척하였다. 그리고, 1910년대는 한국인 수가 수십만에 달하여 인구면에서나 개척면에서나 <u>우리 민족의 실질적인 영토가 되었다.</u> 이 무렵 청은, 간도에 개간 사업을 벌인다는 구실로 한민족의 철수를 우리 정부에 요구하여, 간도 귀속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정부는 이중하를 보내어 백두산 정계비의 비문에 정계선으로 되어 있는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이므로 간도가 우리 영토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어윤중을 서북경략사로 임명하여 이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그 뒤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보내어 간도를 함경도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켜 군·면제를 정비시켜 관리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을사조약을 체결한 후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간도 파출소를 두더니,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청에 넘기고 말았다. 이것은 일본이 대륙 침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주의 안봉선과 푸순 탄광 등과의 교환 조건으로 이양한 것이다. 우리 민족의 북방 개척은 연해주와 서간도뿐만 아니라, 멀리 북만주 지역까지 미쳤</p>	<p>임시 정부는 중국 정부와 더불어 충칭으로 옮기면서 정부를 전시체제로 정비하고 광복군을 훈련하고 광복군 사령부를 설치하여 항전을 계속하였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 특히 중국 정부와의 사이에 광복군에 관한 협정을 맺어 공동 훈련과 작전을 펴게 되었고, ...</p>

		사무전권위원이란 이름으로 머물러 있게 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	다. ... 압록강 건너의 서간도에도 1860년대로부터 이주 개척이 시작되어 1910년경에는 10여만을 헤아리게 되었다.	
IV	슈펠트가 조선과의 수교 교섭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이 조선에 침투하는 것을 견제하고, <u>조선에 대한 중주권을 국제적으로 확인</u> 받을 틈을 엿보던 청이 알선에 나서서, 조선은 서양 제국 중 미국과 최초로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임오군란) 조선에 내정 간섭의 기회를 노리는 청에게 다시 없는 구실을 제공해 준 결과가 되어, 우창청이 거느리는 청군이 출동하였고, 흥선 대원군을 청으로 강제 압송하여 갔다. 그 결과 민씨 일파가 다시 집권하고, 그 결과 민씨 일파가 다시 집권하고, 그들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친청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청은 이 때부터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였다. 뮐렌도르프와 마젠창을 외교 고문으로 추천하여 외교와 세정을 감독하게 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주둔한 위안스카이로 하여금 우리 나라 군대를 청나라 식으로 훈련시키게 하였다. 또 청은 경제 세력의 확대를 꾀하여 상민수륙통상장정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중주권을 주장하였다. 또,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억제하고자 천슈탕을 보내어 상무를 감독하게 하였다. .... 갑신정변 후 ... 청은 위안스카이를 통리외교통상사로 서울에 머물러 있게 하여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였다.	간도 지역에 많이 모인 한민족은 그 곳을 개척함으로써 새 활동 무대로 삼았다. 그러자, 청은 간도 개간 사업을 벌인다는 구실로 우리 나라 정부에 한민족의 철수를 요구하여, 간도 귀속 문제가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이중하를 보내어 백두산 정계비의 비문에 경계로 되어 있는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이므로 간도는 우리 영토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어윤중을 서북경략사로 임명하여 이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그 뒤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보내어 간도를 함경도 행정구역으로 포함시켜 관리하게 하였다. 이 동안에도 평안도, 함경도 등의 농민들은 계속 이주, 정착하여 19세기 말에는 인구 수십만을 헤아리게 되었고, 그 곳 농토의 80% 이상을 개척하였다. 그러나, 을사조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는 처음에는 간도를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통감부의 간도 파출소를 두더니, 마침내는 일제의 침략 세력을 만주 대륙으로 확장시키려는 야망으로, 간도를 희생시키고 말았다. 즉, 일제는 만주에 안봉선 철도를 부설하는 권리를 청으로부터 받아 내는 댓가로 간도를 청의 영유로 인정하는 간도협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의 국민당 정부와 같이 충칭에 정착. ... 광복군으로 통합, 독립전쟁 전개.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한국인의 동양 평화 애호 및 독립 열의에 감복하여 광복군의 활동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

교육 과정	미국과의 수교	임오군란/갑신정변	간도 귀속 문제	국내외 항일 민족운동
개정	<p>조선책략이 유포될 당시에 미국은 조선에 진출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때 청은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적극 알선하였다. (122쪽)</p>	<p>임오군란은 ...청과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 청은 군란 진압 후에도 3,000명의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키면서 마젠창과 독일인 뮐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였다. 또,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규정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강제로 체결하여 청상인들이 내륙 시장에까지 진출할 수 있는 경제적 특권을 보장하였다. 이로써 청은 조선의 내정과 외교 정책을 간섭하게 되었고, 경제적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129쪽)</p> <p>갑신정변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은 더욱 심해졌다. 일본은 청과 텐진조약을 체결하여 ... 이는 후일 청·일 전쟁의 빌미가 되었다. (136쪽)</p>	<p>19세기 후반부터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간도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다. 백두산 정계비의 해석에서 문제가 된 점은 동쪽의 경계로 삼는다고 새겨져 있는 토문강이 어디냐는 것이었다. 청은 토문강을 두만강이라 주장했지만, 정부는 토문강이 송화강의 상류이므로 간도가 틀립없는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 해석을 둘러싸고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 간도 귀속 문제는 확실한 결론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대한 제국 정부는 간도에 이미 수십만 명의 한민족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여 간도 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하고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켰다(1902). 이후 을사늑약으로 일제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하면서 간도 귀속 문제는 청·일 간의 외교 문제로 넘어가 버렸다. 일제는 “한·청 양국의 국경은 두만강으로 경계를 이루되,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간도 협약을 맺었다(1909). 일제는 그 댓가로 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 등을 얻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간도는 중국의 영토로 남아 있다.(172쪽)</p>	<p>민족혁명당은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 아래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여 항일 투쟁에 나섰다(1938). ... 하지만,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항일 투쟁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좀 더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위해 중국 공산당 세력이 대일 항전을 펼치고 있는 화북 지방으로 이동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최고 지도부와 일부 병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력이 북상하여 조선의용대 화북 지대를 결성하고,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등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화북으로 이동하지 않은 병력은 김원봉의 지휘 아래 한국 광복군에 합류(1942). 임시 정부는 중·일 전쟁 발발 직후부터 산하에 정규군을 갖추는데 주력하여 한국 광복군을 창설(1940). 화북으로 이동한 조선의용대원들과 민족혁명당 요인들은 그곳에서 이미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한인들과 더불어 조선독립동맹을 결성(연안, 1942.7).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도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하고, 중국 공산당 군대와 더불어 활동하면서 수많은 대일 항전을 수행.</p>

교육 과정	미국과의 수교	임오군란/갑신정변	간도 귀속 문제	국내의 항일 민족운동
VI	<p>미국은 조선이 일본과 조약을 맺자, 다시 조선과의 수교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에 알선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 결국, 러시아와 일본 세력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u>중주권을 국제적으로 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u>를 노리던 청나라의 알선으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p>	<p>이에(임오군란) 청은 신속히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여, <u>대원군을 군란의 책임자로 청에 압송해 감으로써</u> 일본의 무력 개입 구실을 없애려 하였다. ... 청은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였다. 위안스카이 등이 지휘하는 군대를 상주시켜 조선 군대를 훈련시키고, 마젠창과 뮐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과 외교 문제에 깊이 간여하였다. 또 조선은 상민 수륙무역장정의 체결로 청나라 상인의 통상 특권을 허용하게 되고, 경제적 침략을 받게 되었다. ... 갑신정변 후, 청·일 양국은 ... <u>텐진 조약을 체결하였다.</u> ... 갑신정변은, 개화당의 세력 기반이 약하였고, 청이 무력으로 간섭하여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결과, <u>청국의 내정 간섭이 더욱 강화되고, 보수 세력의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개화 세력이 도태되어 상당 기간 동안 개화 운동의 흐름이 약화되었다.</u></p>	<p>19세기 후반 이후, 한민족은 간도 지방으로 이주하여 그 곳 황무지를 개척하는 등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러자, 청은 간도 개간 사업을 구실로 한민족의 철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간도 귀속 문제가 일어났다. 정부에서는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이 송화강 상류이므로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고, 간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에도 일제는 간도에 통감부의 파출소를 두어 이를 관할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여(1909), 만주의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받아 내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일제가 이와 같이 <u>우리의 외교권을 장악하여 제멋대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을사조약에 근거를 둔 것이</u>나, <u>을사조약이 고종 황제에 의해 무효임이 선언된 이상, 이 조약을 근거로 맺은 간도 협약도 무효인 것이다.</u></p>	<p>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항일 의식이 고조된 중국군과 연합, 항일전 전개.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은 중국의 호로군과 한·중 연합군을 편성.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 한국광복군은 조선의용대를 흡수 통합하고, 중국 국민당 정부와 적극적 협력. 중국 공산당과 함께 연안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조선독립동맹 계열의 조선의용군.</p>
VII	<p>조선은 미국과 조약을</p>	<p>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입은 구식 군인, 하층민 등에 의해 임</p>	<p>일제는 청에서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얻어 내는 대가로 간도 지방에 대한 관리 권</p>	<p>1937년에 일제가 중·일 전쟁을 일으켜 중국 본토를 위</p>

	<p>맺은 뒤 ...</p>	<p>오군란이 일어났다. 민씨 세력은 청에 원병을 요청하였고, 서울에 들어온 청의 군대는 일시 집권한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잡아갔다.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는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과 경제 침략을 강화하였다. 이에 반발한 급진적 개화 세력은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이들은 청과의 의례적 사대 관계를 폐지하고, ..... . 하지만, 개화파 정권은 청군이 개입으로 3일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 갑신정변 이후, 조선 정부는 청의 지나친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p>	<p>한을 청에 넘겨주었다. 19세기에 이르러 토문강 위치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조선과 청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 결국, 간도는 우리의 외교권이 불법적으로 상실된 상태에서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간도 협약(1909)에 따라 청의 영토로 귀속되고 말았다.[간도 귀속 문제]에 관한 주에서: “간도 협약에 따라 일제는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해주었으나, 최근 토문강과 두만강이 별개의 강이라는 각종 자료가 발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간도의 귀속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p>	<p>협하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충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 ... 만주의 일부 조선인들은 1930년대에 항일 유격대를 결성하고 중국 공산당군과 함께 동북 항일 연군으로 활동. 김원봉의 의열단 계통 인사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협조로 조선 의용대를 조직, 활동. 조선 의용대에서 분화된 화북 지방의 조선 독립 동맹 계열은 조선 의용군을 결성, 중국 공산당과 연합, 항일 투쟁을 전개.</p>
--	---------------------	---	--	---

### 5. 현대(8·15 광복부터 현재까지)

【표 6】

교육과정	6·25 전쟁	중국과의 교류
II	<p>중공군의 불법적 개입으로 다시 38도선 이남으로 후퇴하였으며, 다시금 공산군을 38도선 이북으로 몰아냈다.(244쪽)</p>	
III	<p>국군과 유우엔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고비로 서울을 탈환하고, <u>원한의</u> 38도선을 돌파하여 평양을 수복하고 북진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투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아군은 공산군의 새로운 공격에 의하여 한때 한강선 이남까지 후퇴하였으나, 그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며 38도선 이북으로 물리쳤다. 그 후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소련은 이 시기에 휴전을 제의하여 드디어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성립되었다.</p>	
IV	<p>그 이후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1950년) 10월 말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투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p>	

	되었다. 아군은, 겨울을 이용하여 실시된 공산군의 반격으로 한때 한강 이남까지 후퇴하였으나, 다시 반격 작전을 전개하여 물리쳤다.	
VI	그 해(1950년) 겨울에는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이렇듯 통일의 염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점에 중공군이 개입함으로써 국군과 유엔 군은 한때 한강 남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련 및 중국과도 국교를 맺게 되었다.
VII	유엔군과 국군은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여, 서울을 수복한 후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북진하였다. 그러나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다시 바뀌어 휴전선 일대에서 교착 상태에 들어갔다. 이후, 유엔군과 북한군 및 중국군 사이에 휴전 회담이 진행되어 1953년 7월 27일에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 및 소련,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북방 정책을 추진하였고, ..... [10대 교역국과의 수출입] 한국 무역 협회, 무역 통계, 2004/ 2003년 통관 기준. 도표에 중국이 미국에 이어 제2의 교역 상대국임을 보이고 있다.
개정	압록강을 건너 참전한 중국군(중국 인민 지원군)의 대공세에 밀려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하여 1951년 1월 4일 서울을 다시 빼앗겼다. ... 유엔군과 중국군 및 북한군은 6월부터 정전 회담을 개최, ...(343쪽)	노태우 정부는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소련 및 중국과 국교를 맺었다.

#### IV. 맺음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필자의 연구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그것에 관한 서술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적한 것이 아니라, 시기마다 그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나름대로 선정하고서, 교과과정 시기마다 서술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다소 산만한 점도 있지만, 이 글을 작성함에 있어서, 연구 주제의 선정에 있어서 한계로 다가오는 것이, 특히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국사(한국사)에서 검토해 본다는 측면에서, 주로 영토나, 중국과의 정치 및 외교 관계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좀 더 다양한 주제, 예를 들면, 경제 관계나 교역로, 문화적인 것 등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데, 이것은 현재의 교과서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구사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세계사 교과서에서의 이러한 연구는 풍부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토론문>

송요후 「한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중국 관련 서술의 변화」에 대한 토론문

최진열 (경상대학교)

별지 참조

## **제 4 주제**

### **북한 역사교과서의 중국·일본 관련 서술의 변화 -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

**발 표 자 : 권 성 아 (공주교육대학교)**

**토 론 자 : 박 재 영 (중앙대학교)**



# 북한 역사교과서의 중국·일본 관련 서술의 변화

-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

권성아(공주교육대학교)

- I. 북한 역사교육의 변화와 현황
- II. 북한 “세계력사” 교과서의 목차 변화 비교
- III. 북한 역사교과서의 중국 관련 서술의 변화
- IV. 북한 역사교과서의 일본 관련 서술의 변화
- V. 북한의 중국·일본 관련 서술 변화의 특징

## I. 북한 역사교육의 변화와 현황

국가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교육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며, 이는 바로 교과서에 반영된다. 특히, 국가정책이 표방하고 있는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역사교육에 있어서는 두말할 것도 없다.<sup>1)</sup> 해방 이후 북한의 역사교육은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혁명력사’와 ‘조선력사’, 그리고 ‘세계력사’ 등 크게 3 종류의 교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혁명력사’를 포함하여 ‘어린시절’과 ‘혁명활동’ 및 ‘로작’ 등의 김일성 우상화 과목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1955년부터 마련된 주체사상이 완성된 1967년이며, 이에 따라 1968년 정식 과목으로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교과서를 개발하여 1969년 9월 1일부터 당시의 초등학교인 인민학교와 중등학교인 중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sup>2)</sup> 당시 교과서에서 김일성에 대한 호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일반적이었으나, 1982년 김일성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면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부각되기 시작하고 1986년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김정일 우상화 과목(어린시절·혁명력사·혁명활동)을 신설하면서, 김정일에게 ‘동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라 부르게 되면서 김일성에게는 ‘원수’란 칭호를 붙이게 되었다.

그러다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김정일이 “위대한 령도자”가 되면서 ‘원수’ 칭호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김일성은 ‘대원수’로 승격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우리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당시의 고등중학교 1~3학년에서는 김일성 부자의 ‘혁명활동’을,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4~6학년에서는 ‘혁명력사’를 이수하도록 하였다.

1) 통치이념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관련해서는 정성장, 통치이념, 『북한의 사상과 역사인식』,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도서출판 한울, 2006, 25~69쪽 참조.

2) 강근조, 『조선교육사』 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231쪽.

그러면서 북한은 1998년 8월 22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사회주의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선포하여 김정일을 중심으로 선군정치에 입각한 강성대국론으로 나가면서,<sup>3)</sup> 김일성 신격화 교육과 붉은기사상<sup>4)</sup> 교육으로 반체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99년을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삼고,<sup>5)</sup> 대내적으로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가 침투하는 것을 막고 주체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다.<sup>6)</sup> 그리고 이에 입각하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로 강화하는 김정숙 우상화 과목(어린시절·혁명력사)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이 백두산 3대장군 우상화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가운데 국사 교육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강성대국론기가 시작된 1998년도이다. 북한에서 ‘조선력사’ 과목은 1995년경까지는 보통 인민학교 4학년과 고등중학교 2~4학년에서 가르쳤는데, 1998년도에는 고등중학교 1학년부터 가르쳤다. 또한 2000년도에는 5학년에 그리고 2002년도에는 6학년에까지 국사교육을 확대하였다.<sup>7)</sup>

북한의 세계사 교육은 “세계력사” 과목을 통하여 1990년대까지는 고등중학교 5~6학년에서 이루어졌으나, 2002년을 기점으로 하여 3~4학년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전 5학년에서는 원시공동체사회부터, 그러다 지금 3학년에서는 고대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세계사를 다루고 있으며, 이전의 6학년과 지금의 4학년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수립부터 시작하여 이전의 6학년은 북한의 주체사상의 보급까지, 그리고 지금의 4학년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민족해방운동까지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02년 9월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10월을 기하여 중학교 6학년에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 죄행”이라는 국사 교과서를 새로 배정하여 2003학년도부터 사용하였다.<sup>8)</sup> 이는, ‘조선력사’ 과목에서는 1920년대까지만 다루고 있으므로 그 이후 즉,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미국과 일본의 남북한에 대한 ‘만행’을 주제별로 나누어 설명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교과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으로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2009년 5월 경 김정은을 후계자로 찬양한 합창곡 “발걸음”을 내놓고 ‘청년대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sup>9)</sup> 그리고 2010년 9월 27일 김정은에게 ‘조선인민군 대장’ 계급을 수여하고, 그 다음날 열린 로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

3) ‘ 선군정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로동신문』 1998년 4월 25일자 사설에서이며, ‘강성대국’이라는 구호는 『로동신문』 1998년 8월 22일자 사설에서이다.

4) 이에 관해서는 김정일, 『혁명의 붉은기를 지켜』,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참조.

5)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88. 1. 1),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6) 신호숙,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0,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3, 40~41쪽.

7)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권성아, 『『조선력사』를 통해서 본 북한 이념교육의 변화와 남북통합의 방향』, 『통일과 평화』 3집 2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12, 103~104쪽 참조.

8) 허성철,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죄행(1930~1990년대)』 중학교 6,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9) 이와 같은 사실은 한 탈북교사가 2010년 7월 8일 하나원 개원 11주년 행사에서 증언한 내용이 다음 날 언론에 유출되며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체제를 밟아 나갔다.

그러나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으로 다급해진 북한은 김정은을 12월 23일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한 후 12월 30일 승계하도록 했고, 2012년 4월 11일 노동당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당 제1비서로 선출하고 4월 13일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임명하여 군-당-정을 모두 장악하게 함으로써,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해 본격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출범시켰다.<sup>10)</sup>

그러나 나이가 어리고 군 경험이 없는 김정은 체제는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은 2012년 7월 18일을 기해 김정은을 '공화국 원수' 자리에 앉혔다. 김일성은 6·25전쟁 중이던 1953년 2월 원수 칭호를 받고, 사망 2년 전인 1992년 4월 김정일을 원수로 임명하기 위해 대원수 자리에 앉았다. 이때 원수 자리에 오른 김정일은 2011년 12월 사망 이후 대원수로 승격되었다.

이에 북한사회는 2012년 이후에는 김정은 체제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개혁·개방을 유도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완성기'로 나아가고자 국가의 총력을 모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역사교육도 일정 부분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고양은 북한교육의 핵심내용이지만, 경제난이 지속되고 화폐개혁이 실패하면서 자본주의 요소 유입과 핵과 미사일 등의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역사교육도 일정하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명력사'는 북한의 일방적인 사상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역사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 관한 역사적 사항은 파악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북한의 역사 교과서 가운데 중국과 일본에 관한 내용 서술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일차적으로 "세계력사" 교과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국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사용된 것이 가장 최근의 것이나, 세계사는 2002년 이후의 교과서를 아직 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세계력사" 교과서를 통하여, 1990년대 전반까지의 북한의 중국 및 일본에 관한 서술내용이 강성대국론기로 나간 1998년과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직전에 나온 2002년 교과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관련 시기의 변화를 이후에 나온 "조선력사" 교과서와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 죄행" 교과서를 참고로 하여 첨삭하고자 한다.

## II. 북한 "세계력사" 교과서의 목차 변화 비교

### 1. 분석 대상 교과서

10) 관한 이해는 이영중, 『후계자 김정은』, (주)늘품플러스, 2010 참고.

이 연구에서 일차자료로 사용된 북한의 “세계력사”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사용연도	대상자	저 자
1991	고등중학교 6	준박사 김광원, 김현주
1994	고등중학교 5	박사 부교수 민선규, 부교수 준박사 진영균
1995	고등중학교 6	준박사 김광원, 준박사 김현주
1998	고등중학교 5	부교수, 학사 임제준, 최창길
1998	고등중학교 6	학사 김현주, 학사 리철호
2002	고등중학교 3	부교수, 학사 리성춘, 최창길
2002	고등중학교 4	학사 럽춘경

북한의 교과서는 과목별로 단 1종의 교과서밖에 없으며, 모두 평양에 있는 교육도서출판사에서 발행을 한다. 그리고 저자명 앞에 붙어 있는 ‘준박사’는 남한의 석사 학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박사원의 준박사 반에서 3년 내지 3년 6개월의 수학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석사와 박사의 중간이라 할 수 있다. 1979년 9월 이전까지는 준박사 대신 ‘학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남한·중국·일본 등에서 이를 학부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준박사로 바꾸었다.<sup>11)</sup> 그런데 저자 김현주에게서 보듯, 어찌된 일인지 1998년부터는 준박사 대신 다시 ‘학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2.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세계역사 교과서의 목차 변화 비교

북한의 세계사 교육은 앞서 밝힌 것처럼 1990년대까지는 고등중학교 5~6학년에서 이루어졌으나, 2002년을 기점으로 하여 3~4학년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원시공동체사회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세계사를 다루고 있는, 이전의 5학년과 지금의 3학년 교과서의 목차(북한에서는 ‘차례’)를 장을 중심으로 먼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1994(고등중학교 5)	1998(고등중학교 5)	2002(고등중학교 3)
제1장. 원시공동체사회 제2장. 고대나라들 제3장. 중세나라들	제1장. 원시공동체사회 제2장. 고대나라들 제3장. 중세나라들	제1장. 고대국가들 제2장. 아시아와 유럽의 봉건국가들 제3장. 부르조아혁명과 자본주의의 확립 제4장. 자본주의열강들의 아시아
제4장. 구라파에서 부르조아 혁명과 자본주의발전 제5장. 국제공산주의운동	제4장. 근대 자본주의나라들 제5장. 근대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	

11) ,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교육과학사, 1997, 234쪽.

제6장. 구미제국주의나라들 제7장. 근대아세아나라들	제6장. 근대시기 아세아나라 들에서의 반침략반봉건투쟁 제7장. 구라파식민주의자들 을 반대한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	침략과 인민들의 반침략, 반봉건투쟁 제5장. 국제공산주의운동, 빠리콤문
제8장. 구라파식민주의자들의 아프리카강점과 그를 반대 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 제9장. 제1차세계대전 제10장. 근대문화	제8장. 제1차 세계대전 제9장. 근대문화	제6장. 제1차세계대전 제7장. 근대문화

1994년에서 1998년으로의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던 단원이 9장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1994년의 제4장 “구라파에서 부르조아혁명과 자본주의발전”에 제6장 “구미제국주의나라들”을 통합하여 1998년도의 제4장 “근대자본주의나라들”로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4년에 비해 1998년도에는 장의 제목을 좀 더 구체화시켜, ‘근대(시기)’를 강조한 것(4, 5, 6장)과 “반침략, 반봉건투쟁”을 덧붙인 것(6장) 및 인민들의 투쟁을 ‘라틴아메리카’까지 확대한 것(7장)들이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2002년도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의 9장에서 7장으로 다시 2장을 줄이면서, 그 이전에 제1장으로 넣었던 “원시공동체사회”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인류의 발생에서부터 우리가 보통 구석기·신석기·청동기시대라 부르는 시기를 ‘원시공동체사회’라고 일컬으면서, 이때 평양을 중심으로 ‘대동강문화’가 발생했다고 보는데,<sup>12)</sup> 국사 교과서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사에는 이 당시에 국가가 출현하지 않아서 그런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부분을 세계사 교과서에서 삭제하여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2002년도에는 그동안 ‘나라’라고 부르던 것을 ‘국가’로 바꾸고, 1998년의 제3장 “중세나라들”을 제2장 “아시아와 유럽의 봉건국가들”로 좀 더 구체적인 특징이 드러나도록 바꾸었다. 그러나 1998년에 사라졌던 ‘부르조아혁명’이 다시 등장하였고(3장)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빠리콤문’이 강조되었으나(4장), 1998년 제7장에서 다룬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의 인민들의 투쟁은 사라졌다.

### 3.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역사 교과서의 목차 변화 비교

한편, 세계사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회주의 국가의 등장부터 다루고 있는, 이전의 6학년과 지금의 4학년 교과서의 목차를 장을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단, 1991년도 교과서와 1995년도 교과서는,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친애하는 지도

12) ,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1, 12쪽. 북한의 ‘대동강 문화론’과 관련해서는 권오영, 단군릉 사건과 대동강 문화론의 전개, 『북한의 역사 만들기』,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3, 87~109쪽 참조.

자 김정일선생님”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으로 승격됨에 따라 김일성의 호칭이 ‘대원수’로 바뀐 것 이외에는 내용에는 변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1994년 이후 북한이 겪은 자연재해와 경제난 때문인지, 1995년도 교과서는 1991년 교과서와 비교할 때 인쇄의 질이 형편없고 그림이 사라져 쪽수가 줄어드는 등 교과서의 질 자체가 나빠졌다. 따라서 글씨 자체를 읽을 수 없는 것이 많아, 이 연구에서는 1991년도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991(고등중학교 6)	1998(고등중학교 6)	2002(고등중학교 4)
제1장. 첫 사회주의 국가 쏘련, 아세아나라들에서 민족해방 투쟁의 양양	제1장. 첫 사회주의 국가의 수립, 혁명투쟁의 양양	제1장.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운동의 장성
제2장. 제1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나라들	제2장. 파쇼독재정권의 출현과 파쇼나라들의 대외침략	제2장. 파쇼국가들의 출현, 대외침략
제3장. 국제공산당의 창건, 반제반파쇼통일전선운동의 강화발전	제3장. 제2차 세계대전	제3장. 제2차 세계대전
제4장. 제2차 세계대전	제4장.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 여러 나라들	제4장. 제2차 세계대전후 민족해방운동의 양양
제5장. 제2차 세계대전후 사회주의나라들		
제6장. 신흥세력나라들		
제7장.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나라들		
제8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주체사상의 급속한 보급	제5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주체사상의 급속한 보급	

1990년대의 전반에 비해 1998년도의 가장 큰 변화는, 목차에서, 첫 사회주의 국가로 ‘쏘련’을 강조했던 것이 사라졌다는 것과 ‘민족해방투쟁’으로 명명했던 것을 ‘혁명투쟁’으로 개념을 바꾸고, ‘제국주의’를 ‘파쇼독재정권’으로 정의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1990년대 전반의 제3장 “국제공산당의 창건, 반제반파쇼통일전선운동의 강화발전”을 1998년도에는 제2장에 포함시켰으며, 제5장 “제2차 세계대전후 사회주의나라들”과 제6장 “신흥세력나라들” 및 제7장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나라들”을 다 통합하여 제4장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 여러 나라들” 하나로 구성하였다.

1998년도에 비해 2002년도의 가장 큰 변화는, 목차에서, 마지막 장에 담았던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와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머지 네 장의 틀은 동일하나, 장의 제목들이 조금씩 순화·정비되어 변화하였다. 제1장의 경우 “첫 사

회주의국가의 수립, 혁명‘투쟁’의 양양”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운동’의 장성”으로, 제2장의 경우 “과쑤‘독재정권’이 “과쑤‘국가’들의 출현, 대외침략”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제4장은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제2차 세계대전후 민족해방운동의 양양”으로 변하면서, 1990년대 후반 사라졌던 ‘민족해방운동’이 다시 목차에 등장하였다.

### III. 북한 역사 교과서의 중국 관련 서술의 변화

#### 1. 고대 중국에 관한 서술의 변화

북한의 세계역사 교과서 가운데 고대 중국에 관한 내용은 1994년도에는 고등중학교 5학년 “제2장. 고대나라들”의 “제3절. 중국”에서 별도의 절로 다루다가, 1998년도에는 같은 장 “제1절. 고대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한 항으로 다루었다. 그러다 2002년도에는 3학년 “제1장. 고대국가들”에서 고대 중국이 아닌 “제3절. 주나라”로 다루면서 황하문화와 하나라·상나라 부분은 항에서조차 사라졌다.

1994(제2장 제3절)	1998(제2장 제1절의 4)	2002(제1장 제3절)
제2장. 고대나라들 제3절. 중국  - 황하문화 - 하나라 - 상나라 - 주나라	제2장. 고대나라들 제1절. 고대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 4. 고대중국 - 황하문화 - 하나라 - 상나라 - 주나라 - 고대중국의 문화	제1장. 고대국가들 제3절. 주나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대 중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북한은 1994년도까지는 중국을 고대나라들의 하나로 중요시 여긴데 반해, 1998년도에는 고대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하나로 격하시킨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1994년도에는 황하문화와 하나라·상나라·주나라를 각각 하나의 항목으로 한 쪽 이상씩 다루었으며, 1998년도에는 세 나라에 이어 ‘고대중국의 문화’까지 한 항목으로 다루었다. 즉, 1990년대에는 고대 중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황하문화’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1994년도에는 황하 유역을 “고대중국의 문화가 발생”한 곳으로,<sup>13)</sup> 그리고 1998년도에는 “고대중국인민들의 력사에 큰 영향을 미친 지역”으로 소개하고 있다.<sup>14)</sup>

13) 진영균, 『세계력사』 고등중학교 5,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4, 11쪽.

그러나 2002년도에는 황하문화와 고대 중국이 시작된 하나라와 그에 이은 상나라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주나라만 고대 중국으로 정식 명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주나라’만 별도의 절로 만들어 그 안에서 구역 구분이 없이 황하 유역을 “인류문화 발상지의 하나”로 다루고, ‘하나라’는 BC 21세기에 세워진 중국의 첫 ‘노예제국가’로 그리고 ‘상나라’는 400년간 존재하다 망한 하나라를 이어 약 600년간 존재한 나라로, 단 한 문장씩으로만 소개하였다.<sup>15)</sup> 그리고 황하문명과 관련해서는 “제6절. 고대문화” 안에서, 아무런 항목의 구분 없이, 고대 이집트와 인도에 이어 중국의 문화를 다루는 데에서 간단히 서술하였다.<sup>16)</sup>

## 2. 중세 중국에 관한 서술의 변화

북한의 세계역사 교과서 가운데 중세 중국(진~청)에 관한 내용은 1994년도에는 “제3장. 중세나라들”의 “제1절. 중국”에서 나라별로 하위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다루다가, 1998년도에는 같은 장 “제1절. 중세 아세아나라들”에서 한 항으로 다루었다. 그러다 2002년도에는 “제2장. 아시아와 유럽의 봉건국가들”에서 1절부터 3절까지를 중국에 할애하여 다루었다.

1994(제3장 제1절)	1998(제3장 제1절 1)	2002(제2장 제1~3절)
제3장. 중세나라들 제1절. 중국  - 진나라의 형성과 시황제의 폭압정치 - 한나라통치배들의 정권다툼과 황건농민폭동 - 수나라봉건통치배들의 폭압정책과 그 멸망 - 당나라시기 봉건적착취의 강화와 황소농민폭동 - 송나라통치배들의 매국정책과 원나라에 의한 중국지배 - 명나라시기의 리자성농민폭동 - 청나라시기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전과 봉건제도의 쇠퇴	제3장. 중세나라들 제1절. 중세 아세아나라들 1. 중세중국 - 진시황의 폭정  - 한나라의 반동통치와 황건농민봉기 - 수, 당 통치배들의 반동정책과 황소농민봉기  - 송나라통치배들의 매국정책  - 명나라의 통치와 리자성농민봉기 - 중국에 대한 구미자본주의 침략	제2장. 아시아와 유럽의 봉건국가들  제1절. 진나라와 한나라 1. 진나라와 시황제 2. 한나라와 황건농민폭동  제2절. 수나라와 당나라 1. 수양제의 폭압정치와 수나라의 멸망 2. 당나라와 황소농민봉기  제3절. 명나라와 리자성농민봉기, 청나라 1. 명나라통치와 리자성농민봉기 2. 청나라시기의 중국

14) 최창길, 『세계력사』 고등중학교 5,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8, 16쪽.

15) 리성춘·최창길, 『세계력사』 고등중학교 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11쪽.

16) 같은 책, 22쪽.

1994년도에 비해 1998년도의 변화 가운데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고대 중국과 마찬가지로 중세 중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북한은 1994년도까지는 중국을 중세나라들의 하나로 중요시 여긴데 반해, 1998년도에는 중세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하나로 격하시킨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원과 청 등 중국의 주 종족이 아닌 사람들이 통치하던 시기는 제목에서 삭제시킨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중세 중국의 나라들을 절로 다루면서 청나라는 살아났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송나라를 절로 다루지 않고 당나라 끝에 한 구절로 다루었다.<sup>17)</sup> 이는 아마도 송이 이민족인 원에 의해 멸망한 것과 따라서 1990년대에 이를 “송나라통치배들의 매국정책”으로 다룬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sup>18)</sup> “자주성을 지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절대적요구이며 빼앗길 수 없는 기본권리”인데,<sup>19)</sup> 송은 그러질 못했던 것이라고 북한은 판단했던 것이다.

진나라와 관련해서는 1994년도에는 그 형성과정에 대해서도 제목으로 다루었으나 1998년도에는 진시황의 폭압정치만 다루고 있으며, 한나라에 대해서도 통치자들의 ‘정권다툼’을 ‘반동통치’로 제목을 바꾸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994년도에는 수나라는 ‘폭압정책’으로, 당나라는 ‘봉건적착취’라고 명명했던 것을 1998년도에는 수당을 합하여 ‘반동정책’이라 부르는 차이도 드러난다. 한편, 황소·황건 및 이자성의 난등을 1994년도에는 ‘농민폭동’이라 명기했던 것을 1998년도에는 ‘농민봉기’라고 제목을 바꾸었다가, 2002년도에는 황소의 난에 대해서만 다시 폭동으로 바꾸었다.

또 하나 특징으로 드러나는 것은 1994년도에는 이 절의 마지막 항목을 “청나라시기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전과 봉건제도의 쇠퇴”로 다루다가 1998년도에는 “중국에 대한 구미자본주의 침략”으로 제목을 바꾸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에서 자본주의 국가를 제국주의로 규정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청나라 때 자본주의가 도입된 것은 국가의 ‘발전’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의 ‘침략’으로 보고자 하는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2002년도에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1990년대까지 ‘아세아’와 ‘구라파’라고 명명하던 것을 ‘아시아’와 ‘유럽’으로 외국어 표기법을 바꾸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목차 제목에서 ‘통치배’ 등과 같이 순화되지 않은 언어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런지 청 시기의 자본주의 ‘침략’에 대해서도 아예 제목에서 삭제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양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폭압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3. 근대 중국에 관한 서술의 변화

근대 중국과 관련해서는 1994년도에는 “제7장. 근대아세아나라들”의 “제1절. 중국인민의 반봉건, 반침략투쟁”이란 제목으로 다루다가, 1998년도에는 반침략·반봉건 투쟁을 강조하여 “제6장. 근대시기 아세아나라들에서의 반침략반봉건투쟁”의 “제1절. 중국인민

17) 책, 31쪽.

18) 민선규·진영균, 앞의 책, 37쪽.

19) 임재준·최창길, 앞의 책, 45쪽.

의 반침략반봉건투쟁”이라는 제목으로 다루었다. 그러다 2002년도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주의까지 강조하여, “제4장. 자본주의열강들의 아시아침략과 인민들의 반침략, 반봉건투쟁”이란 제목으로 “제1절. 아편전쟁”과 “제2절. 《태평천국》 농민전쟁” 및 “제3절. 1911년 중국부르조아혁명” 등 3절에 걸쳐 자세히 다루었다.

1994(제7장 제1절)	1998(제6장 제1절)	2002(제4장 제1~3절)
제7장. 근대아세아나라들 제1절. 중국인민의 반봉건, 반침략 투쟁 1. 아편전쟁 - 아편전쟁전 중국의 사회형편 - 아편전쟁 2. 《태평천국》 농민전쟁 - 농민전쟁의 폭발과 《태평천국》의 수립 - 《태평천국》의 시책과 농민전쟁의 실패 3. 《의화단》 폭동과 1911년 부르조아혁명 - 《의화단》 폭동 - 1911년부르조아혁명	제6장. 근대시기 아세아나라들에서의 반침략반봉건투쟁 제1절. 중국인민의 반침략반봉건투쟁 1. 아편전쟁 2. 《태평천국》 농민전쟁 3. 《의화단》 폭동과 1911년부르조아혁명 - 《의화단》 폭동 - 1911년 중국부르조아혁명(신해혁명)	제4장. 자본주의열강들의 아시아침략과 인민들의 반침략, 반봉건투쟁 제1절. 아편전쟁 제2절. 《태평천국》 농민전쟁 제3절. 1911년 중국부르조아혁명 1. 혁명정세의 성숙 2. 신해혁명의 폭발과 청 왕조의 전복 3. 혁명의 실패

1994년도에 비해 1998년도의 변화 가운데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1994년도까지는 중국을 근대 아시아 나라들의 하나로 다루면서 중국인들의 ‘반봉건’을 반침략보다 앞세워 중요시 여긴데 반해,<sup>20)</sup> 1998년도에는 반봉건·반봉건 투쟁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목에 이를 아예 명기하면서 반봉건보다는 ‘반침략’을 앞세워 중요시 여겼다.<sup>21)</sup> 이는 북한이, 강성대국으로 가면서, ‘반봉건’이라는 국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투쟁보다는 ‘반침략’이라는 외세에 대한 투쟁을 은연 중 강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002년도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제목에 침략의 주체가 ‘자본주의 열강’이라는 것까지 명기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이 반침략·반봉건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을 함께 제목으로 달았다.<sup>22)</sup> 그러면서 중국의 대항을, 1990년대에는 한 절 안에서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농민전쟁 및 1911년 부르주와 혁명 등 세 항으로 다루던 것을, 세 절로 확대하여 다루었다. 그러면서, 특히, 신해혁명은 이를 다시 세 항으로 나누어 다루면서 3항의 제목에 이 혁명은 실패한 것이라는 것을 명기하였다.

20) 진영균, 앞의 책, 115~123쪽.

21) 임재준·최창길, 앞의 책, 105~110쪽.

22) 리성춘·최창길, 앞의 책, 73~80쪽.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990년대에는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족부르조아지가 아니라 노동계급이 혁명을 령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반해,<sup>23)</sup> 2002년도에는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올바른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sup>24)</sup> 즉, 북한은 강성대국으로 가면서, 그동안 강조하던 노동자 중심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포기하고 지도자 중심의 주체혁명만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역사 서술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중국에 관한 서술의 변화

북한의 세계역사 교과서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중국에 관한 내용은 1991년도(1995년도에도 동일)에는 고등중학교 6학년 “제1장. 첫 사회주의국가 소련, 아세아나라들에서 민족해방투쟁의 양양”의 “제2절. 중국인민의 국내혁명전쟁과 항일전쟁”에서 별도의 절로 나누어 다루다가, 1998년도에는 “제1장. 첫 사회주의국가의 수립, 혁명투쟁의 양양”의 “제3절. 민족해방투쟁의 양양”에서 1항과 “제2장. 파쇼독재정권의 출현과 파쇼나라들의 대외침략”의 “제3절. 세계인민들의 반제반파쇼투쟁”에서 3항으로 다루었다. 그러다 2002년도에는 4학년 “제1장.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운동의 장성”의 “제4절. 중국에서 5.4운동, 국공합작”과 “제5절. 제1차국내혁명전쟁(북벌전쟁)과 장개석의 배신” 및 “제6절. 제2차국내혁명전쟁과 2만5천리장정, 서안사변”에서 다시 절의 제목으로 내놓고 3절에 걸쳐 다루었다.

1991(제1장 제2절)	1998(제1장 제3절의 1과 제2장 제3절의 3)	2002(제1장 제4~6절)
제1장. 첫 사회주의국가 소련, 아세아나라들에서 민족해방투쟁의 양양 제2절. 중국인민의 국내혁명전쟁과 항일전쟁 1. 5.4운동과 국공합작의 실현 - 5.4운동 - 노동운동의 장성과 국공합작의 실현 2. 국내혁명전쟁과 항일전쟁 - 제1차 국내혁명전쟁과 그 실패 - 제2차 국내혁명전쟁의 시작과 확대 - 일제의 중국침략의 강화와	제1장. 첫 사회주의국가의 수립, 혁명투쟁의 양양 제3절. 민족해방투쟁의 양양 1. 중국에서 5.4운동과 국내혁명전쟁 - 5.4운동 - 중국공산당의 창건과 국공합작의 실현 - 제1차 국내혁명전쟁 - 제2차 국내혁명전쟁 제2장. 파쇼독재정권의 출현과 파쇼나라들의 대외침략 제3절. 세계인민들의 반제반파쇼투쟁 3. 중국에서 제2차 국공합작과	제1장.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운동의 장성 제4절. 중국에서 5.4운동, 국공합작 1. 5.4운동 2. 제1차 국공합작 ※ 모택동과周恩래의 초기혁명활동 제5절. 제1차국내혁명전쟁(북벌전쟁)과 장개석의 배신 1. 제1차국내혁명전쟁 2. 장개석의 배신과 북벌전쟁의 실패 제6절. 제2차 국내혁명전쟁과 2만5천리장정, 서안사변

23) 진영균, 앞의 책, 123쪽 ; 임재준·최창길, 앞의 책, 128쪽.

24) 리성춘·최창길, 앞의 책, 80쪽.

장개석도당의 반동공세의 강화, 홍군의 2만 5천리장정 - 항일전쟁	항일전쟁 - 《서안사변》과 제2차 국공 합작 -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1. 제2차 국내혁명전쟁의 시작, 2만5천리장정 2. 서안사변
--	--	--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북한은, 일관성 있게, 1995년도까지는 나라 이름을 장의 제목에 담은 데 반해 1998년도에는 제목에서는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중국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1991년도에는 ‘소련’을 첫 사회주의국가로 제목으로 내걸고 그 안에서 한 절로 ‘중국’의 국내혁명전쟁과 항일전쟁을 다루었는데,<sup>25)</sup> 1998년도에는 장 제목에 소련이라는 말은 없이 ‘첫 사회주의국가의 수립’으로 명명하면서 중국의 혁명투쟁도 한 절이 아닌 한 항으로 축소하여 다루었다.<sup>26)</sup> 그러면서 1995년도까지는 ‘인민’을 강조하던 1998년도에는 ‘파쇼독재정권’을 강조하면서, 인민의 ‘국내 투쟁’이 아닌 ‘반제반파쇼투쟁’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02년도에는 소련이나 첫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장의 제목으로 다루는 대신, ‘세계 여러 나라들의 혁명운동’의 측면에서 소련과 중국에 각각 세 개의 절을 할애하여 서술하였다.<sup>27)</sup>

그러면서 중국의 경우, 1995년도에는 제2절 안에서 “1. 5.4운동과 국공합작의 실현”과 “2. 국내혁명전쟁과 항일전쟁”의 두 개의 항으로 다루다가, 1998년도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두 개의 장으로 나누어, 제1장에서는 제3절 안에서 “1. 중국에서 5.4운동과 국내혁명전쟁”을 다루고 제2장에서는 제3절 안에서 “3. 중국에서 제2차 국공합작과 항일전쟁”이라는 항으로 서술의 순서를 변경하여 다루었다.<sup>28)</sup> 그러다 2002년도에는 제4절에서 제6절까지 세 개의 절로 다시 확대하여 다루면서, 제5절에서는 제1차 국내혁명전쟁과 관련하여 ‘장개석의 배신’을 그리고 제6절에서는 제2차 국내혁명전쟁과 관련하여 ‘2만5천리장정’과 ‘서안사변’을 절의 제목으로 내놓을 정도로 강조하였다.

## 5.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중국에 관한 서술의 변화

북한의 세계역사 교과서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중국에 관한 내용은 1995년도까지는 “제4장. 제2차 세계대전”의 “제2절.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반파쇼민족해방투쟁의 양양, 쏘련군대의 반공격”의 1항 안에서 부분적으로, 그리고 1998년도에도 “제3장. 제2차 세계대전”의 “제2절.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반파쇼민족해방투쟁의 양양, 쏘, 미, 영 3개국수뇌자회담”의 1항 안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중국과 관련한 사항이 항 안에서조차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중국에 관한 내용은 1995년도까지는 “제5장. 제2차

25) 김현주, 『세계력사』 고등중학교 6,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1, 10~17쪽.

26) 김현주·리철호, 『세계력사』 고등중학교 6,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8, 16~22쪽.

27) 럽춘경, 『세계력사』 고등중학교 4,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12~20쪽.

28) 김현주·리철호, 앞의 책, 40~43쪽.

세계대전후 사회주의나라들”의 “제2절.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에서 1항으로, 그리고 1998년도에는 “제4장.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제1절.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1항으로 다루었다. 그러다 2002년도에는 “제4장. 제2차세계대전후 민족해방운동의 양양”의 “제1절.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독립된 절로 다루었다.

1991(제4장 제2절, 제5장 제2절)	1998(제3장 제2절, 제4장 제1절의 1)	2002(제4장 제1절)
제4장. 제2차 세계대전 제2절.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반파쇼민족해방투쟁의 양양, 쏘련군대의 반공격 - 아세아에서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양양  제5장. 제2차 세계대전후 사회주의나라들 제2절. 제2차 세계대전후 아세아 사회주의나라들 1. 중국에서 인민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건설 - 제3차 국내혁명전쟁 -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 - 토지개혁의 완수와 인민경제의 복구 -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된 성과	제3장. 제2차 세계대전 제2절.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반제반파쇼민족해방투쟁의 양양, 쏘, 미, 영 3개국 수뇌자회담 1. 아세아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의 양양 -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 - 중국인민의 투쟁 - 동남아세아인민들의 투쟁 2. 쏘, 미, 영 3개국수뇌자회담  제4장.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 여러 나라들 제1절. 아세아, 아프리카나라들 1. 중국 - 제3차 국내전쟁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의 창건 - 인민경제의 복구와 사회주의건설	제4장. 제2차세계대전 후 민족해방운동의 양양 제1절.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 1. 제3차 국내혁명전쟁의 시작 2. 인민해방군의 총 공격,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995년도까지는 북한이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하여 ‘반파쇼민족해방투쟁’과 ‘쏘련군대의 반공격’이 중요한 사항이었다면,<sup>29)</sup> 즉 소련의 역할을 강조했다면, 1998년도에는 이 대신 ‘모스크바 3상회의’를 제목에 내세웠듯이,<sup>30)</sup> 소련의 역할을 약화시킨 것이 눈에 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사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1995년도까지는 ‘사회주의 국가들’만 서술의 대상으로 삼았다면,<sup>31)</sup> 1998년도에는 그 대상을 확대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루었다는 것이 특징으로 드러난다.<sup>32)</sup>

그러면서 2002년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여러 나라들의 움직임을 ‘민족해방운동의 양양’이란 측면에서 다루면서, 특히 제1절을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서술하고 있는 점이 이전과는 다른 특징으로 드러난다.<sup>33)</sup> 이는 해방 당시에는

29) 김현주, 앞의 책, 39~42쪽.

30) 김현주·리철호, 앞의 책, 50~51쪽.

31) 김광원·김현주, 앞의 책, 48~52쪽.

32) 김현주·리철호, 앞의 책, 59~61쪽.

모든 면에서 “소련을 따라 배우자”던 북한이, 1990년대 들어서면서 개혁·개방으로 사라진 소련, 즉 지금의 러시아와는 그만큼 거리를 두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그만큼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국에 대해서는 6·25전쟁으로 형성된 혈맹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 IV. 북한 역사 교과서의 일본 관련 서술의 변화

##### 1. 고대 및 중세 일본에 관한 서술의 변화

북한의 세계역사 교과서 가운데 일본에 관한 내용은, 고대까지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중세시대부터 나타나고 있다. 단, 중세 일본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그 이전까지의 일본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의 출발과 관련해서는, 단어를 약간 수정하고 단락을 늘린 것 이외에는, 1994년도와 1998년도에는 변화가 없었다.<sup>34)</sup>

그러나 2002년도에는, 일본이 “신석기시대를 수 천 년 동안 살아왔다”는 사실을 삭제하였으며, 일본의 원시공동체가 매우 ‘낙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사람들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여 계급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묘사한 것은 이전과 다름이 없으나, 그 조선사람들의 대표로 ‘고구려’를 내세우고 있는 점은 가야백제와 더불어 말하던 이전과 달랐다.<sup>35)</sup> 이는 1993년 단군릉과 동명왕릉을 발굴하고 1998년도부터 북한이 강성대국으로 나가면서 국사 교과서에서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를 강조하고, 고구려에 ‘강성대국’이란 호칭을 부르게 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36)</sup>

중세 일본과 관련해서는 1994년도에는 고등중학교 5학년 “제3장. 중세나라들”의 “제3절. 일본”에서 별도의 절로 나누어 다루다가, 1998년도에는 같은 장 “제1절. 중세 아세아나라들”에서 세 개의 항으로 다루었다. 그러다 2002년도에는 3학년 “제2장. 아시아와 유럽의 봉건국가들”에서 “제5절. 야마토국가와 사무라이통치”라는 제목으로 다루었다.

1994(제3장 제3절)	1998(제3장 제1절의 3)	2002(제2장 제5절)
제3장. 중세나라들 제3절. 일본 - 야마토국가의 형성	제3장. 중세나라들 제1절. 중세 아세아나라들 3. 중세일본	제2장. 아시아와 유럽의 봉건국가들 제5절. 야마토국가와 사무

33) , 앞의 책, 61~63쪽.

34) 민선규·진영균, 앞의 책, 42쪽 ; 임재준·최창길, 앞의 책, 52쪽.

35) 리성춘·최창길, 앞의 책, 37쪽.

36) 권성아, 『조선력사』를 통해서 본 북한 이념교육의 변화와 남북통합의 방향, 『통일과 평화』 3집 2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12, 104~106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개혁과 봉건제도의 확립</li> <li>- 사무라이의 출현과 막부 통치의 시작</li> <li>- 농민들의 반봉건투쟁</li> <li>- 봉건적분산성의 청산과 반동적대내외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마도국가의 형성</li> <li>- 대화개혁</li> <li>- 사무라이의 출현과 막부통치</li> <li>- 사무라이들의 조선침략과 그 참패</li> <li>- 일본에 대한 구미자본주의렬강들의 침략</li> </ul>	<p>라이 통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야마도국가</li> <li>2. 대화개혁과 봉건제도의 확립</li> <li>3. 사무라이의 출현과 막부통치</li> </ol>
---	--	---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1994년도까지는 일본 또한 중세나라들의 하나로 중요시 여긴데 반해, 1998년도에는 중세 아시아 국가들의 하나로 격하시킨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봉건국가들을 한 장으로 다루면서, 중세 일본을 한 절로 다시 살리기는 하였으나 “야마도국가와 사무라이 통치”에 한정하여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1994년도에는 고대 일본이 ‘발전된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시사회로부터 직접 계급사회인 봉건사회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100여개나 되는 소국들 가운데 경제와 문화가 가장 발전한 나라가 조선인들이 세운 소국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1998년과 2002년도에는 조선의 선진문화를 먼저 받아들인 곳이 ‘북큐슈 지방’이었고, 따라서 여기가 일본에서 가장 발전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열도의 첫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야마도 국가의 형성과 관련하여, 1994년도에는, 소국들이 “통일적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싸우던 중 나라 지방에 중심을 둔 야마도 국가가 정복하게 되어, 6세기에는 그 세력을 교토 지방까지 확장하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sup>37)</sup> 이에 비해 1998년과 2002년도에는, 야마도 국가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1~2세기와 3~4세기로 나누어 자세히 다루다가, 소국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것이 ‘야마도 지방’(교토, 오사까, 나라)에 있던 야마도 국가였기 때문에 4~5세기에 이웃의 작은 국가들을 통합하여 큰 국가를 세울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를 우리는 ‘왜국’이라고 불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1998년도에는 소국들 가운데에는 백제·가야·신라 계통의 주민들이 세운 나라들이 많았다고 표현한데 비해, 2002년도에는 그냥 조선사람들이 세운 소국들이라고 명기하였다. 그리고 야마도 지방에 큰 국가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1998년도에는 “야마도 국가가 강해서”라고 명기한데 반해,<sup>38)</sup> 2002년도에는 “일본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규슈로부터 야마도 지방으로 옮겨왔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up>39)</sup> 이와 같은 서술의 변화는 야마도 국가 성립에 고구려가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37) 진영균, 앞의 책, 42쪽.  
38) 임재준·최창길, 앞의 책, 52~53쪽.  
39) 리성춘·최창길, 앞의 책, 37~38쪽.

## 2. 근대 일본에 관한 서술의 변화

근대 일본과 관련해서는 1994년도에는 “제7장. 근대아세아나라들”의 “제2절. 1868년 부르쥬아혁명과 일제의 해외침략”이란 제목으로 다루다가, 1998년도에는 “제4장. 근대 자본주의나라들”의 “제5절. 일본자본주의”라는 제목으로 다루었다. 그러다 2002년도에는, 1994년과 1998년도 것을 종합하여, “제3장. 부르쥬아혁명과 자본주의의 확립”에서 “제6절. 《명치유신》과 일제의 해외침략”이라는 제목으로 다루었다.

1994(제7장 제2절)	1998(제4장 제5절)	2002(제3장 제6절)
제7장. 근대아세아나라들 제2절. 1868년 부르쥬아혁명과 일제의 해외침략 1. 1868년 부르쥬아혁명과 자본주의발전 - 《명치유신》 - 자본주의발전과 제국주의로의 이행 2. 일본제국주의의 해외침략 - 일제의 조선침략과 청일전쟁 - 로일전쟁	제4장. 근대 자본주의나라들 제5절. 일본자본주의 1. 1868년 부르쥬아혁명(《명치유신》)과 자본주의발전 - 일본부르쥬아혁명 - 자본주의발전과 제국주의로의 이행 2. 일본제국주의의 해외침략 - 일제의 조선침략 - 청일전쟁 - 로일전쟁	제3장. 부르쥬아혁명과 자본주의의 확립 제6절. 《명치유신》과 일제의 해외침략 1. 《명치유신》 2. 일제의 해외침략 ※ 로일전쟁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근대 일본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북한은, 1994년도까지는 1868년도에 있었던 일본의 명치유신을 ‘부르쥬아혁명’으로 명기하면서 이를 제목으로 강조하다가, 1998년도에는 근대 자본주의 나라들의 하나로 일본을 다루다보니 절의 제목을 ‘일본자본주의’로 바꾸고 대신 ‘명치유신’을 항의 제목에다 담아 이를 좀 더 부각시켰다. 그러다 2002년도에는 ‘근대’보다 ‘부르쥬아혁명’을 더욱 강조하여 이를 장의 제목으로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절의 제목에서는 부르주와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전은 사라지고, 대신 “명치유신과 일제의 해외침략”이 강조되었다.

특히, 2002년도에는 항 안에서 따로 목을 분리하지 않고 교과서 내용을 서술하였다. 그러면서 일본제국주의의 해외침략을 다루는 데 있어서, 1998년도에는 1994년도와 달리 러일전쟁뿐만 아니라 ‘일제의 조선침략’과 ‘청일전쟁’을 분리하여 다루었는데,<sup>40)</sup> 2002년도에는 이전과는 달리 일제의 해외침략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러일전쟁’만 별도로 표시하여 강조하여 다루었다.<sup>41)</sup>

40) 진영균, 앞의 책, 126~128쪽 ; 임재준·최창길, 앞의 책, 107~110쪽.

41) 리성춘·최창길, 앞의 책, 71~72쪽.

### 3.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에 관한 서술의 변화

북한의 세계역사 교과서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에 관한 내용은 1991년도에는 “제2장. 제1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나라들”의 “제1절.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대외침략전쟁”에서 별도의 절로 나누어 다루다가, 1998년도에는 “제2장. 파쇼독재정권의 출현과 파쇼나라들의 대외침략”의 “제1절. 파쇼독재정권의 출현”에서 3항과 “제2절. 파쇼나라들의 대외침략”에서 1항으로 다루었다. 그러다 2002년도에는 “제2장. 파쇼국가들의 출현, 대외침략”의 “제3절. 《9.18사변》 일본 《천황》 제파쇼독재정권의 수립”과 “제4절. 중일전쟁의 도발, 하싼호, 할힌골사건”에서 다시 절의 제목으로 내놓고 2절에 걸쳐 다루었다.

1991(제2장 제1절)	1998(제2장 제1절의 3과 제2절의 1)	2002(제2장 제3~4절)
제2장. 제1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나라들 제1절.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대외침략전쟁 1. 일제의 만주강점과 천황 파시즘의 형성 - 《9.18사변》과 일제의 만주강점 - 천황제파쇼군사독재정권의 수립 2. 중일전쟁의 도발과 침략 전쟁의 확대 - 《7.7사변》과 중일전쟁 - 하싼호, 할힌골 사건 - 침략적인 《대동아공영권》 창설계획과 전쟁의 확대	제2장. 파쇼독재정권의 출현과 파쇼나라들의 대외침략 제1절. 파쇼독재정권의 출현 3. 일본에서 천황제파쇼군사독재정권의 출현과 파쇼적정책 - 천황제파쇼군사독재정권의 출현 - 천황제파쇼군사독재정권의 파쇼적탄압 제2절. 파쇼나라들의 대외침략 1.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아세아대륙침략 - 만주강점 - 중일전쟁의 도발 - 하싼호, 할힌골 사건의 도발 - 침략적인 《대동아공영권》 창설 계획	제2장. 파쇼국가들의 출현, 대외침략 제3절. 《9.18사변》, 일본 《천황》 제파쇼독재정권의 수립 1. 《9.18사변》 2. 《천황》 제파쇼군사독재정권의 수립 제4절. 중일전쟁의 도발, 하싼호, 할힌골사건 1. 중일전쟁의 도발, 전쟁의 장기화 2. 하싼호, 할힌골 사건

1995년도까지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을 여러 ‘제국주의국가’의 하나로, 1931년 9.18사변으로 만주를 강점하고 ‘천황제파쇼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한 나라로 다루었다. 그러나 1998년도에는 단순한 제국주의가 아닌 ‘파쇼독재정권’을 장과 절의 제목으로 내걸고, 일본의 경우에는 특히 ‘천황제파쇼군사독재정권’으로 파쇼적 탄압을 자행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다 2002년도에는 장의 제목에는 파쇼독재정권이 아닌 ‘파쇼국가들’로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절의 제목에는 ‘천황제파쇼군사독재정권’으로 다시 표현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독특한 양식인 ‘천황’을 강조하여 표기하였다. 그러면서 만주를 강점한 9.18사변을, 1998년도에는 그 다음 절의 항 안에서 간략히 다룬데 반해, 2002년도에는 다시 절의 제목으로 강조하였다.

한편, 중일전쟁을 다루는데 있어서, 1995년까지는 한 항으로 다루면서, 그 배경이 된

7·7사변과 중일전쟁이 확대된 하싼호와 할힌골사건 및 그 결과 나타난 ‘대동아공영권’ 창설계획과 전쟁의 확대를 다루었다.<sup>42)</sup> 그런데 1998년도에는 중일전쟁을 한 항이 아닌, 여러 과쑤나라들의 대외침략을 다루는 절의 한 항인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아세아대륙침략” 안에서 만주강점과 더불어 중일전쟁과 하싼호와 할힌골사건 및 대동아공영권 창설계획을 다루었다.<sup>43)</sup> 그러면서 7·7사변과 중일전쟁의 확대 부분은 제목에서 삭제하였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중일전쟁과 하싼호 및 할힌골사건을 절의 제목으로 내걸고 다룰 정도로 강조하였다.<sup>44)</sup>

#### 4.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에 관한 서술의 변화

북한의 세계역사 교과서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일본에 관한 내용은 1991년도에는 “제4장. 제2차 세계대전”의 “제3절. 과쑤독일과 일본제국주의의 패망,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에서 하나의 절로 나누어 다루다가, 1998년도에는 “제3장. 제2차 세계대전”의 “제1절.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제3절. 과쑤독일과 일제의 패망”의 2개의 절로 나누어 다루었다. 그러다 2002년도에는 “제3장. 제2차 세계대전”의 “제3절. 일제의 태평양전쟁도발과 《중군위안부》 만행”과 “제6절. 일본제국주의의 패망”의 2절에 걸쳐 다루었다.

1991(제4장 제3절)	1998(제3장 제1절의 6과 제3절)	2002(제3장 제3절과 제6절)
제4장. 제2차 세계대전 제3절. 과쑤독일과 일본제국주의의 패망,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 크립회담 - 베를린함락, 과쑤독일의 패망 - 일본제국주의의 패망	제3장. 제2차 세계대전 제1절.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 6. 일제의 태평양전쟁도발 제3절. 과쑤독일과 일제의 패망 1. 베를린함락과 독일의 항복 2. 일제의 패망	제3장. 제2차 세계대전 제3절. 일제의 태평양전쟁 도발과 《중군위안부》 만행 1. 태평양전쟁의 시작 2. 일제의 《중군위안부》 만행 ※ 악명 높은 살인마집단 - 《731부대》 제6절. 일본제국주의의 패망

1995년도까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제의 패망’을 독일의 패망과 함께 한 절 안에서 한 목으로만 다루었다.<sup>45)</sup> 그러나 1998년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다루는 절에서는 ‘일제의 태평양전쟁 도발’을 한 항으로, 그리고 독일과 일제의 패망을 다루는 또 다른 절에서도 일제의 패망을 한 항으로 나누어 다루었다.<sup>46)</sup> 그러다 2002년도에는 일제의 태평양전쟁 도발뿐만 아니라 ‘중군위안부 만행’까지 한 절로 다루면서,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악명 높은 살인마집단 - 《731부대》”를 별도의 마크를 달고 틸드로 제

42) 김현주, 앞의 책, 25~27쪽.

43) 김현주·리철호, 앞의 책, 32~34쪽.

44) 럽춘경, 앞의 책, 40~42쪽.

45) 김광원·김현주, 앞의 책, 42~45쪽.

46) 김현주·리철호, 앞의 책, 55~58쪽.

공하였다. 그리고 일제의 패망도 한 개의 절로 독립시켜 강조하여 다루었다.<sup>47)</sup>

### 5.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에 관한 서술의 변화

북한의 세계역사 교과서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에 관한 내용은 1991년도에는 “제7장.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나라들”의 “제2절. 일본군국주의”라는 절로 다루다가, 1998년도에는 “제4장.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제1절.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8항으로 다루었다. 그러다 2002년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

대신, 같은 해에 새로 마련되어 2003학년도부터 사용된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 죄행”이라는 국사 교과서에서 이 시기와 관련한 일본은 “제2장.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조선침략전쟁도발,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전쟁가담”의 “제2절. 미제의 조선침략전쟁도발과 만행,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전쟁가담 죄행”과 “제3장. 전후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과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책동”의 “제2절.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책동” 및 “제4장.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반공화국압살책동”의 “제3절. 일본군국주의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서 다루었다.

1991(제7장 제2절)	1998(제4장 제1절의 8)	2002(제2장 제2절의 5, 제3장 제2절, 제4장 제3절)
제7장.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나라들 제2절. 일본군국주의 1.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 - 미제의 일본강점과 반동의 강화 -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 2.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책동 -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 - 동남아세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침략책동	제4장.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 여러 나라들 제1절.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 8. 일본군국주의 - 미제의 일본강점 - 황금의 소나기 - 해외팽창을 위한 군사력의 증강 - 조선과 동남아세아에 뻗치고 있는 침략의 마수	제2장.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조선침략전쟁도발,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전쟁가담 제2절. 미제의 조선침략전쟁도발과 만행,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전쟁가담 죄행 5.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전쟁가담죄행 제3장. 전후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과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책동 제2절.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책동 1. 남조선-일본 《회담》 2. 남조선주재 《일본대사관》 설치 3. 남조선에 대한 재침의 강행 제4장.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반공화국압살책동 제3절. 일본군국주의의 반공화국압살책동 1. 조일국교정상화회담 지연, 파탄책동 2. 반총련소동 3. 력사의곡책동

1995년도까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제국주의 국가들을 다루는 장에서 일본의 군

47) , 앞의 책, 50~53쪽.

국주의를 한 절로 다루면서,<sup>48)</sup> 그 안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패망으로 ‘미제의 일본강점’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일본에서의 ‘반동의 강화’로 결국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되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한 항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다른 항을 구성하여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책동”이란 제목으로,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침략을 다루었다.

이에 비해 1998년도에는 일본을 한 절로 다룬 것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루는 장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라들을 다루는 절에서 한 항으로 일본군국주의를 다루었다.<sup>49)</sup> 그러면서 그 안에서 미국의 일본 강점과 일본 군국주의의 확대를 다루었는데, 특히 여기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패망한 일본이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막대한 군사 장비를 생산·수리·보급하여 ‘황금의 소나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과 이에 따라 ‘해외팽창을 위한 군사력의 증강’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남아시아에 ‘침략의 마수’를 계속 뻗치고 있다는 것을 제목으로 드러내어 강조하였다.

그러다 2002년도에는 세계역사 과목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은 대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사 과목에서 아예 하나의 독립된 교과서로 개발하여 중등학교 마지막 단계인 고등중학교 6학년에 다루었다. 이 가운데 제2장은 8·15해방으로부터 6·25전쟁 시기까지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2절의 5항을 통하여 일본이 자국을 6·25전쟁 당시 미국의 한반도 침략의 ‘전쟁기지’로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sup>50)</sup> 그리고 제3장은 6·25전쟁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도 제2절을 통하여 ‘한일회담’과 ‘일본대사관’ 설치 문제를 항의 제목으로 다루면서 일본이 여전히 ‘군국주의’로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강행”하고 있다고 보았다.<sup>51)</sup>

마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의 상황을 다루는 제4장에서는 미국과 일본 ‘반동들’이 한반도에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면서, 제3절 1항에서는 1991년부터 진행된 ‘조일국교정상화회담’이, 일본이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편승”하였기 때문에 지연되다가 결국 파탄되었다고 보았다.<sup>52)</sup> 그리고 2항에서는 1998년 7월 이루어진 광명성 1호 발사 이후 일본에서 “반총련깜빠니야를 광란적으로 조장”하였다고 보았으며, 3항에서는 일본이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죄과를 인정하지 않고 저들의 침략력사를 미화분식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다루었다.<sup>53)</sup>

48) 김현주, 앞의 책, 95~100쪽.

49) 김현주·리철호, 앞의 책, 74~79쪽.

50) 허성철, 앞의 책, 24~25쪽.

51) 같은 책, 30~31쪽.

52) 같은 책, 38쪽.

53) 같은 책, 38~39쪽.

## V. 북한의 중국·일본 관련 서술 변화의 특징

### 1. 1994년 김일성 사망 시기까지의 특징

북한의 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해방 당시부터 모든 면에서 “소련을 따라 배우자”를 강조한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까지는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 그중에서도 특히 ‘소련’을 존중하면서 주체사상에 입각한 ‘인민 중심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세계사 교육에서도 가장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중국과 관련하여 1994년도 고등중학교 5학년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중세 시기 중국을 중세나라들의 하나로 중요시 여기나,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지키지 못한 송나라에 대해서는 “매국”으로 매도하였다. 그리고 근대 시기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외세의 반침략보다는, 중국 내부의 ‘반봉건’을 앞세워 중요시 여겼다.

또한 1991년과 1995년도 고등중학교 6학년 교과서에서도 ‘소련’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첫 사회주의국가로 내걸고, 그 안에서 중국의 ‘국내혁명전쟁’과 ‘항일전쟁’을 다루면서 이 전쟁의 주체인 ‘인민’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는 ‘반파쇼민족해방투쟁’과 ‘소련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사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중국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만 서술의 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일본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다루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경향, 즉 지금의 북한을 상징하는 ‘조선’과 ‘일본제국주의의 잔악성’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1994년도까지는 고대 일본이 발전된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여 원시사회로부터 직접 계급사회인 봉건사회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고대 일본은 중세 일본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간단히 다루었다. 그러면서 이 당시 100여개나 되는 소국들 가운데 “경제와 문화가 가장 발전한 나라가 조선인들이 세운 소국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1995년도까지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을 ‘제국주의국가’의 하나로 다루었으며, 1931년에 9·18사변으로 만주를 강점하고 ‘천황제파쇼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한 잔악한 나라로 다루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과 관련해서는, 2차 대전의 패망으로 ‘미제의 일본강점’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일본에서의 ‘반동의 강화’로 결국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되살아나게 되었다고 보았다.

### 2. 1998년 김정일 정권 장악 시기까지의 특징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서 소련과 중국에 개혁·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소련공산주의는 무너지고 1994년 김일성마저 사망한 이후, 1998년 김정일이 북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강성대국을 본격화한 시점부터는 주체사상을 보다 강화하여 ‘국내 인민들의 자주성’과

외세에 대한 ‘반제·반과소 운동’이 역사 교과서에서 보다 주된 개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도 교과서에서는, 이전에는 중국문명의 발생지로 소개하던, 황하 유역을 고대 중국 ‘인민들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지역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중세 중국에 있어서도 원과 청 등 중국의 주 종족이 아닌 ‘이민족’이 통치하던 시기는 제목으로 드러내지 않았으며, 송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주성’을 지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절대적 요구이며 빼앗길 수 없는 기본권리”인데 송은 그러질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나라 때 자본주의가 도입된 것은 ‘국가의 발전’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의 침략’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반봉건보다는 ‘반침략’을 앞세워 중요시 여겼다. 이는 북한이 강성대국으로 가면서 ‘반봉건’이라는 국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투쟁보다는 ‘반침략’이라는 외세에 대한 투쟁을 강조하게 되고, 그에 따라 “민족부르조아지가 아니라 로동계급이 혁명을 령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1998년도 고등중학교 6학년 교과서에서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소련’은 빼고 ‘첫 사회주의국가의 수립’을 다루면서, 중국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인민의 국내 투쟁이 아닌 외세에 대한 ‘반제반과소투쟁’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모스크바 3상회의’를 제목에 내세워 ‘소련의 역할을 약화’시켰다.

한편, 일본과 관련해서는 1998년도 교과서에서 근대 일본과 관련하여, ‘부르조아혁명’을 강조하던 1994년과 달리, ‘일본자본주의’와 ‘명치유신’을 좀 더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일본제국주의의 해외침략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이전과는 달리 ‘러일전쟁’뿐만 아니라 ‘일제의 조선침략’과 ‘청일전쟁’을 분리하여 다룸으로써, 일제의 잔악성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와 관련해서도 일본은, 단순한 제국주의 국가가 아닌, ‘천황제과소군사독재정권’으로 과소적 탄압을 자행한 나라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와 관련해서는, 2차 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이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막대한 군사 장비를 생산·수리·보급하여 ‘황금의 소나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과 이에 따라 ‘해외팽창을 위한 군사력의 증강’이 가능해져 한반도와 동남아시아에 ‘침략의 마수’를 계속 뻗치고 있다고 보았다.

### 3. 2000년대 강성대국 강화 시기의 특징

그런데 강성대국이 본격화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역사 교과서에서 이미 러시아연합국으로 바뀐 소련의 역할을 더욱 격하시키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다. 그리고 일본을 여전히 제국주의로 명기하여 미국과 더불어 한반도를 계속 침략하고 있는 나라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항하는 인민들의 반침략 투쟁보다는 이에 적

절히 대응하는 ‘국가 지도자의 영도’를 역사교육의 가장 주된 개념으로 올려놓았다.

이에 따라 중국과 관련해서는, 주나라에 앞서 중국의 고대문명과 하나라·상나라를 다루던 이전과는 달리, 주나라만 고대 중국으로 정식 명기하였으며 중국의 고대문화도 고대 이집트와 인도와 함께 다루는 데 그쳤다. 그리고 중세 중국의 나라들을 다루면서 ‘이민족’이 세운 청나라는 살렸는데, ‘매국’을 범한 송나라는 당나라 끝에 한 구절로만 다루었다.

또한, 근대에서는 침략의 주체가 ‘자본주의 열강’이기 때문에 인민들이 반침략·반봉건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고 하면서 중국의 대항을 확대하여 다루었는데,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서도, 소련이나 첫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장의 제목으로 다루던 이전과는 달리, ‘세계 여러 나라들의 혁명운동’의 측면에서 소련과 중국을 동등하게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여러 나라들의 ‘민족해방운동의 양양’을 다루면서,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을 강조한 것도 이전과는 달랐다. 이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개혁·개방으로 사라진 소련과는 그만큼 거리를 두면서, 대신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국에 대해서는 6·25전쟁으로 형성된 혈맹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일본과 관련해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국과 더욱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고대 일본에 대해서는 ‘신석기시대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일본의 ‘원시공동체가 매우 낙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여 계급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본 것은 이전과 다름없으나, 그 대표로 ‘고구려’를 내세우고 있는 점은 달랐다. 이는 1993년 동명왕릉을 발굴하고 1998년도부터 강성대국론기로 나가면서 고구려의 역사를 강조하고, 고구려를 ‘강성대국’이라 부른 것이 세계사에도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구려가 기여하지 못한 중세 일본’의 건설과 관련해서는 그냥 조선사람들이 세운 소국이라고 명기하였으며, 야마토국가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단순히 “일본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규슈로부터 야마토 지방으로 옮겨왔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해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일제의 태평양전쟁 도발뿐만 아니라 ‘중군위안부 만행’까지 한 절로 다루면서, “악명 높은 살인마집단 《731부대》”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러나 2002년도 세계역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은 대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사 과목으로 독립시켜 2003학년도부터 고등중학교 6학년에서 다루면서, 일본이 6·25전쟁 당시 자국을 ‘미국의 한반도 침략의 전쟁기지’로 제공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한일회담과 일본대사관 설치 과정을 통해 일본이 여전히 ‘군국주의’로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강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에도 미국과 일본 ‘반동들’이 한반도에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면서, 1991년부터 진행된 ‘조일국교정상화회

담'은 일본이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편승"하였기 때문에 지연되다가 결국 파탄되었으며, 1998년 광명성 발사 이후 "반총련깜빠니야를 광란적으로 조장"하는 등 일본은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죄과를 인정하지 않고 저들의 침략력사를 미화분식하고 있다"고 보았다.

결국, 2000년대 접어들어 북한의 역사교육은, 중국과 관련해서는, 동일시 대상이던 소련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지키고자 한 중국에 더 역점을 두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제국주의·군국주의가 그들의 이익 때문에 미국과 연합하여 여전히 한반도를 침략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강성대국을 표방하고 있는 북한을 고구려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 받은 나라로 세계사에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도하기보다는 동아시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역사교육의 내용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 개혁·개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김정은에 의해,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되어 동아시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그에 따라 북한의 역사 교과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되길 기대해 본다.

## ※ 참고문헌

- 강근조, 『조선교육사』 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 권성아, 「『조선력사』를 통해서 본 북한 이념교육의 변화와 남북통합의 방향」, 『통일과 평화』 3집 2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12, 93~129쪽
- 권오영, 「단군릉 사건과 대동강 문화론의 전개」, 『북한의 역사 만들기』,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3, 87~109쪽
- 김광원·김현주, 『세계력사』 고등중학교 6,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1; 1995
-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제88.1.1)」,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_\_\_\_\_, 『혁명의 붉은기를 지켜』,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김현주·리철호, 『세계력사』 고등중학교 6,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8
- 민선규·진영균, 『세계력사』 고등중학교 5,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4
- 럼춘경, 『세계력사』 고등중학교 4,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 『로동신문』, 1998년 4월 25일 ; 1998년 8월 22일
- 리성춘·최창길, 『세계력사』 고등중학교 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 신효숙,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0,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3
- 오영철,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3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1
- 이영중, 『후계자 김정은』, (주)늘품플러스, 2010
- 임재준·최창길, 『세계력사』 고등중학교 5,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8
- 정성장, 「통치이념」, 『북한의 사상과 역사인식』,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도서출판 한울, 2006, 25~69쪽
-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교육과학사, 1997
- 허성철,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죄행(1930~1990년대)』 중학교 제6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토론문>

권성아 「북한 역사교과서의 중국·일본 관련 서술의 변화」에 대한 토론문

박재영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북한의 역사학과 역사교육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 ‘북한바로알기운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일부 북한 서적에 대한 출판이 허용되었고, 1989년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가 일반인에게 개방되면서 북한 역사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한 역사교육에 대한 연구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제약을 받아오다가, 1977년 이운정의 『북한연구총서』 4집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후 다수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역사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강우철·신형식의 「남북한 국사교과서(중학교)의 비교연구」를 기점으로 연구에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이찬희의 경우 1983년 이전과 1989년 이후 개정된 역사교과서를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내용상의 변화를 분석을 했는데 이는 본격적인 북한 역사교과서연구를 알리는 시발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후 연구자들의 관심이 남북한 역사교과서 비교연구에 집중되는 양상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 측 자료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보다 활발한 북한 자료의 수집과 학문적 교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자들의 북한역사교과서 연구방법론으로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또는 단순히 남북한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상호 비교·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본 토론자 역시 이전에 북한 『조선력사』 교과서에 나타난 “서세동점기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이미지” 및 “동학농민전쟁” 관련 내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학술대회에서 권성아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권성아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한 토론자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출판된 북한 역사교과서의 중국과 일본 관련 내용의 분석이라는 쉽지 않은 주제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논리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주신 발표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표자께서 분석하신 북한 교과서는 1991년에서 2002년 사이에 출판된 <세계력사> 교과서를 주로 하고, 중국 및 일본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조선력사>와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 죄행> 교과서를 참고하셨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북한 자료 입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1991년 이전의 교과서를 입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부제 역시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라고 붙이는 것 보다는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라고 제시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둘째, 발표문의 내용 구성을 보면, 시대별로 북한 <세계력사> 교과서의 목차 변화를 살펴 본 다음, 제3장과 제4장에서 <세계력사> 교과서의 중국 및 일본 관련 서술의 변

화를 시대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지만, 본론 부분의 내용이 북한 교과서의 서술상의 변화에 맞추어 있다기보다는 시기적으로 ‘목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맞추어져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목차상의 변화에 따라 교과서 내용상의 변화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제시된 자료를 보면 교과서 내용의 경우 일부 내용이 큰 따옴표(“”)안에서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고 ‘목차’의 제시가 본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론 부분에서 교과서 출판 연도에 따른 서술내용상의 변화 부분도 인용하여 분석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셋째, 본 발표문의 결론 부분인 제5장 관련입니다. 제5장에서는 북한 <세계력사> 교과서의 중국과 일본 관련 서술 변화의 특징을 김일성의 사망과 김정일 체제의 확립을 기준으로 두 시기로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2000년대 들어서 북한 <세계력사> 교과서의 서술이 중국과 관련해서는 ‘동일시 대상이었던 소련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지키고자 한 중국에 더 역점을 두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련 서술에서는 ‘일본의 군국주의·제국주의가 그들의 이익 때문에 미국과 연합하여 여전히 한반도를 침략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는 것’으로 보면서, 강성대국을 표방하는 북한이 스스로를 세계사에서 고구려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 받은 나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의 공식적인 권력승계가 마무리되던 1998년 이후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강성대국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성대국’이라는 용어는 1998년 1월 4일자로동신문에 “사회주의 승리자의 기개를 떨치자”라는 논설에 처음 등장하였고, 1998년 8월 22일 로동신문에 “강성대국론”이 공식적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대내적으로 김정일 시대의 출범과 함께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구호와 통치이념의 필요와 대외적으로 북한이 견제하고 있음을 과시할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에 발행된 <조선력사> 교과서에는 ‘조선민족 제일주의’와 ‘강성대국론’이 강조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sup>1)</sup> 또한 발표자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역사의 주체는 인민이고 이러한 인민들은 자주성, 창조성을 지닌 존재임을 강조하면서도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와 김정일 원수님의 올바른 지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주체시대는 후계자에 의해서만 계승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철학적 원리, 즉 철저하게 주체사상의 원리가 역사교과서에 반영되어 서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표자는 그러한 북한 역사교과서 서술의 기본 방향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도하기 보다는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역사교육의 내용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북한의 역사교과서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문의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자는 아무리 개혁·개방을 시도하고 있는 김

1) “ 깊이 학습하는 것은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가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날의 우리 나라 력사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강하였던 시기는 고구려시대였습니다》 (중략) 고구려는 B.C. 277년부터 663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 강성대국으로서의 위력을 떨쳤다.”(오영철, 『조선력사(고등중학교 3)』, 교육도서관사, 2002, 25쪽)

정은 체제가 들어섰더라도 북한의 역사교과서 서술의 기본 방침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발표자가 언급하신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되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보이는데,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북한 역사교과서의 재구성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 5 주제**

###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서술의 변화**

**- 재일조선인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

**발 표 자 : 김 인 덕 (청암대학교)**

**토 론 자 : 성 주 현 (경기대학교)**



#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서술의 변화

- 재일조선인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

김인덕(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아연구소)

- I. 머리말
- II.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 일제시대 서술의 요점
  - 1. 후소샤(扶桑社)판 중학교과서  
시판본 『新しい歴史教科書』(2005)의 서술 태도
  - 2. 東京書籍의 중학교과서 『新編新しい社會歴史』의 서술 태도
- III. 일본 역사교과서의 재일조선인 서술
  - 1. 주요 주제별 서술 내용
  - 2. 2011년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
- IV. 재일조선인 주체의 역사 서술
  - 1. 총련계
  - 2. 민단계
- V. 맺음말

## I. 머리말

현재 일본은 빠른 속도로 우경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국제정세의 변화와 일본 사회 내부의 모순이 이를 증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우경화는 1997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발족하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국가의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장벽을 넘어 인류가 공존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종국적인 목적인 것이다.

가까운 나라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역사교과서는 오랫동안 공존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논의가 존재했지만 세계사적인 관점과 지역사적 이해를 동시에 고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민족 간의 주체적 입장을 상정하고, 양국의 내재적 발전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하기도 어렵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사가 바르게 자리 잡히게 해야 한다는 명제가 존재함에도 이것은 경구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일본에서 여러 방향에서 역사연구와 교육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교육되어 온 역사교육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도 있다. 1)일본의 과거를 플러스적

인 측면에서 보고, 자랑할 수 있는 일본을 주장하는 입장, 2)과거의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를 직관하고, 역사의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넘어서려고 하는 입장, 3)특히 도구나 생활에 관해, 역사적으로 그것을 원시적으로 돌아보고자 하는 학습, 4)역사개념의 형성이나 사고력을 풍성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발달이라는 측면을 중시하는 역사교육의 독자성을 강조-시간인식, 공간인식의 육성이다.<sup>1)</sup>

일본의 경우, 채택률이 높은 5종 교과서는 대체로 현대 한국에 대해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있다.<sup>2)</sup>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맥락 속에서 일본사를 체계화하는 점, 냉전의식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로운 점, 민주주의·평화·인권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점이 장점이라고 한다.<sup>3)</sup>

일본 국내에서는 연구자들이 일본사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 적지 않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성과물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미우라 슈몽(三浦朱門)이 편찬한 분석 결과는 역사교과서 분석에 주목되는데, 포괄적인 연구방법론을 도입한 것으로 참고할 만한 연구 결과이다.<sup>4)</sup> 이와 함께 후소샤(扶桑社)판 교과서에 대해서는 열린 역사교육회의 『新しい歴史教科書の正しい読み方』(青木書店, 2007)이 있다. 이 책에 따르면 후소샤판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은 유아독존적인 일본관, 과거 일본 전쟁의 정당화, 민중운동의 경시,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적 논리가 설명되어 있지 않는 점이다.<sup>5)</sup>

국내에서도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다.<sup>6)</sup> 최근에는 2011년 검정합격 일본의 중학 역사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도 여러 곳에서 진행했다. 중학 역사교과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은 신주백의 글이 주목된다. 신주백은 2005년도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부분을 평가하여, “일제강점기와 1945년 이후의 한일 관계사에 관한 내용을 보면, 한국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식민지 지배의 수탈성과 강제성을 은폐하며 합리화하는 한편,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의 소중함을 부정하고 전쟁을 미화하려는 일본 보수우파의 영향력이 2001년도 교과서 집필에 비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sup>7)</sup>

특히 일본 교과서 가운데 후소샤판의 집필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 논문이 나와 있다. 이 가운데 박찬승, 허동현의 성과가 주목된다.<sup>8)</sup> 전자는 주로 전쟁과 식민지 지배와 관련해 서술하고, 후자는 자민족 우월주의적 관점과 침략사의 부정과 전체주의의 찬양에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다고 후소샤판 교과서의 문제를 지적했다.

1) , 일본의 교육개혁과 역사교과서 연구의 과제,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혜안, 2000, 436~437쪽.

2) 김인덕, 「한일양국의 근현대사 서술과 재일조선인사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17, 2007.9 참조.

3) 김성보, 「한국일본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비교」, 『화해와 반성을 위한 동아시아 역사인식』, 역사비평사, 2002, 46쪽.

4) 三浦朱門, 『全「歴史教科書」を徹底検証する』, 小学館, 2005.

5) ひらかれた歴史教育の會, 『新しい歴史教科書の正しい読み方』, 青木書店, 2007 머리말.

6) 이하의 서론의 내용 가운데 별도의 주가 없으면 필자의 다음의 글 참조(김인덕, 「한일양국의 근현대사 서술과 재일조선인사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17, 2007.9 ; 김인덕, 「在日朝鮮人總聯合會의 歴史教材 敘述體系에 대한 小考- 『조선력사』(고급3)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14, 2008.6).

7) 신주백,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2005년도 검정본 분석」, 『한국근현대사연구』 33, 2005.6.

8) 박찬승,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근현대사(1910년 이후) 서술과 역사관 분석」, 『한국사연구』 129, 2005 ; 허동현,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후소샤 版) 문제의 배경과 특질」, 『한국사연구』 129, 2005.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첫 파동은 1982년 6월 일본 문부성이 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를 검정할 때, 원본의 ‘침략’을 ‘진출’로 수정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일어났다. 둘째 파동은 1986년 5월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라는 일본 우익단체의 주도로 제작된 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 『신편 일본사』가 ‘한일합방’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일제의 억압을 삭제한 상태로 검정에 합격함으로써 일어났다. 이상의 파동은 한국정부의 시정요구를 일본 측이 수용하여 해결되었다. 셋째 파동은 2001년 3월말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에 합격된 우익 교과서 등 8종의 중학교용 역사교과서의 한국사왜곡 문제로 인하여 일어났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그해 5월 8일, 가장 문제가 되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후소샤(扶桑社) 출판의 교과서에 25개 항목, 기존 7종의 교과서에 10개 항목, 도합 35개 항목의 수정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sup>9)</sup>

현재 일본 역사교과서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서술은 분명 차별적이다. 그리고 그 근거는 철저히 한국 관련 서술에 의거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결성된 재일본조선인총연맹은 1946년 2월 교재편찬위원회를 두어 1948년까지만 해도 92점, 100만부의 교과서와 부교재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본 전역에서 민족교육을 주도적으로 실시했다.

본고는 기존 왜곡된 일본 역사 교과서 속 재일조선인에 대한 서술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중학 일본 역사교과서<sup>10)</sup>의 일제시대 서술의 왜곡의 요점을 다시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재일조선인에 대한 서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이와 동시에 재일조선인이 주체가 되어 만든 교과서의 재일조선인 관련 기술의 내용 파악을 통해 향후 재일조선인에 대한 남북한과 일본에서 함께 사용하는 교재의 방향을 전망해 보겠다.

## II.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 일제시대 서술의 요점<sup>11)</sup>

### 1. 후소샤(扶桑社)판 중학교과서 시판본 『新しい 歴史教科書』(2005)의 서술 태도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에는 일본사 서술 내용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는, 대체로 현대사 서술 전반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그 이전의 역사에 관한 서술에 비해 일본의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국제관계를 묘사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강대국 중심의 국제관계에

9) , 일본 우익교과서의 한국사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3, 298쪽.

10) 두 권은 다음과 같다. 후소샤(扶桑社)판 중학교과서 시판본 『新しい 歴史教科書』(2005)과 東京書籍의 중학교과서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2005)이다. 전자는 왜곡의 대표성에서 후자는 채택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했다.

11) 본 장에서는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 교과서(후소샤(扶桑社)판 중학교과서 시판본 『新しい 歴史教科書』(2005)와 대표적인 채택률을 보이고 합리성이 내재되어 있는 교과서(東京書籍의 중학교과서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2005)를 대상으로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서술 경향을 대비적으로 보고자 한다.

치중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현대사 서술에 있어서 교과서들이 국민국가 중심의 서술에 치우쳐 주변국, 소수자, 경계인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조선이나 대만과 같은 전전 일본 제국의 식민지와 새로운 관계 구축,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일본군 점령지에 대한 전후 처리에 대해서는 서술이 미흡하거나 전무하다. 이와 함께 일본의 경제발전의 축을 국제경제 ‘중심’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서술된 점이 많다. 따라서 한국이나 동남아시아와 같이 일본에게 있어서 상품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국가와 지역에 관한 서술이 미흡하다.<sup>12)</sup>

대표적인 왜곡된 교재를 통해 서술의 문제를 다시 확인해 보자. 후소샤(扶桑社)판 중학교과서 시판본 『新しい 歴史教科書』(2005)의 관점은 왜곡의 전형이다. 이 교과서의 한국의 역사를 왜곡 서술한 내용 중에서 근대 이후의 시기에서 몇 가지 추출하여 살펴보면, 첫째로 한반도 위협론을 들어 근대에 있어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고 있다. 둘째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약소민족의 독립과 자국의 방위를 위한 의로운 전쟁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셋째로 한국병합의 정당성과 식민통치 시혜론을 주장하고 있다.<sup>13)</sup>

후소샤 시판본 『新しい 歴史教科書』는 ‘침략’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침략행위를 일본을 위한 애국행위, 일본 국력의 상징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기존 7종의 교과서도 ‘침략’이란 용어를 거의 다 삭제하여 일본의 침략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침략 사실의 은폐는 과거의 문제로서보다도 미래의 문제로서 중대하다. 그것은 장차 일본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외국을 침략해도 괜찮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설사 과거 약육강식의 시대에 행해진 일본의 주변 국가에 대한 침략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과거의 침략행위를 침략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주변국가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해로운 것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미 선행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후소샤판의 역사교과서 집필의 가장 큰 목적은 청일전쟁 이후 태평양전쟁까지 일본이 저지를 여러 차례의 침략전쟁 도발을 합리화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과거 일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전쟁 도발을 ‘죄악시’하는 이른바 ‘자학사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sup>14)</sup> 따라서 2005년판 후소샤 수정본은 조선의 식민지화를 자의적으로 서술하고, 더 나아가 ‘한국병합’에 대해 구미열강과의 국제적인 거래였다면서 식민지 지배의 객관성을 획득하고자 한다.

후소샤 시판본 『新しい 歴史教科書』(2005)은 3·1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간단히 서술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왜곡의 함정에 빠지게 한다. “일본의 지배하의 조선에서는 1919년 3월 1일, 구국왕의 장의에 모였던 사람들이 서울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만세」를 외치고, 데모행진을 했다. 이 움직임은 곧바로 조선전토에 퍼졌다(3·1독립운동). 이

12) , 한국과 일본의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전후 한일관계 관련 서술, 『동북아역사논총』 17, 2007.9 참조.

13) 유영렬, 「일본 우익교과서의 한국사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3, 304~307쪽.

14) 박찬승,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근현대사(1910년 이후) 서술과 역사관 분석」, 『한국사연구』 129, 2005, 282쪽.

때 조선총독부는 무력으로 이것을 탄압했는데, 그 후는 무력으로 억압하는 통치 방식을 변경했다.”<sup>15)</sup> 역사 서술에 있어서는 용어의 사용이 중요한데, 후소샤 시판본 『新しい歴史教科書』(2005)은 고종황제를 ‘구국왕’이라고 비하하고, 마치 일본이 자주적으로 무력 통치를 고쳤던 것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2005년 후소샤 시판본 『新しい歴史教科書』(2005)는 검정 신청본에 비해 보다 더 일본 중심적이고, 침략적인 서술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2. 東京書籍의 중학교과서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2005)의 서술 태도

일본의 중학교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사용했던 교과서가 東京書籍 중학교과서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2005)<sup>16)</sup>이다.

東京書籍 중학교과서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2005)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은 첫째로 ‘한일합방’과 관련해 서술할 때, 먼저 일본의 중국침략을 거론하고 일본 내 중화학공업 발전에 따라 조선에 ‘진출’했다는 것이다. “한편 군수와 정부의 보호에 의해 중화학공업이 크게 발전하여, 경공업의 생산을 회복했다. 화학공업 등에서는 새로운 재벌이 급성장하고, 조선·만주에도 진출했다.”<sup>17)</sup> 결국 식민지 지배는 일본인으로 동화였다고 할 수 있다. 즉, “1910년 한국은 일본에 병합되었다. ... 학교에서는 조선사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일본사와 일본어를 가르치며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교육을 했다.”<sup>18)</sup>고 한다.

東京書籍 중학교과서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2005)는 3·1운동에 대해 학생 중심의 ‘독립만세’로 규정하고,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바뀌었으며,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3·1독립운동’에 대해 공감한 일본인인 야나기 무네요시가 있고, 그를 ‘인터내셔널리스트’로 규정했다. “야나기 무네요시아말로, 각각의 민족성을 존중하는 국제성-인터내셔널리즘을 갖고 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이상과 같이 東京書籍 중학교과서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2005)는 국제관계에 대한 서술이 아주 소략하고, 한국 관련 본문 내용이 극히 소량에 지나지 않다. 한일합방, 3·1운동, 야나기 무네요시, 황민화 관련 내용 정도였다.

## III. 일본 역사교과서의 재일조선인 서술

### 1. 주요 주제별 서술 내용

<관동대지진>

재일조선인사 관련 내용을 보면, 후소샤 시판본 『新しい歴史教科書』는 관동대지진

15) 『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2005), 185쪽.

16) 이 책도 일본에서 2002년의 경우 중학생의 51.2%가 배우고 있다.

17)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東京書籍, 2005), 187쪽.

18)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東京書籍, 2005), 160쪽.

19)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東京書籍, 2005), 175쪽.

당시 조선인학살 관련 내용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다고 보인다. 후소샤 시판본 『新しい 歴史教科書』는 1923년 관동대지진의 혼란을 틈타서 일본 관헌들과 민간 自警團이 자행한 조선인에 대한 의도적인 대학살에 대하여 검정 신청본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로 검정 합격본은 “이런 혼란 중에 조선인 및 사회주의자 사이에 불온한 책동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주민의 자경단 등이 사회주의자 및 조선인·중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sup>20)</sup>고 하여 관헌들의 관련을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하여 기술하였다. 사건의 진상은 1923년 대지진을 당하여 참담해 하는 東京과 横濱 주민들에게 “조선인들이 혼란을 틈타 우물에 독을 넣어 일본인들은 독살하려고 한다”는 헛소문을 퍼트려 주민들을 분노케 하여 조선인을 무차별 학살하게 한 배후에는 관헌들이 있었고, 관헌들 스스로도 학살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일본인 연구자들도 당시 조선인 무차별 학살에 대하여 “조선인은 주로 주민의 자경단에 의해서 살해되었지만 군대와 경찰도 이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당시 6,000여 명의 조선인이 살해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sup>21)</sup>

#### <강제연행>

강제연행에 대해 東京書籍 중학 교과서는 사실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황민화」라는 이름 아래, 일본어의 사용과 성명의 표기를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한 창씨개명을 추진하였다. 더하여 지원병제도를 실시하여, 조선 사람들도 전쟁에 동원하였다.”<sup>22)</sup> 이들은 일본에 연행되어, 가혹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으로 지극히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sup>23)</sup> 이러한 강제연행에 대한 약속이 곧바로 개관적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후소샤 시판본 『新しい 歴史教科書』는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전시 하의 생활’을 서술하며, 간단히 그 역사적 사실만을 거론했다. “전쟁 말기에는 징병이나 징용이 조선이나 대만에도 적용되어, 현지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희생과 고통을 안겨 주었다. 또한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일본의 광산 등에 연행되어 혹심한 조건 하에서 노동을 하였다.”<sup>24)</sup> 이렇게 강제연행과 관련해서는 징병과 징용만 언급되고 ‘군위안부’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sup>25)</sup> 역사교육 소재로 ‘군위안부’ 문제는 언급할 필요가 있다.

#### <일본군위안부>

후소샤 시판본 『新しい 歴史教科書』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내용을 일체 반영하지 않았다. 일제 말기에 일본군이 한국·중국·대만 등지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20) 『新しい歴史教科書』 합격본」 223쪽.

21) 『解明日本史A』(三省堂, 1998) 124쪽 참조. 이 교과서에 의하면, 관동대지진 당시 이재민의 수는 340만인, 사망과 행방불명자의 수는 10만인을 넘었으며, 당시 학살된 조선인의 수는 6천 명 이상이었다고 한다.

22)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東京書籍, 2005), 189쪽.

23)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東京書籍, 2005), 193쪽.

24) 『新しい 歴史教科書』(扶桑社, 2005), 208쪽.

25) 박찬승,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근현대사(1910년 이후) 서술과 역사관 분석」, 『한국사연구』 129, 2005, 299쪽.

군대 위안부로 삼은 사실은 1996년 이후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반영되어 왔다. 그런데 ‘새 역사모임’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은 비교육적이고 일본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한다고 하여 이를 취급하지 않았다.

후소야 시판본 『新しい歴史教科書』의 영향으로 당시 7종의 교과서 중 4종의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기술하지 않았다. 그 이후 2011년의 경우 일본 중학의 역사교과서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가혹 행위의 상징이며, 반인륜적 성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시켜 일본의 잔혹한 행위를 은폐한 것이다.

한편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재일조선인 관련 내용은 귀환과 한일회담 정도를 언급하는 수준이다. 귀환과 관련한 서술은 『詳説日本史』(山川出版社, 2007년판)이 말미의 「민주화의 과제」에서 “재일한국·조선인과 아이누인,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일도 일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과제”<sup>26)</sup>라고 언급한 것이 유일했다.<sup>27)</sup>

그런가 하면 한일회담을 서술할 때 일본의 역사교과서<sup>28)</sup>는 한국과의 관계수립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지만, 국교정상화 과정에서의 역사인식의 차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모습이 보인다.

【표 1】 주요 역사 교과서(2005-2007)의 한일회담 서술 태도

교재	서술 내용
『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2005년판)	“1965년에는 일본이 한국과 기본조약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했으며 유상 2억 달러, 무상 3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약속했다.”
『新編 新しい社会歴史』(東京書籍, 2006년판)	“일본이 1965년에 한국과 기본조약을 맺어 한국정부를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서 승인했다.”
『詳説日本史』(山川出版社, 2007년판)	“한국정부를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한국과 국교를 맺었다.”

이러한 기사는 대체로 한일회담을 간단히 서술하고, 경제협력으로 전후처리를 다했다 관점을 견지하고 동시에 냉전체제의 확립에 따른 북한 소외에 대해 문제라는 관점을 견지하는 서술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측의 입장을 무시하는 인식의 틀을 보이고도 있다.

## 2. 2011년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

26) 『詳説日本史』(山川出版社, 2007년판), 214쪽.

27) 최영호, 한국과 일본의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전후 한일관계 관련 서술, 『동북아역사논총』 17, 2007.9 참조.

28) 대상은 다음과 같다. 『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2005년판), 『新編新しい社会歴史』(東京書籍, 2006년판), 『詳説日本史』(山川出版社, 2007년판).

2011년 7개의 일본 출판사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통해 재일조선인 서술의 기본적인 내용을 통해 최근 일본 내 재일조선인 서술의 흐름을 확인해 보자. 동북아역사재단은 『2011년 검정합격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한국관련 번역 자료집』을 간행하여 東京書籍, 教育出版, 帝國書院, 日本文教出版, 清水書院, 育鵬社, 自由社の 한국 관련 기사를 부분적으로 번역했다. 여기에서는 부분적으로 재일조선인 관련 기사가 확인된다. 주요 2011년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재일조선인 관련 서술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2>과 같다.

이 가운데 清水書院의 재일조선인 관련 기술은 다른 교과서 보다 양과 질적 내용이 탁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각종 사진 자료(兵庫縣 神戸市 조선시장의 모습(1938년)(220쪽), 재일조선인 인구의 추이(220쪽))가 실려 있다.

둘째 재일조선인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예를 들면, “조선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조선 농민들 중에는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극동지방으로 이주해서 농업을 하거나 노동자가 되어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일본으로 온 조선인은 낮은 임금으로 가혹한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그 생활을 유지해서 오랫동안 일본에서 살게 된 사람도 있었다.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노동조합의 결성과 정치운동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일본인의 대다수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 의식을 갖고 그들을 위험한 사람들로 간주했다. 1923년 관동대진재의 혼란 속에서는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믿는 일본인이 조선인을 학살하는 사건이 관동 각지에서 발생했다.”(220~221쪽)

셋째,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와 관련해서 조선과 ‘타이완’의 전쟁 영향과 민중의 동원, 군인이 된 조선인의 상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239쪽)

넷째,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다른 교과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여성을 여자근로정신대로 보내거나, 학도근로동원을 일으켜서 군수공장 등의 생산을 추진했다. 또한 억지로 끌려온 조선인과 중국인, 연합국군 포로도 탄광 등에서 노력했다.”(241쪽)고 하여 동원의 형태를 적기했다.

【표 2】 2011년 일본 주요 중학교 역사교과서 재일조선인 관련 서술 현황

교과서	주제/테마	핵심 서술 내용
東京書籍	관동대지진	혼란 속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가 폭동을 일으킨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 사회주의자 등이 살해 당했습니다.(197쪽)
	패전 후의 일본	일본에서는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귀국했다. 그 한편으로 일본국적을 상실하면서도 귀국할 곳의 혼란 등의 이유로 일본에 머문 조선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226쪽)
教育出版	역사의 창 “관동대지진”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주민이 조직한 자경단과 경찰·군대에 의해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203쪽)

帝國書院	황민화정책	일본국내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기업 등에서 반 강제로 할당을 정해서 조선인과 중국인을 모았고, 일본 각지의 탄광과 광산 등으로 데리고 가서 낮은 임금으로 가혹한 노동을 강요했습니다.(213쪽)
	BOX“재일조선인”	일본의 식민지정책 등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시에 일본에 있던 조선인은 거의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전 후 곧바로 조선반도로 귀국했는데 일과 가족 문제 등으로 일본에 잔류한 사람도 60만 정도였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전후 법류에 의해 외국인으로 취급되었고 일본 국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차별과 권리의 제한에 고투하면서도 현재 ‘재일조선인’으로 일본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235쪽)
日本文教出版	근대사 플러스알파 “관동대지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는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주민과 경찰에 의해 퍼져서 주민이 조직하는 자경단 혹은 군대와 경찰이 조선인 등 수 천명을 살해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갑작스런 피해에 의한 정신적 혼란,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 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217쪽)
育鵬社	관동대지진	교통과 통신이 끊긴 혼란 속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가 주민들이 조직한 자경단 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199쪽)
	국가총동원체제	조선과 타이완에서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되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광산 등으로 끌려가서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는 조선인과 중국도 있었습니다.(218쪽)
自由社	국민의 동원	조선인과 중국인이 일본의 광산 등으로 보내져서 가혹한 조건과 대우하에서 노역을 당했다.(235쪽)

2011년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일제시대의 재일조선인 관련 기술에서, 첫째, 관동대지진 시기 조선인의 학살과 관련해서 일본 사회주의자의 학살과 연계한 서술을 하고 있다. 둘째, 관동대지진으로 외국인 학살을 거론할 때 자경단의 역할을 강조하는 왜곡이 보이고 있다. 셋째, 다수의 교과서가 전시체제기를 서술하는데 강제연행에 대한 기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1945년 일본의 패전 전후 재일조선인 관련 기록은 첫째, 일본의 패전과 함께 조선인의 잔류를 기록하는데 귀국지의 혼란을 잔류의 이유로 들고 있다. 둘째, 잔류 조선인의 외국인 취급 상황을 언급하고 일본 국적이 말소된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 IV. 재일조선인 주체의 역사 서술

##### 1. 총론개

1945년 이전부터 일본에 살았던 재일조선인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을 결성했다. 그것이 재일본조선인연맹(이하 조련)이다. 당시 조련은 민족교육<sup>29)</sup>을

통해 정주하는 재일조선인의 구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조련은 1949년 9월 관련 산하 조직인 민청 등 4개 단체와 함께 폭력 단체로 규정되어 해산명령을 받았다.

1950년 4월 조련이 해산된 다음에 조련의 계속 조직으로는 1951년 1월 재일조선민주전선(이하 민전)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이 민전의 발전적 해소 결의가 있게 된다. 이후인 1955년 5월 25일 민전과 조방위가 해산되고 한덕수가 중심이 되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총련)가 나타났다.

현재 일본의 이 총련 산하의 총련계 조선학교의 교과서는 민족의식의 고취와 폭넓은 과학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 그리고 일본에서의 생활과 활동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편성하고자 했다.<sup>30)</sup>

특히 조선학교에서는 국어와 함께 사회과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사의 목적은 5천년이 역사를 공부하여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인다. 초등학교용 교과서에서는 역사적 인물, 문화유산, 한국사의 상식적인 사실을 이야기 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중등학교용에서는 원시시대부터 3·1운동에 이르는 역사를 중요한 사항을 시대별로 취급하고 있고, 고등학교용에서는 사회 역사 발전법칙에 따라 원시, 고대, 중세, 현대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sup>31)</sup>

총련계의 역사교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총련의 역사 교과서 편찬은 핵심 사업의 하나였다고 여겨진다.<sup>32)</sup> 재일조선인총연맹은 조직을 결성한 이후 학우서방을 통해 각종 역사 교과서를 출판하고 있다. 민족교육이 북한 교육의 일환으로, 북한의 방침에 따라 교육의 목적, 방법, 운동이 요구되었다.<sup>33)</sup> 즉 북한의 해외공민으로 ‘귀국’을 전제로 북한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하는 인재교육에 초점을 맞춘 교육내용을 체계화하였다. 특히 1957년 4월부터 북한이 보낸 교육원조비는 교과서 출판 사업에 물적 기반이 되어, 재일조선인총연맹은 염가의 교과서를 공급해 왔다.

1960년대 후반 총련은 주체사상에 따라 교과서도 사상교육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김일성의 역사와 사상을 반복적으로 취급하게 된다.<sup>34)</sup> 이후 1970년대에는 일본의 정세 변화에 따라 재일조선인의 생활에 기반한 교육 내용을 수립하기 위해 교과서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게 된다.<sup>35)</sup>

1983년도부터는 교과서가 개편되어 초중고에서 반복적으로 진행했던 김일성의 역사에 대한 교육이 한번으로 정리되었고,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상식적인 지식이

29) 내용은 필자의 글을 참조(김인덕, 해방 후 재일본조선인연맹의 민족교육과 정체성 - 『조선역사교재초안』과 『어린이 국사』를 통해 -, 『역사교육』 121, 역사교육연구회, 2012.3 ; 김인덕, 「재일조선인 민족교육과 東京朝鮮中學校의 설립 - 『도쿄조선중고급학교10년사』를 중심으로 -, 『숭실사학』 28, 숭실사학회, 2012.6).

30) 『총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2005, 47쪽.

31) 卞喜載·全哲男, 『いま朝鮮學校で-なぜ民族教育か-』, 朝鮮青年社, 1988, 187쪽.

32) 이하의 내용은 필자의 글 참조(김인덕, 「在日朝鮮人總聯合會의 歷史教材 敘述體系에 대한 小考 - 『조선력사』(교급3)를 중심으로 -, 『한일민족문제연구』 14, 2008.6).

33) ウリハツキヨをつづる會, 『朝鮮學校ってどんなところ?』, 社會評論社, 2007, 135쪽.

34) ウリハツキヨをつづる會, 『朝鮮學校ってどんなところ?』, 社會評論社, 2007, 136쪽.

35) 이하의 내용은 필자의 다음의 글을 참조한다(김인덕, 「재일조선인 역사 교육에 대한 연구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미간행 초고).

교수되었다.<sup>36)</sup>

1986년 재일조선인총연맹 제14차 전체대회는 변화하는 환경과 재일조선인 사회의 실정에 부합되게 모든 활동에 있어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다. 교과서 편찬사업도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1995년 완료되었다. 신설된 30개 교과서의 교과서를 비롯하여 123책의 전 교과서가 새롭게 집필되었다. 내용을 물론 집필형식부터 편집방법, 사진과 삽화에 이르기까지 모두 개편되었다. 당시 개편의 포인트는 “민족의 자각과 국제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이었다.<sup>37)</sup>

2003년에는 1995년까지 개편의 후속 조치로 부분적인 개편이 진행되었는데, 일본의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일본의 실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sup>38)</sup>

역사교육과 관련해서 2005년 고등학생용으로 새롭게 『조선력사』(고급3)(학우서방 간행)이 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1995년판과 대동소이를 보이고 있는데, 다소 차별적인 내용은 원시·고대편의 제2장 ‘노예소유자사회’가 ‘노예소유자사회와 고대국가’로 서술한 부분과 근대편의 제1장 제목에서 ‘구미자본주의’라는 표현에 대신해서 ‘유미자본주의’로 기술하고 있는 부분 정도이다.

그런가 하면 총련계 중학생이 보는 『조선력사』(중급3)(학우서방, 2006)도 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10. 1920년대 민족해방투쟁/ 11. 1930년대 민족해방투쟁의 발전/ 12. 조국광복/ 13. 1920년대-1940년대 전반기 문화”로 목차가 구성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 서술 편재 상으로 볼 때, 10장과 11장, 그리고 12장의 마지막 절에 재일조선인의 생활과 투쟁의 내용을 배치하여, 1920·30·40년대 재일조선인의 삶을 상술하고 있다.<sup>39)</sup>

둘째, 재일조선인에 대한 서술이 생활사 중심이다. 이것은 재일조선인의 삶을 반영한 것으로, 여기에는 주요 반일 조직이 부가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조직을 보면, 조선고학생동우회, 흑도회, 북성회, 일월회,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조선공산당 일본부, 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 ‘전협조선협의회’, ‘코프조선협의회’ 등이다.<sup>40)</sup>

셋째, 만주지역에서의 1930·40년대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해 많은 양을 할애하고 반일투쟁의 중심에서 김일성을 서술하고 있다.<sup>41)</sup> 김일성 중심으로 근현대사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일성 본인과 가계 관련 각종 사진이 절대 다수 실려 있다.

넷째, 근현대사 관련 인물을 새로이 선정하여 교과서의 성격을 전면 개편했다. 독립운동가, 문화인, 학자, 운동선수의 이름을 적기하고 있다. 이밖에도 ‘식민지배자’들인 일본 총독 사이토 마코토, 미나미 지로, 그리고 ‘친일조선인’도 실려 있다.

36) 會, 『朝鮮學校ってどんなところ?』, 社會評論社, 2007, 137쪽.

37) ウリハツキヨをつづる會, 『朝鮮學校ってどんなところ?』, 社會評論社, 2007, 138쪽.

38) ウリハツキヨをつづる會, 『朝鮮學校ってどんなところ?』, 社會評論社, 2007, 139쪽.

39) 『조선력사』(중급3)(학우서방, 2006), 2쪽.

40) 『조선력사』(중급3)(학우서방, 2006), 39~41쪽, 90~91쪽.

41) 『조선력사』(중급3)(학우서방, 2006), 42~115쪽.

【표 3】 2006년도 간행 『조선력사』(중급3)(학우서방)의 주요 인물

활동 영역	주요 인물
독립운동가	이동휘, 안창호, 여운형, 홍명희, 김구, 이봉창, 김무정, 김원봉, 박열 등
문화인	작가 : 한용운, 이기영, 한설야, 김사랑, 윤동주, 강경애,
	작곡가 : 홍난파/ 영화감독 : 나운규/ 무용가 : 최승희/
학자	역사학자 : 정인보, 백남운/ 언어학자 : 이극로/ 과학자 : 이승기
운동선수	손기정

다섯째, 친일 단체로 협화회<sup>42)</sup>와 강제연행<sup>43)</sup>에 대해 상술하여, 교과서 상의 서술의 합리성을 확보했다. 기존의 교재가 부분적으로 밖에 서술하지 못해 사실의 내용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을 극복하고 있다.

대체로 특히 총련의 교과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북한의 지침을 그대로 수용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의 내용을 보면 침삭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2. 민단계

1946년 10월 3일 일본 日比谷公會堂에서 218명의 대의원과 2천명의 재일조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이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1949년 1월 주일한국대표부가 설치됨에 따라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이하 민단)이 되었다. 1994년 그 명칭이 ‘거류’라는 두 글자가 빠졌고 현재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 변경되었다.

민단계로 최근에는 분류되는 건국학교에 재직했던 김충일에 의해 1978년 6월판 『國史』책이 초등학교용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졌다. 서울서점에서 만든 이 책은 1978년 6학년의 『國史』책을 편집·번역한 책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한국의 역사 교과서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민족과 역사의 시작/ 2. 삼국과 민족의 통일/ 3. 민족국가의 형성/
4. 민족국가의 발전/ 5. 조선후기의 사회와 문화/ 6. 근대화への 길/
7. 대한민국의 발전 등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민단계의 교과서 『역사 교과서 재일 코리언의 역사』(明石書店, 2006)<sup>44)</sup>가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산하의 중앙민족교육위원회가 주도하여 만들었다.

42) 『 (중급3)(학우서방, 2006), 90쪽.

43) 『조선력사』(중급3)(학우서방, 2006), 108~111쪽.

44) 다음의 책으로 번역되었다(신준수 외역, 『역사교과서 재일 한국인의 역사』, 역사넷, 2007).

2005년 연말에는 大阪韓國會館에서 집필자들이 직접 교과서 작성을 위한 연속 강좌인 ‘재일의 역사(在日の歴史)’를 네 번에 걸쳐 열기도 했다.

2006년 간행된 『역사 교과서 재일 코리언의 역사』는 내용이 크게 둘로 나뉘어 있는데, 해방 전과 해방 후의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사회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처음 만들어진 대중적인 재일조선인사인 본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sup>45)</sup> 첫째, 강연에 기초하여 책의 구성이 분절적이다. 학계의 연구 성과와 의견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주요 테마에만 주목한 경향이 있다. 전진의 역사에 있어서는 2·8독립운동, 강제연행 등에 대해서는 학계의 연구 성과가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일제시대 재일조선인 운동사의 부분, 특히 1920·30년대 운동의 내용과 재일조선인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 적극적으로 서술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셋째, 국내의 움직임과 연동한 서술이 아쉽다. 재일조선인의 역사가 우리 역사임을 감안한다면 보다 사실적인 국내의 상황을 동시에 서술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사를 서술할 때 재일조선인들 자신에 대한 시점, 다양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 대일본 사회를 상대로 한 민족적 차별과 권리 옹호를 위한 운동에 대한 서술, 그리고 국내 정치지형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모습 등에 대한 서술이 확인되지 않는다.

## V. 맺음말

在日は 현재이고 미래이다. 이 재일은 과거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의 在日, 즉 자이니치, 재일조선인에 대한 서술은 기본적으로 한국사와 일본사적인 서술 태도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재일조선인에 대한 학문 각 분야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는 데는 다음의 요소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재일조선인을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해야 한다. 재일조선인 연구의 요점은 현재성을 역사성에서 주목하는 것이다. 특히 역사성과 함께 재일조선인은 현재 일본 사회의 고립적인 존재라는 사실과 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이 존재의 제한적인 요소이지만 역사성에 근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일조선인을 이해하는데 중층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현재성을 주목하더라도 재일조선인의 경우 식민지 경험에 기초한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제국-식민이라는 구도 속의 식민지민으로서의 그들의 경험을 현실의 사회적 존재라는 체험적 상황, 그리고 지금도 다중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사실 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45) , 『역사 교과서 재일 한국인의 역사』읽기, 신준수 외역, 『역사교과서 재일 한국인의 역사』, 역사넷, 2007, 16~26쪽.

셋째, 공간적 제한 속에서 존재하는 재일조선인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일본 사회는 사회병리학적으로 볼 때 공간적 폐쇄성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폐쇄적인 공간이 바로 재일조선인이 차지하는 공간의 일부인 것도 사실이다.

현재 재일조선인이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는 총련계(『조선력사』(중급3)(학우서방, 2006))와 민단계(『역사 교과서 재일 코리언의 역사』(明石書店, 2006))의 교과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총련계의 교재는 기본적인 관점이 북한의 역사관에 입각해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서술의 객관성이 떨어진다. 또한 일본 내 재일조선인의 삶을 운동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제한성을 확인하게 한다. 동시에 민단계가 제작한 교재도 문제가 있다. 책의 구성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학계의 연구가 거의 반영치 않고 있다. 따라서 주요 테마에만 주목했다. 재일조선인의 역사가 한국사 내지는 일본사, 국제관계사라는 고려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과서는 현재 在日, 자이니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지금 그대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면에서 먼저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와 동시에 동아시아 공동체 속의 역사의 일부라는 관점에 설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과연 이런 관점을 견지하려고 했는지 의문이다. 동시에 한국 교과서는 일본 이주, 2·8독립선언과 3·1운동, 이봉창 의거, 관동대지진, 강제연행 등에만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서술이 적극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본의 교과서는 일제시대 재일조선인(사)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관동대지진에만 서술을 국한하고 있는 경향성이 보인다. 일제시대에도 일본 사회 속에서 다양한 재일조선인이 존재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 정부의 기록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 문제는 일본의 민중생활과 운동을 거론할 때 최근의 연구가 반영된 서술은 아직도 아쉬움이 많은 점이다.

<토론문>

**김인덕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서술의 변화」에 대한 토론문**

성주현(경기대학교)

1982년 6월 이래 한국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외교문제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왜곡된 일본 역사교과서 시정을 위한 노력이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역사학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학술회의를 꾸준히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상당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더욱 자신들이 저질렀던 추한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를 후대에까지 가르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김인덕 선생이 발표한 논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서술의 변화-재일조선인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라는 글은 발표한 김인덕 선생은 이미 일본 역사교과서를 심층 분석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관련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글을 남긴 전문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오늘 발표한 글은 일본 역사교과서의 내용 중 일제시기 서술의 요점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재일조선인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별로, 그리고 최근에 발행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분석하였다. 나아가 그동안 별로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던 총련계의 역사교과서인 『조선력사』와 민단계로 분류되고 있는 건국학교의 교과서인 『국사』, 그리고 민단계의 교과서 『역사교과서 재일코리안의 역사』에 대한 서술과 문제점, 나아가 앞으로의 전망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논평자는 김인덕 선생의 발표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음을 표하고자 한다. 다만 논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한편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일본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일본 역사교과서의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는 점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둘째는 본 발표문은 일제시기 ‘재일조선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대부분의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일제시기 재일조선인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만 매우 소량에 불과하다. 즉 ‘관동대지진’과 ‘국민의 동원’ 등의 소재목 아래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그마저도 발표자의 표현대로 ‘은폐하고 축소’하였다. 그렇다면 이들 외에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재일조선인의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

야 하는지 알고 싶다.

셋째는 총련계와 민단계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분석이 너무 소략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분석한 글이 있지만 본 발표문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목차만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어 좀 아쉽다는 점이다. 적어도 '도표'를 통해서라고 내용을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혹 한두 가지 사례를 들어 총련계와 민단계의 역사 서술의 차이점을 밝혀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표2>의 경우 2011년판 일본 주요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재일조선인 관련 서술을 그 이전 판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였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고 좀 과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교과서별 역사 서술의 차별성에 대한 분석도 함께 다루었으면 한다.